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42
4	讲义	91
5	퀴즈	126
6	보고서	130
7	자료	132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대담형 강좌이다. 대담에 참여한 다섯 분은 2021년 연말에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출간한 책,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의 공동 저자들로 제도, 시장, 노동, 통상, 인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혁신의 방향을 진솔하게 제시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장기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단기간에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성과와 그 과정에서 축적된 문제점을 이해한다.
- (2) 현 시점 한국경제의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를 높이고, 장기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들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학습한다.
- (3) 한국경제의 혁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과 전망에 대한 수강생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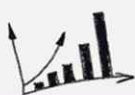
이 강좌는 우선 현재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 시장, 노동, 통상, 인구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경제를 알기 쉽게 진단하고, 문제점과 함께 관련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경제성장이 왜 필요하고, 성장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거나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 문제가 단순히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라는 인간 삶의 공간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혁신의 시작
2주차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3주차	노동시장의 신중한 혁신
4주차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
5주차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
6주차	혁신의 시작, 나머지 이야기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6

주차

혁신의 시작, 나머지 이야기들

6-1

혁신의 시작,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남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배석만입니다.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 학술확산 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대담형 특별 강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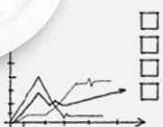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시는 여덟 분의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정책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지난 5강에 걸쳐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 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강좌를 6강으로 구성하여 아쉽게도 직접 필자이신 교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혁신의 시작』책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 이번 강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거시경제정책, 산업, 기업, 금융을 키워드로 한 혁신에 대한 조망입니다. 강의 말미에는 이 책을 읽은 독자 중 한 분을 모시고 책에 대한 생각, 감상 등을 짚막한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정리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강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강에서는 『혁신의 시작』책의 기획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대표자이신 김병연 교수님께서 ‘혁신’을 키워드로 한국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된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혁신’을 키워드로 가졌던 문제의식은 현시점 한국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단기간 빠르게 성장한 대가로 그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편, 잇따른 정책 실패와 미·중 갈등과 신보호주의라는 외부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돌발 변수이기는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당장에 치솟고 있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등은 1970년대 전 세계가 공통받았던 석유 위기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전망까지, 온통 어두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 도전을 뿌리치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이 공동작업을 추진하게 된 시발점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혁신의 시작』 책의 부제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청사진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강에서 주병기 교수님은 ‘공정’을 키워드로 혁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경험했던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불평등도가 낮고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 경제개발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증된 사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진 나라가 경제성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정은 그 자체로 혁신보다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 경제발전,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분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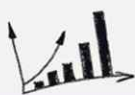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현재 한국경제가 약탈적 자본주의(predatory capitalism)라고까지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소득 격차, 성차별, 능력주의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의 실태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해결책으로 교육, 그리고 창업 취업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를 역설하셨습니다.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 강화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명문대들이 이런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대학과 사회, 경제가 같이 발전하는 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업, 취업의 계층사다리 기능 강화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평범한 일반생도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되는 시대가 일반화되는 한편으로 기업도 전통적인 학력이나 학벌로 유능한 인재를 뽑는, 판에 박힌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졸 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취업에서 발생하는 계층 및 지역 간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업의 성공 사다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3강에서는 이정민 교수님께서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혁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인적자본이 생산되고 적재적소에 배분되는 곳인데,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렇게 볼 때 그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질 높은 대중교육의 성공이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근본적인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는 혁신을 위한 아주 뛰어난 인재,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혁신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도 역설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이슈 중 하나인 여성 경력단절을 설명하셨는데, 정책 대응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학력·고소득 전문직 여성과 저임금·저숙련 여성의 경우 필요한 정책 지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경우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각각의 환경에 맞게 보육 기관이나 서비스 등 여성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임금 불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 결과를 두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인상적입니다.

4강은 혁신을 위한 인구문제를 주제로 저명한 인구학자이신 이철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이미 직면한 한국경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지속적 성장을 이룩해 낼 것인가에 대해 흥미로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한국의 총 인구 수가 머지않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통계수치만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어날 인구구조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구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고령인구에 비해 현재의 30대~40대인 미래 고령인구는 고학력 비중이 높고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문제의 대책은 고학력의 더 건강한 고령층, 다시 말해 '새로운 노인층'을 전제로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그런 우려가 과대하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은 노동인구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 노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대책은 줄어든 청년 노동인구가 과거 수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육이 노동시장 밖에서 대학교육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의 경직적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융합이나 새로운 학문 분야 개설 등 대학교육 시스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노동시장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 이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배치하는 등, 줄어든 신규 취업 인력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인구의 절대 감소보다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먼저 신경을 써야 하고, 여성 노동과 외국인 노동의 효율적 공급이 필요함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5강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하여 통상 문제를 박지형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상징되는 과거 한국의 대외 지향적 경제 발전의 성과와 한계부터 짚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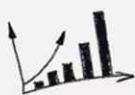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교수님은 한국경제는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대외 지향적 경제정책, 기업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을 통해 넘어서고 발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혁신과 그 미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외 지향성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당면 과제는 이러한 대외 지향적 한국경제의 장점은 강화하며 그 단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잘 유지하고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의 경우 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해 협정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도 주문하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교수님은 중요한 건 "미국이나 중국이냐"가 아니고, 자유무역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원칙에 기반한(Rule based)'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중장기적 통상 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다자주의 국제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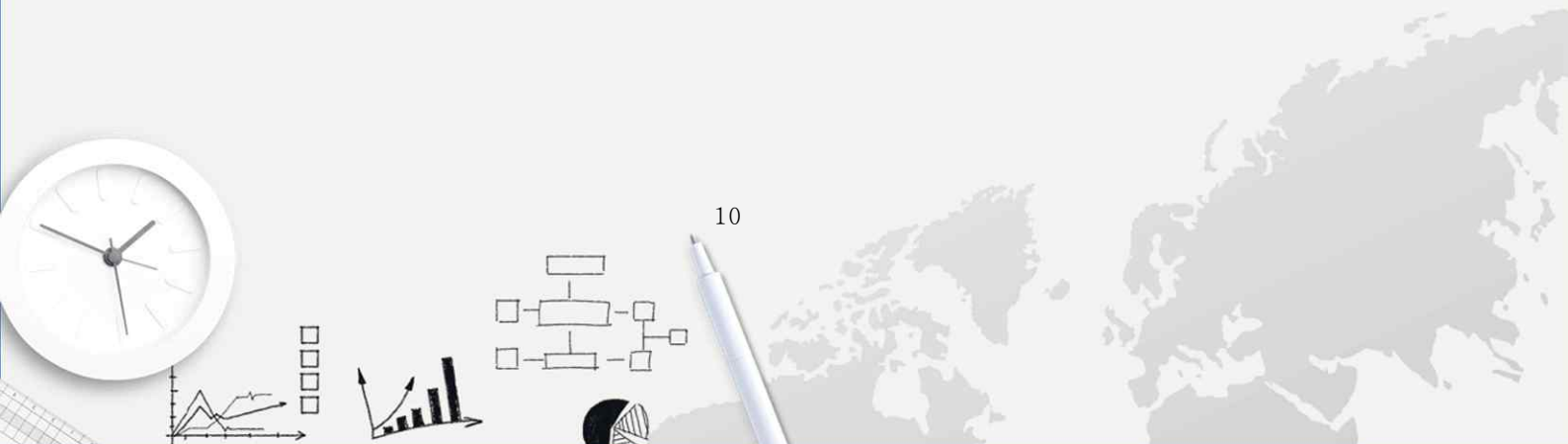
이것은 국익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중장기적 무역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자의적인 행동에도 반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개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했습니다. 『혁신의 시작』 책의 기획 의도를 말씀하신 김병연 교수님을 제외하면, 사회, 노동, 인구, 통상에서 어떻게 혁신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해당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쉽게도 직접 필자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지 못한 『혁신의 시작』 책의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선 김소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경제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2

혁신 성장과 거시경제정책

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시작』 책에서 김소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혁신 성장과 거시경제정책'입니다. 장기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거시경제정책의 혁신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성장 전망과 직면해 있는 리스크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 경제성장의 단기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한국 경제는 2%대 성장 추세로 회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부양정책의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3년부터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위축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급증한 정부 부채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도 급증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비기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구조 조정하는 문제 역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물가 급등이 겹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다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된다면, 공급 비용, 즉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공급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정상화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그동안 경제 각 부문에 쌓인 부채 등의 정상화 및 구조조정 관련 리스크가 클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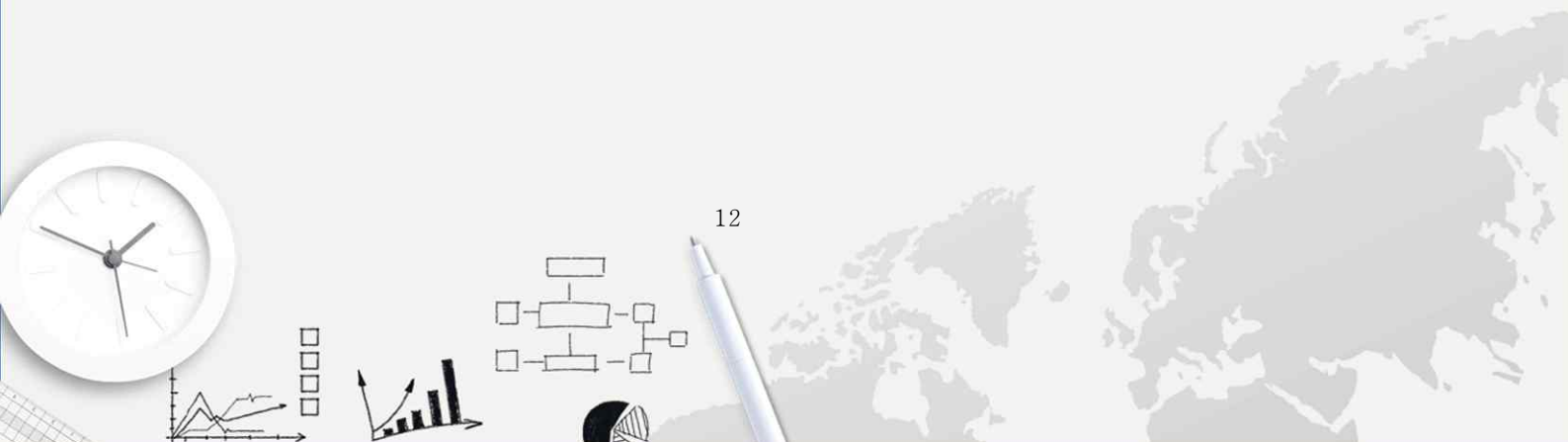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급증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증가 속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늘어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좀비기업의 구조조정도 해야 합니다.

즉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부문을 경제 정상화 이후에 어떻게 구조조정해서 신산업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것입니다. 산업조정뿐 아니라 조정대상 산업 종사자들을 좋은 산업, 신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활히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이어졌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0.9% 포인트로 1% 포인트 이내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본과 노동력을 쏟아부어도 장기 성장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경험하는 저성장은 한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국가의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초기에는 공장 건설 등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는 기존에 없던 공장이 생겨나면서 생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장 건설의 효과가 크고 성장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후 자본 축적이 점점 진행되면서 성장 속도는 점차 느려집니다. 한계생산 체감입니다. 이미 공장이 많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공장을 건설해도 그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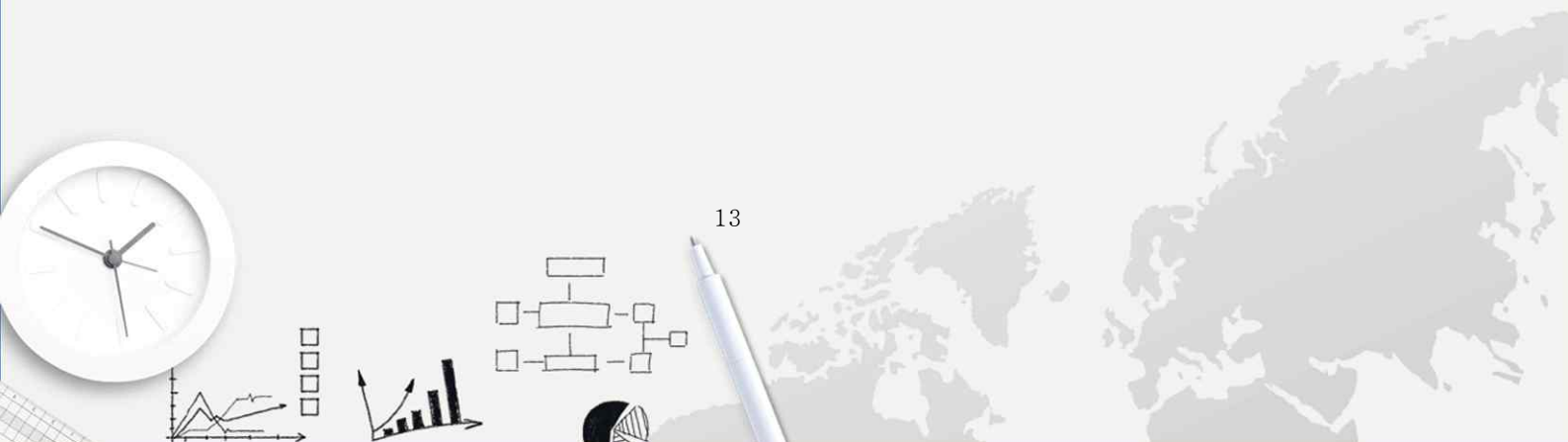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를 막으려면 자본의 축적만으로는 어렵고, 결국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서 발전되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도 저성장을 막으려면 기술발전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즉 근본적인 저성장 대책은 기술혁신과 발전,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 경제에서 기술혁신과 기술발전은 주로 민간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음도 강조합니다. 정부 주도로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혁신과 기술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규제 철폐와 생산성 확대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시장경제를 많이 활용해야 하며, 정부 주도로 물량 공세를 펴서는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경제의 단기 전망은 물론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금리 상승을 용인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3%로 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며, 국민들도 향후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게 보면 기준 금리가 올라야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꽤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저술된 것을 생각하면 2022년 현재 기준 금리의 상황은 교수님의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산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한국의 자산시장이 ‘버블’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명확한 사실은 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기업 도산 등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면 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2021년 시점입니다만, 주식시장의 경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팽배한데, 문제는 앞으로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결국 국민들도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전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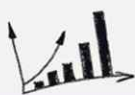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추가 공급이 거의 없고, 수요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은 적고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게다가 집값 안정화가 능사는 아님을 지적합니다. 집값이 안정화되더라도 국민들이 세금 부담과 근거 없는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을 소유한 사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격안정화가 그러한 목표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논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과의 조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주요 차이점은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재정정책은 부문별 집행이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비대칭적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버틸만한 것에 비해, 대면 서비스업 등 특정 부문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경제 회복 흐름에 맞춰 정상화 수순, 다시 말해 금리 인상으로 가되, 부문별로 회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재정정책을 쓰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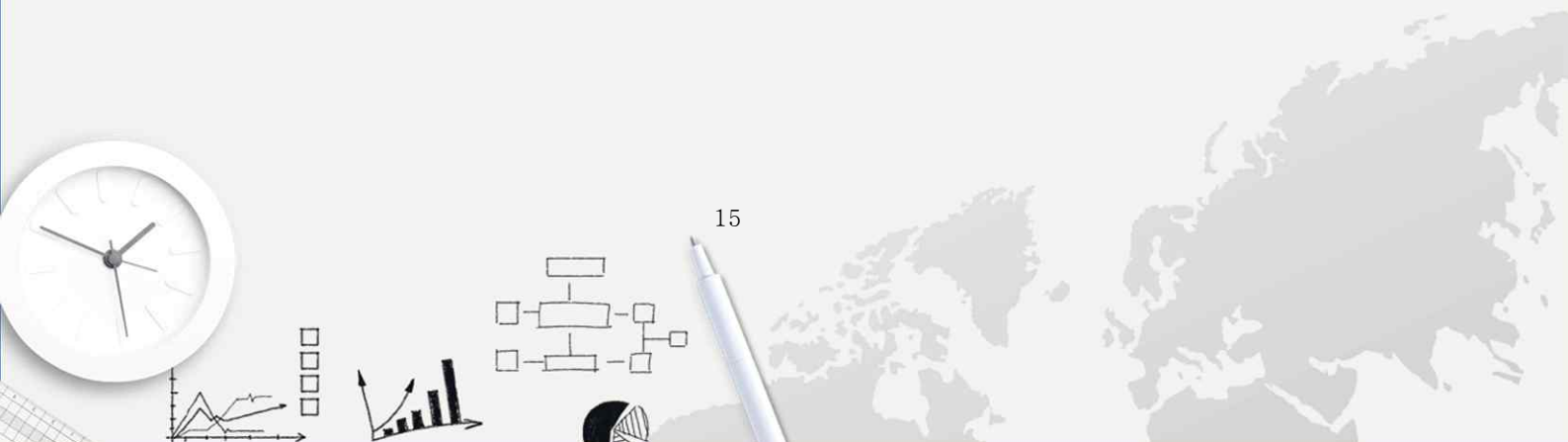
반대로 전체 경제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이 과다하게 확장되어 긴축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정책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첫 번째로 전 국민을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상황이 워낙 어려웠고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누구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 국민 지원은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한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승수효과도 0.3 정도여서,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면 실제 경제 활성화에는 30만 원밖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타격이 집중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은의 국채 매입과 증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정부가 쓰는 돈을 통화를 찍어 조달한다는 것으로, 당장 한은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만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거나 경제를 건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정 운용 역시 방만해질 수 있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서 방만하게 쓴 국가들은 대부분 '하이퍼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통제를 벗어난 급속도의 물가 상승이나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근본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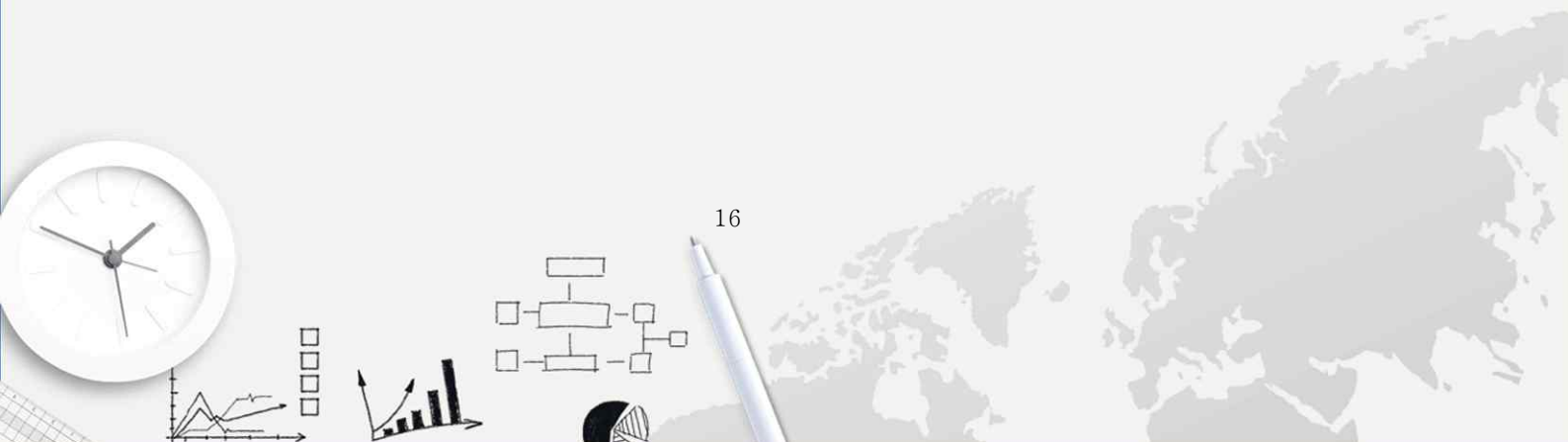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에서 MMT 즉 현대통화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MMT는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MMT는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벌써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MMT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나랏돈 쓰기를 원하고, 돈을 계속 쓰면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큰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증세와 관련해서도 먼저 한국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높은 것이 문제인데 그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만 있다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를 원하면, 이를 공론화하여 국민들과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나 국채 직매입보다는 재정 효율성 제고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지출하는데 “경기도 부양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지역도 살릴 수 있으니 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은 대부분 한 가지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비용 지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잡은 후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거시경제정책을 혁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거시경제정책은 분배를 강조하다가 역효과가 나서 성장으로 갔고, 성장으로 가다가 부작용이 나서 다시 분배로 가는 흐름이 반복되어왔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성장과 분배 모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부문에서는 규제를 개혁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해 역동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을 통한 선도형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배 부문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회 자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여 양극화에 따른 불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시작』 책에서 김소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근 교수님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3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

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시작』 책에서 이근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 산업의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2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입니다. 장기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 산업계의 혁신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하는 것은 달라진 국제경제 질서입니다. 향후 국제정세는 G2 즉, 미국과 중국 양강의 장기간에 걸친 공존과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것이 글로벌 가치사슬, 이른바 'GVC'의 블록화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전면적 디커플링,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완전한 경제적 분리보다는 미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미국 중심의 GVC가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분적인 디커플링, 소수 국가와 기업 간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짐은 2022년 현재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블록화는 산업별로 그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드론, 풍력발전,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등에서 글로벌 선두권의 경쟁력을 구축한 상태로, 이러한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 질서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서구권의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격을 완성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합니다.





물론 중국은 서방의 선진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술 경로로 추격을 해올 것이지만, 기존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그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아마도 이를 달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에 대해 중국은 반중 전선의 확대로 몸을 사리는 가운데, 앞으로 미·중 양국 간 공존 속 경쟁이라는 새 질서에 동의하며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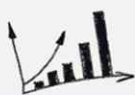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이 경우 한국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고 기존의 주력 제조업 활동을 해나가면서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10년 안팎의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블록화된 GVC 구축은 과거 자유무역에 비해 비효율적인 체제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국 내 생산설비가 과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생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한국과 대만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선진국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등 서방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반도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서의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독과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믿음을 준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자국 내 생산설비 구축 등의 움직임이 약화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블록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 산업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몇 가지 해법은 리쇼어링(reshoring)과 대기업·중소기업 역량 공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혁신체계 전환입니다.

우선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미·중 갈등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매력력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도 매력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도 기회라고 봅니다. 공급사슬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업들이 중국 외에 공장을 지을 곳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화도 한국의 리쇼어링 촉진에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여러 요인 중 높은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기회들이 촉발한 다양한 유형의 리쇼어링 사례도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이 사례로 거론됩니다.

첫째 유형은 노동 집약적인 제품 생산기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것으로 자동차용 전류를 공급하는 전선 묶음인 '와이어링 하니스' 사례와 차 부품업체인 THN이나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화 등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 공정의 단순화가 리쇼어링의 계기가 되는 것이 둘째 유형인데, 2020년에 필리핀 마닐라 공장을 청산하고 경북 김천산업단지에 6만 6,000㎡ 부지의 컬러강판 생산 공장을 준공한 아주스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해외 가공·부품 및 국내 조립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던 생산 단계를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든 진단키트업체인 솔젠트 같은 회사의 경우입니다. 그밖에 의류업체 G&G와 아웃도어브랜드 트랙스타 등도 대규모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화를 통한 리쇼어링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쇼어링 사례가 더 많아지도록 하려면 한국의 높은 노동 비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및 조세감면이 필요함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의 리쇼어링 사례 수가 증가된 데에는 정부 유인책이 더 강화되고 유연해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리쇼어링을 촉진하려면 금융 지원과 더불어 정부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역량 공유는 한국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나라 중 하나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이익 공유보다는 역량의 공유라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직접적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공유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빠른시간 안에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진단 키트업체 솔젠트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앞서 언급한 리쇼어링과 대기업·중소기업 역량 공유에 대해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묶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유형의 지원을 시작하여 2021년 8월에 '2021년 공정·품질 기술개발 과제'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지만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쇼어링 본격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인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역량 공유 차원에서 대기업 또는 공공 연구소 등이 함께 나서서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혁신체계 전환은 한국경제의 기회이자 도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한국의 경우, 현재의 IT와 같이 사이클이 짧은 단주기 기술 중심에서 바이오와 같은 사이클이 긴 기술, 다시 말해 '장주기 기술'에 기반한 산업 중심으로 국가혁신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주기 산업은 중국과 같은 후발자에게 추격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이기에, 진입 장벽이 높고 추격당하기 어려운 장주기 산업으로 이행해야 오래 버티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선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것이 새로운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산업 분야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술의 융복합도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한국의 기존 강점인 IT 기술과 다른 분야 기술이 접목하여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 특정 분야나 제품 차원을 넘어서는 서비스업, 또는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로 확장 및 진화하는 등 다양한 횡적 제휴와 연결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별산업 중에서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 사례로는 조선업을 들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한국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기계산업인데, 최근 IT 기술과 결합되면서 조선업 부문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초격차산업으로 발돋움한 스마트 선박이 대표적인데, 스마트 선박이란 선박 내 모든 설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선박으로 조선 기술에 자율운항 제어시스템, 선박 자동식별 장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선박 원격 제어 같은 최첨단 정보 기술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기계산업이 전자 산업화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쌍둥이 공간을 만드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스마트십 솔루션, 전기추진시스템 설계기술 등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계의 핵심 화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화, 즉 합종연횡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산업과 기업은 이제 종적 통합을 넘어서 '업(業)'의 경계를 넘나드는 횡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내부 자원에 의존하는 유기적 성장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융복합 등을 위해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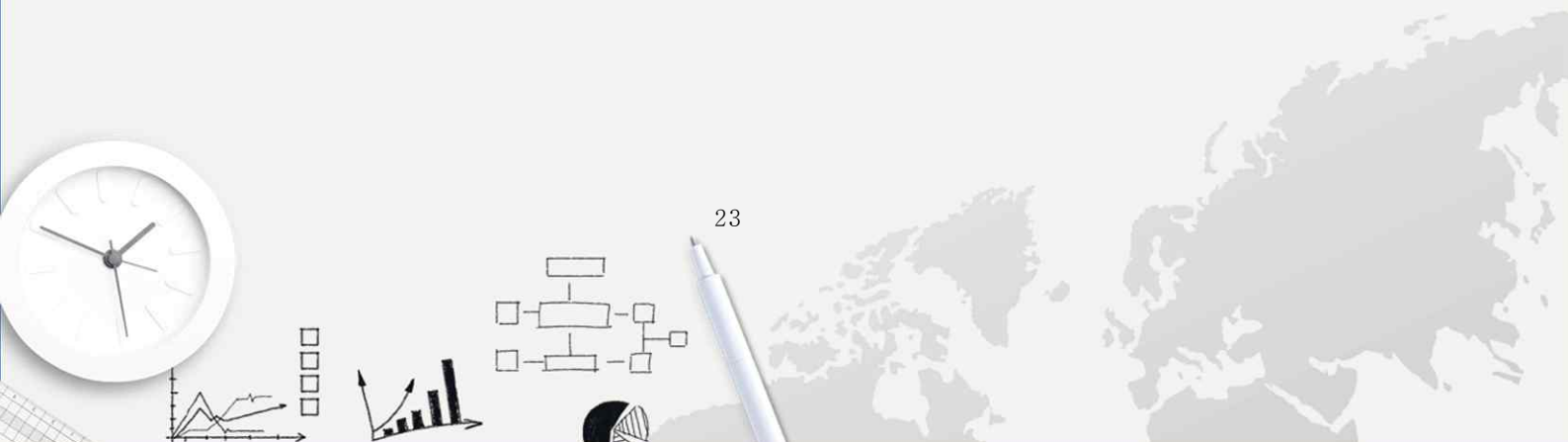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종횡무진형 '빅블러(big blur)'를 지향하는 선도 기업은 '목표시장 진입→성장 →확대'의 전통적인 선형적 성장모델을 지양하고, 대신 다양한 영역에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 간 재조합과 재구성에서 새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 사례로 카카오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문어발이라 불린 한국의 대기업 집단과 달리 카카오는 기업 집단이지만 데이터로 연결된 합종연횡형 기업 집단이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업을 종적, 횡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러한 기업의 합종연횡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인 데이터의 수집, 공유, 거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적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 인프라가 데이터로 연결되면 그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중교통과 금융이 연결된 교통카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장주기 산업의 사례인 제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한국은 이미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인 제네릭 분야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기술혁명을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가 많은 분야다 보니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해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이 미국식품의약국인 FDA에 못지않게 강화돼야 합니다. 식약처의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의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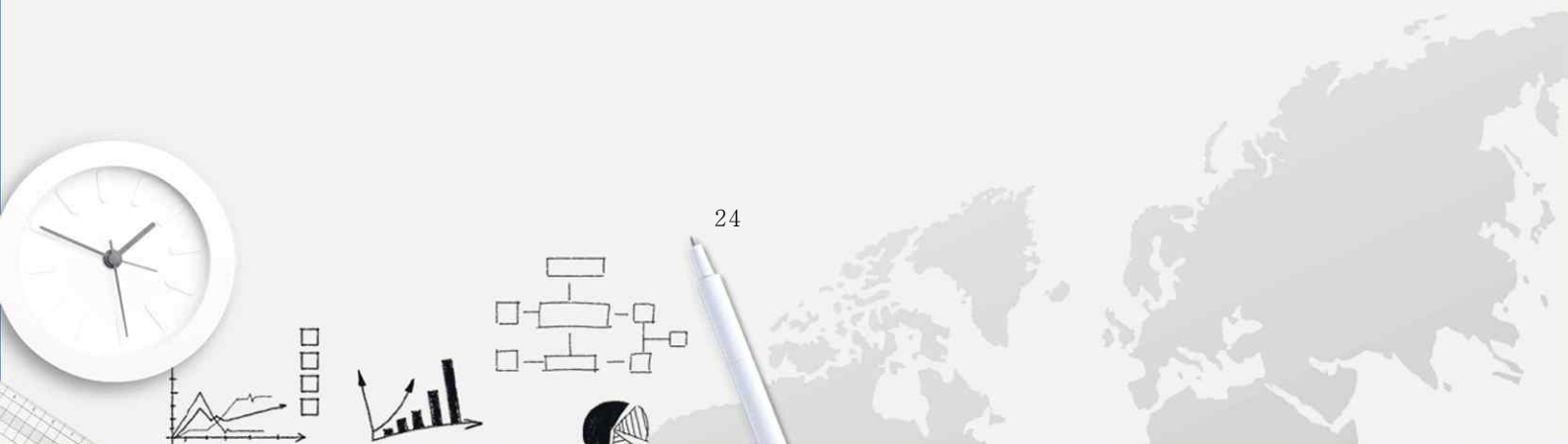




이와 유사한 사례로 특허청을 들 수 있는데, 한국의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세계 5대 특허청인 IP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의 이런 위상과 통계청의 지원, 즉 대기업은 물론 반도체 장비 부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향후 한국 경제와 산업계의 핵심 화두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화', 즉 합종연횡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기업은 이제 종적 통합을 넘어 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횡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시작』책에서 이근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 산업의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상승 교수님의 '기업경쟁에 의한 혁신'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4

기업경쟁에 의한 혁신

이번 시간에는『혁신의 시작』책에서 이상승 교수님이 집필하신 기업을 키워드로 한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기업경쟁에 의한 혁신'입니다. 장기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주체인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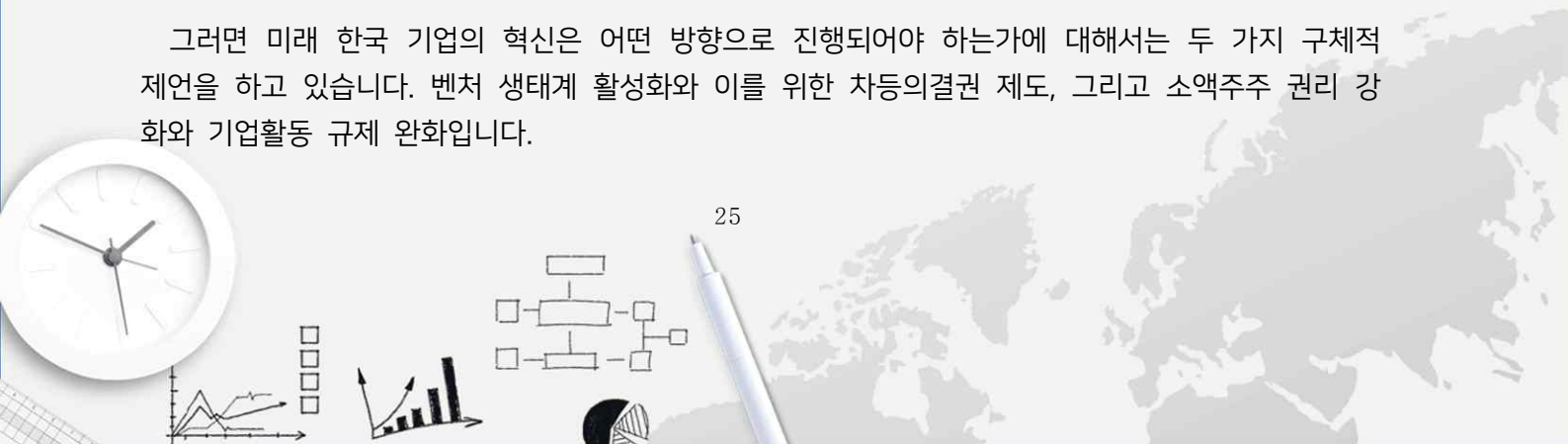
우선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의 역사적인 성장 과정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과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역사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해외 진출을 선택한 기업이 정신의 발휘, 그 이후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기업의 체질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본질은 수익성을 쫓는 조직인 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델로 탈바꿈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현재의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주변의 관련된 사업으로 다각화를 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산그룹 같은 경우 초기 주류업에서 시작해 이후 중공업이라는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두산그룹의 역사는 기업이 기존 사업으로 성장하다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이를 타개하고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예시합니다.

그러면 미래 한국 기업의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체적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이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그리고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활동 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한국 기업의 혁신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삼성과 같은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기업 사이 생산성의 큰 격차에서 발생하는 이중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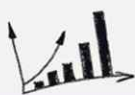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수출 제조업의 경우 같은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연구개발비용과 시설 투자 비용 등 대규모 고정비용을 투자해 얼마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가가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한국의 수출 대기업은 제조업 부문에서 탁월한 경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시장별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소비자 성향 등으로 인해 수출 지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종은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수출 대기업과 내수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내수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들을 보호하려고 규제를 늘리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해온 것입니다.

그 타개책으로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경제에 생겨나고 있는 벤처 열풍과 벤처 생태계의 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내수 위주의 국내 스타트업도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시장에 도전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벤처 기업과 벤처캐피탈, 정부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시장의 토스(toss) 같은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은 이러한 벤처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됐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금융은 국내 서비스업 중 가장 취약한 부문 중 하나로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온갖 규제를 받아왔고,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도 매우 큰 부문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기업들이 과거 윈도우 시절에 액티브 X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기반한 국내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결국 한국의 금융기업들은 보안을 이유로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스는 계좌이체 식의 아이디어로 이러한 규제를 뛰어넘었습니다. 2014년 알토스벤처스의 김한준(Han Kim) 대표가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스타트업의 창업자인 이승건 대표의 아이디어 발표를 듣고, 곧바로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 토스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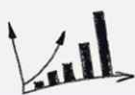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또한 벤처 투자자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언도 해주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2021년 9월에 4,600억 원의 투자를 추가 유치해서, 약 8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금융 규제 당국과 생산적 대화를 통해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했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승건 대표는 금융시장 전반에 혁신적 서비스와 경영 기업을 도입하여, 토스 증권, 토스 은행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기존 금융권 연봉의 1.5배를 주면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한다는 점도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벤처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설립 내지 성장하고, 이를 위한 벤처 생태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도 정비인데, 차등의결권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창업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벤처캐피털로부터의 펀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낮춰 전체 벤처 생태계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회사법에서 회사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분 구조와 의결권 결정을 모두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합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창업자가 누구보다 회사의 수익을 내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신뢰할 경우, 상장 당시 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을 들 수 있는데 구글의 창업주는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들 3인의 구글 창업주는 현재도 67%의 의결권을 유지하면서 회사법과 상법상의 특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글이 사명을 알파벳으로 변경하고, 'A부터 Z까지'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모든 영역에 다 도전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빨리 철수하는 방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주주들이 구글의 창업자에게 절대적인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등의결권은 창업가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등의결권을 받은 창업자라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그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적대적 M&A가 회사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중요한 시장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M&A는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로 부실해진 기업을 걸러내고 개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이 창업자들에게 이런 적대적 M&A에 대응할 방어 무기를 자발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창업가들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이 현행 회사법상 1주 1표 원리에 벗어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순환출자 구조를 구축한 한국의 재벌 등 대기업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은 대개 10~20% 수준이며, 지주회사와 순환출자 피라미드 지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즉 1주 1의결권의 주주 평등은 총수 일가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한국 재벌 구조의 회사법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스타트업에도 창업주에 한해 차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오히려 공정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한국 기업혁신을 위한 제안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강화, 그리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선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는 재벌 총수 일가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이익과 합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는 경영권 장악에 따른 사적 혜택을 스스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총수 일가는 더 이상 경영권 상속이라는 단 하나의 출구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체를 장악하려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벌 오너의 자녀들이 경영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경영권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의사회 의장으로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역할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소액주주 권한의 강화는 총수 일가에게도 여러 대안을 가지고 출구를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 분쟁 발생 시 소송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경영진·지배주주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의 입증을 위해서는 경영진·대주주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개시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미비하여, 민사적 분쟁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다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LG 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액주주나 소비자들이 기업 경영진·지배주주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구제책을 정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형사처벌 축소와 상속제 개혁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은 경쟁과 함께 이루어져 왔으며, 경제의 혁신도 경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기업 정책의 첫 걸음은 바로 기업의 자유로운 수익 추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개혁은 기업가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현재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형사처벌을 축소하고, 대신 소액주주와 고객의 손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민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정책에 있어 현재는 배임 행위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민사 절차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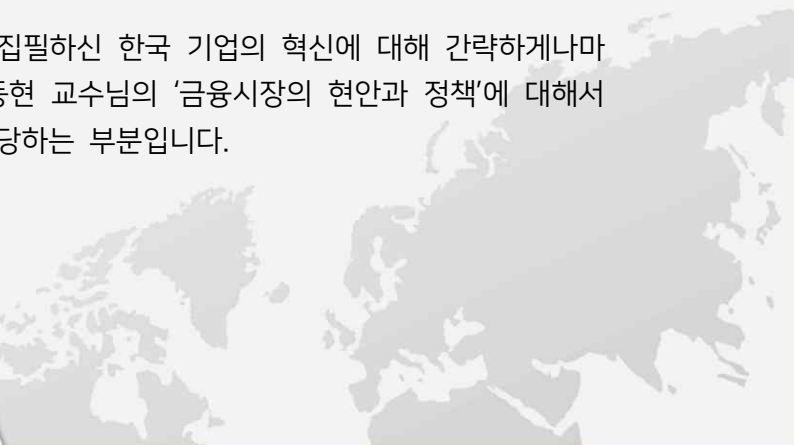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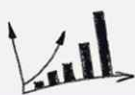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상에는 형사처벌을 유지하되, 나머지 소액주주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및 금전적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고 오너 일가에 대한 부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나면,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 수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한국의 세법에서 경영권 상속에는 최대 50% 상속세율에 30%가 할증돼, 최대 65% 상속세율에 이릅니다.

특히 30% 할증은 과도하다고 보는데, 조세법상으로도 상속하는 재산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정도의 주식 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통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축소하여 무리한 경영권 장악을 통한 사익 추구를 막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후 상속세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수익 추구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혁신의 시작』 책에서 이상승 교수님이 집필하신 한국 기업의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동현 교수님의 '금융시장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6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5

금융시장의 현안과 정책

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시작』 책에서 안동현 교수님이 집필하신 금융을 키워드로 한 혁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6장에 해당하며, 정확한 제목은 '금융시장의 현안과 정책'입니다. 장기지속 가능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주의의 동력인 금융에 있어서 한국의 현안과 혁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부터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급증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까지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다 201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부동산 가격 폭등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이후 갭투자 등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증가하는데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가계부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력한 규제로 인해 향후 20~30%의 자산 가격 하락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전세라는 그림자 금융의 경우는 최근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암묵적 LTV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강통아파트'와 같이 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보면 교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로 자산시장에서 부의 상관계수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가 줄어드는 상황일 때 위험회피도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먼저 줄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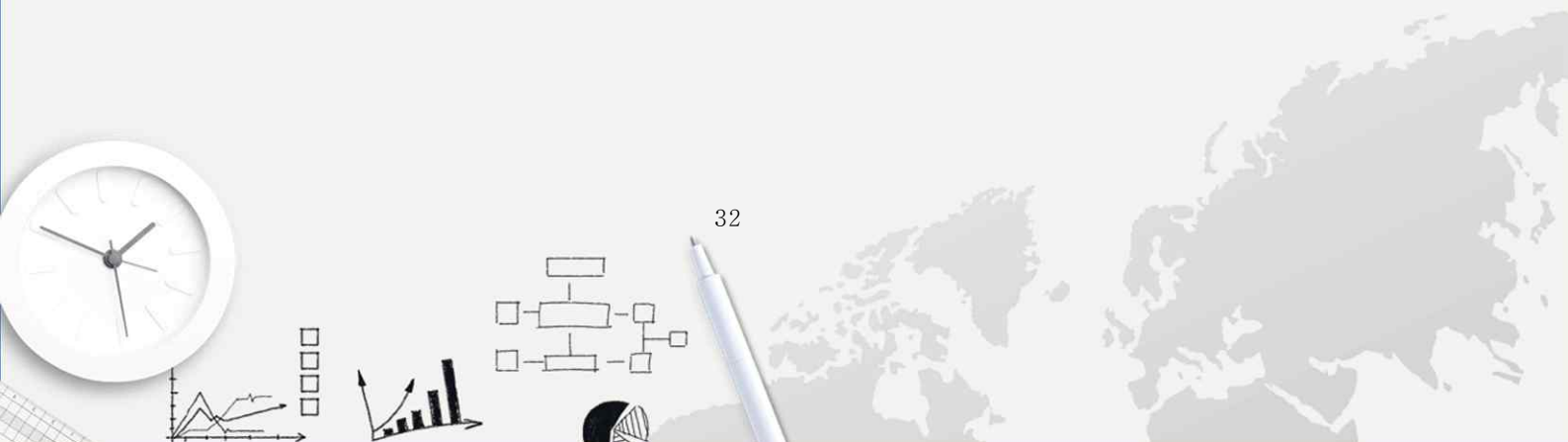
현재 이 책이 나온 2021년 시점입니다만, 자산 가격의 버블 현상은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 등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결국 사회 전반에서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의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가도 같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감소로 인해 소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거시경제 전체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역시 2022년 현시점의 상황을 보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금융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불균형은 싼 금리로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부동산, 주식, 코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거품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의 거품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도 핵심 수단 중의 하나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지하듯이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특히 기업과 관련하여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임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당수 한계기업에 대해 정부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었고, 그 결과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러한 한계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한계기업의 도태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감소의 문제는 새로운 기업이 고용을 흡수하는 형태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며, 특히 금융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앞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X세대에게는 핀테크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디지털 문맹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재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우선 그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공매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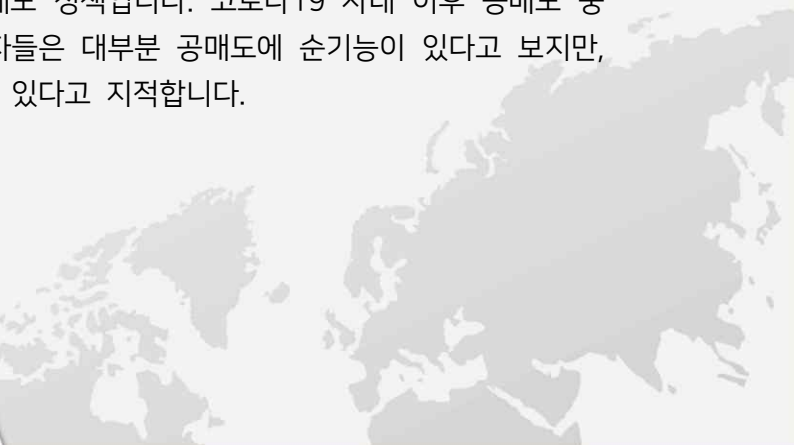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역할이 크게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뉘는데, 문제는 이 두 역할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 금융기관이 운영상 위험 부담을 낮추도록 규제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위험 대출을 줄이게 되어 결국 취약계층에 돈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결국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에 제약을 가하게 되고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상충 문제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청을 만드는 것이나 쌍봉형 운영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조직의 형태보다는 실제 운영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 각각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감독과 정책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얼마나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예측 가능해야 다른 부작용을 줄이고 감독 대상의 행위를 규제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금감원의 눈치를 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관련 정책 제안과 관련한 공매도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 중단과 재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코스닥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 주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등으로 종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는 상장이 아니라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상장까지 기다려야 할 유인이 적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은 상장 유지가 자금 회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이 상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매출이 작은 기업들도 상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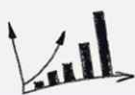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주식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주가 상승 여력이 훼손되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 조작이 쉬워집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 적은 규모의 돈으로도 시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있어도 외국인 거래, 해외 거래를 통한 공매도 시세조종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감독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주체가 일정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에 가까운 현재의 규제 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금융시장 변화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그리고 전통적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의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주조를 통해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를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금처럼 일정 부분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재화는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일입니다. 오일의 기능이 발견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가치가 바뀌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도와 신뢰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해당 재화의 가치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위원회처럼 코인 상장을 제대로 처리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고,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처럼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실시간 분석하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세한 자료가 보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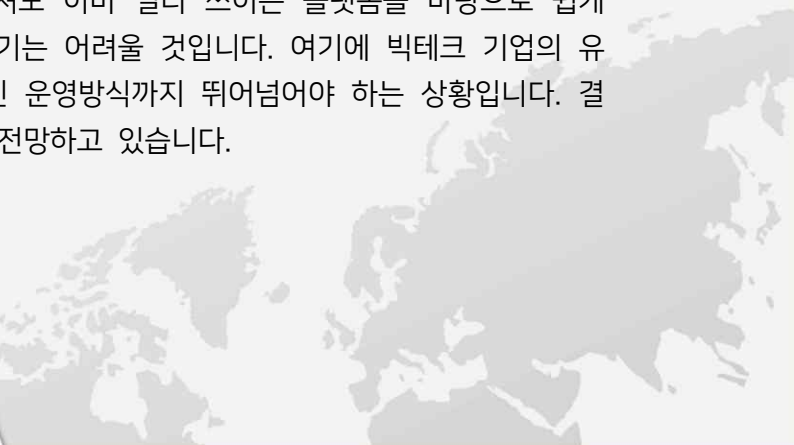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통적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경쟁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전통적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CT 기업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사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카카오의 강점은 ICT 기술로, 기존의 은행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마인드 셋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미 카카오톡을 쓰는데 여기에 금융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접근성과 편리성 면에서 기존 금융사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정책적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했습니다.

한국만큼 은행 규제가 많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의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기존 은행들도 디지털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디지털화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금융위가 앞으로는 기존 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대등한 위치로 보고 수평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이 추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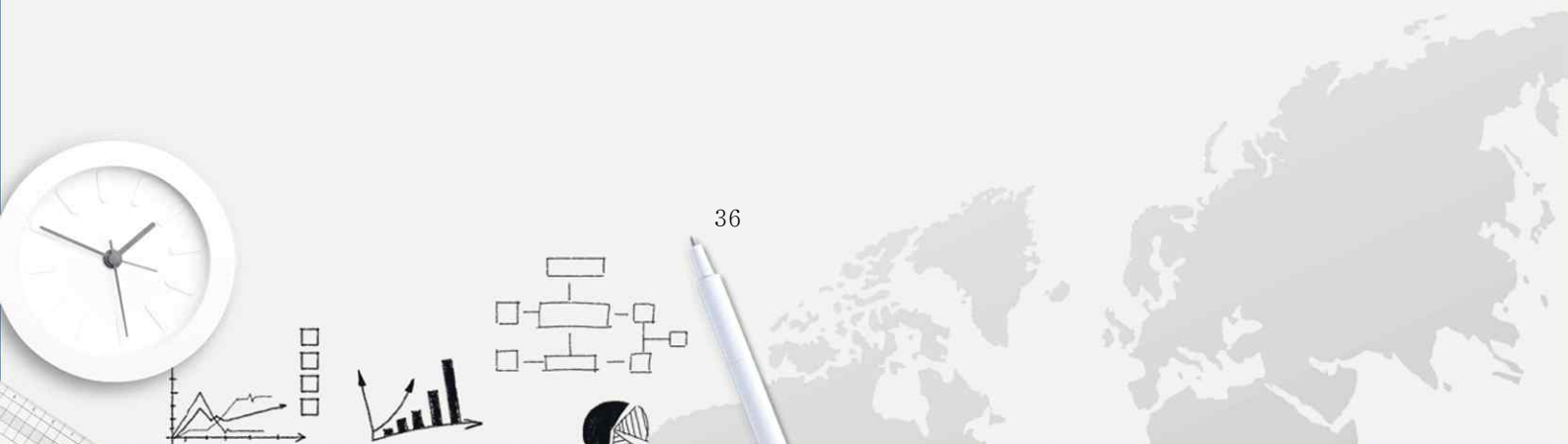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 은행은 아무리 디지털 기반이 강해져도 이미 널리 쓰이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에 쉽게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의 유연한 사고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운영방식까지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 금융사들은 환골탈태해야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자를 직접 모시지 않았던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해 보았습니다.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각 부분에서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수강생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진솔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 책을 읽은 일반 독자 한 분을 모시고, 책과 관련하여 본인이 느꼈던 생각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혁신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생각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6-6

일반 독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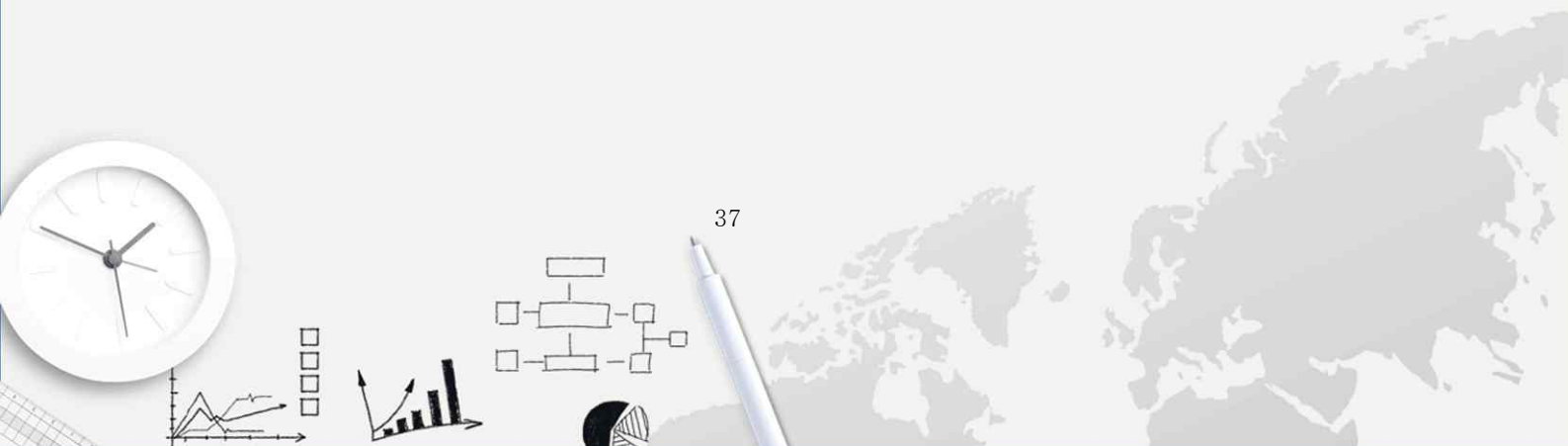
이번 시간은 예고한 바와 같이 이 책을 읽은 일반 독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혁신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생각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솔직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렇게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경제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내셨는데 친구가 읽어보고 괜찮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산 책을 빌려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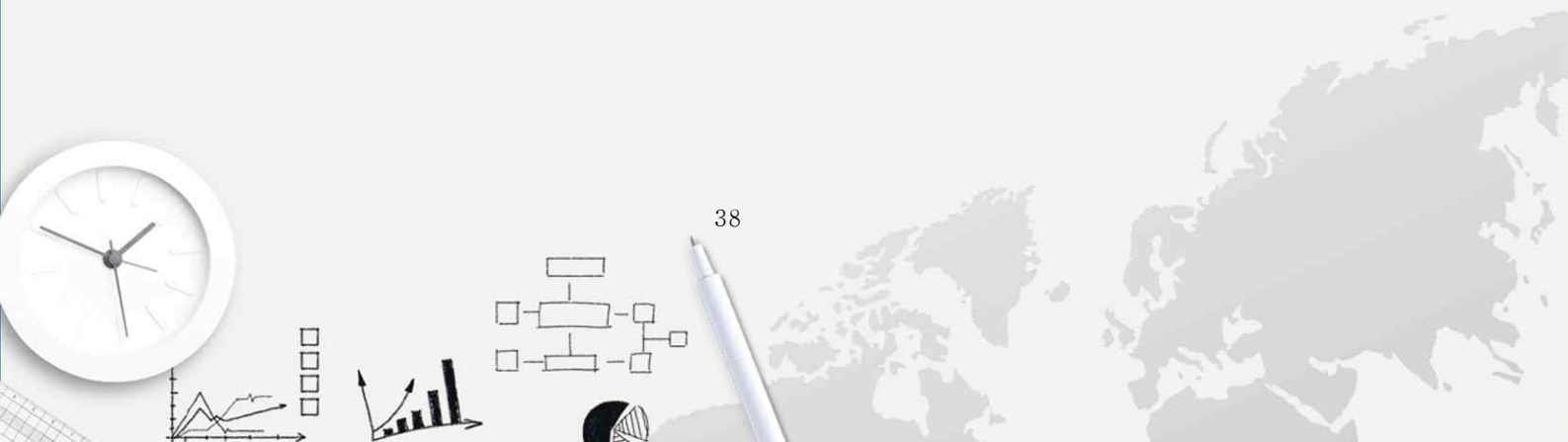
아. 그렇군요. 그럼 책을 읽으신 전반적인 감상은 어떠신가요. 원래 기대했던 대로였나요? 경제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젊은 청년이 일반 독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하네요.

<박기훈>

네. 이 책은 최근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 제 나름대로 궁금해하던 주요 주제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단지 현황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수님들이 본인의 시각에서 매우 선명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비전공자나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책을 내는 경우, 일반 대중이 아닌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글을 쉽게 풀어서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비전공자인 제가 책을 읽는데도 어려운 용어가 많지 않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도표는 심화 노트에 실려있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논지는 심화 노트 이전에 쉬운 말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한 대로 매우 만족한 독서였다고 이해되는데, 읽으신 내용이나 각 필자의 문제의식 중에서 특히 공감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훈>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이라는 글을 쓴 주병기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정'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상당수가 능력주의를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능력주의가 불공정의 온상이 되고 구조적 차별과 기회 불평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은 한국 사회에 부각 되는 이슈이고, 제가 속한 청년 세대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때로는 논쟁을 전개하지만 생산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주병기 교수님은 이런 점을 매우 날카롭게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주의를 내세운 이들은 자신이 '공정'하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심화 노트를 보면, 실제로 한국의 경우, 출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회 불평등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의 불평등이 한국 경제가 혁신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의 부모님 시대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저의 세대에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은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능력주의에서 승리한 결과이며 그것이 곧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교육과 복지에 힘써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라 그런지 공정을 키워드로 하는 혁신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정과 관련된 내용 외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박기훈>

이철희 교수님의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고령 빈곤과 정년 연장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에 대한 서술이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준 것 같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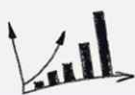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목격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가장 쉽게 찾는 해결책은 외국인력 도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현재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배분이 유지되면,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기는 어렵다고 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것이며,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는 경우,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 인력감소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술하셨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흥미로웠습니다.

저 역시 저출산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노동인구를 좀 더 잘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며, 고학력 장년·노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제안은 대한민국 경제가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책의 증보판을 낸다는 가정하에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나요?

<박기훈>

개인적으로 '공간의 편중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서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회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가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경쟁, 공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서 발생하는 출산을 저하, 지방 소멸과 같은 큰 문제점도 발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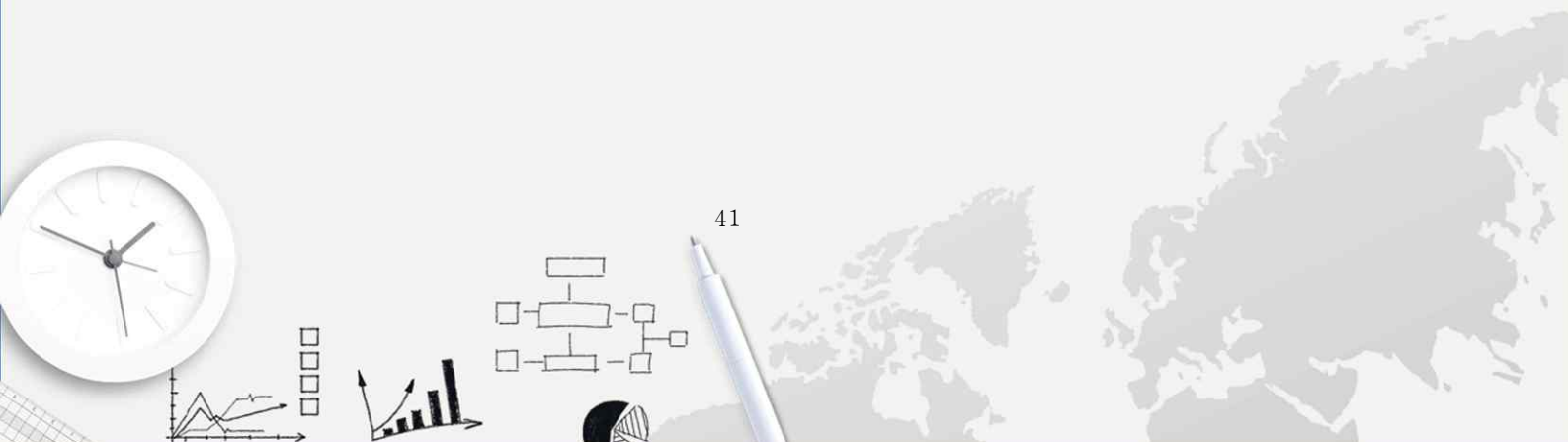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저출산·외국인력 도입의 경우도 '공간의 편중성'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혁신을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솔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자>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6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Remaining Considerations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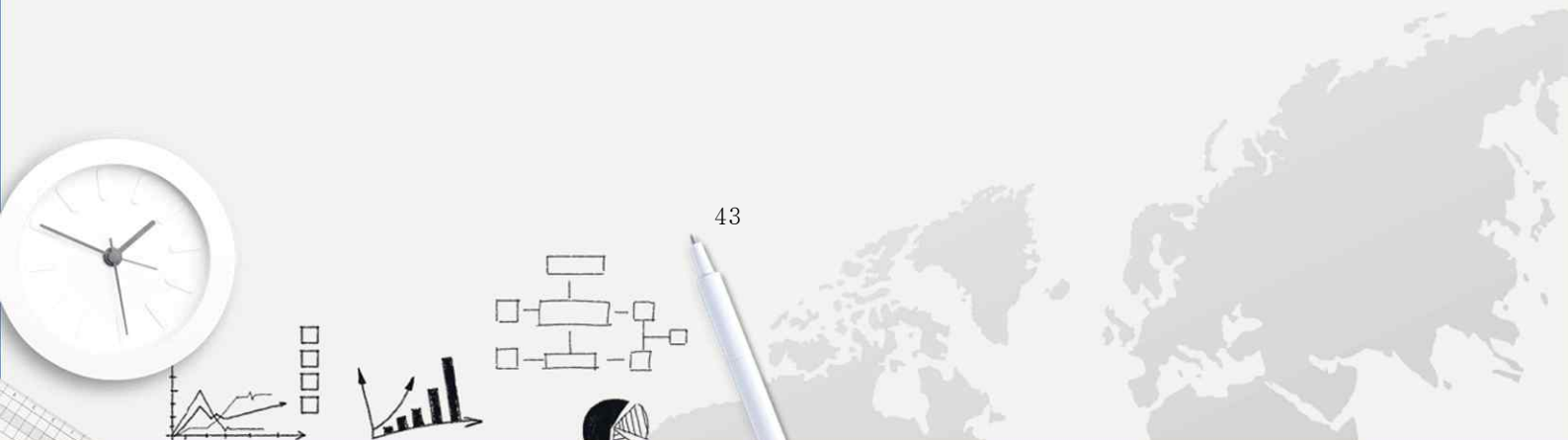
Wrapping up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Hello, this is Suk-man Bae. This lecture is a special talk prepared under the theme of "Innovation and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organized by the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fall of 2021, eight professors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poke frankly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economy from various angles and how to innovate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form of a relay interview with Maeil Business Newspaper. This was organized by the Korea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Innovation and published at the end of the year as a book titled: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How to Revive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During the past five lectures, I invited some professor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to discuss related matters and to hear additional comments they might want to share.

This talk includes six lectures, and in this lecture, we will discuss any remaining points we unfortunately haven't had the time to discuss with the professors regarding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We will examine innovation, focusing on macroeconomic policy, industry, business, and finance. At the end of the lecture, we will invite one reader of the book to share their thoughts and impressions in the form of a short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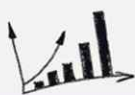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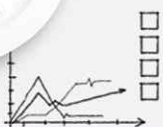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Since this lecture is also an overall summary, I would like to briefly outline what the professors have said in the past five lectures before diving into this final lecture.

In the first lecture, Professor Byung-yeon Kim, who oversaw the overall planning of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explained the intent behind diagnosing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economy with the keyword 'innovation' in mind and presenting a blueprint for the future.

A critical approach with the keyword 'innovation' in mind assumes that the Korean economy is at a crossroads. Recently, Korea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enter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yet, it is also true that the aftereffects are emerging in exchange for rapid growth in a short per. Korea has become an aging society with a low birth rate while facing fierce challenges from inside and outside with a series of policy failure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external variables such as neo-protectionism.

In addition, although they are recent unexpected variables, the prolonged COVID-19 situation and the war in Ukraine are also factors that darken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Soaring high oil prices, inflation, and economic recession remind us of the oil crisis that the world suffered through in the 1970s, not to mention the prospect of stagflation. Predictions for the future are bleak all around.

In the end, the decision that it was time for Korea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think about what to do for stable and sustainable growth was the starting point for proceeding with this joint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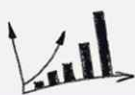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The professor also told us that they attempted to present a blueprint for the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innovation that the new government should pursue to achieve stable and sustainable growth and what tasks should be addressed, as outlined in the subtitle of the book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Next, in the second lecture, Professor Biung-ghi Ju talked about innovation with a focus on "fairness." A fair society is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also an important lesson from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erienced so far.

It is a proven fact throughout history that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more successful in countries with low inequality and low class barriers. Countries with fair societies have been able to sustain economic growth longer. Of course, fairness itself is a more important goal than innovation. However, he emphasized that a fair market and fair distribution are essential to achieving the goals of innov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He spoke extensively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economy, such as the corporate ecosystem, income disparity, gender discrimination, meritocracy, social inequality, and social polarization, which can be called predatory capitalism. As a solution, he emphasized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education,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He pointed out that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education as a way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will create a society in which equal access to education is guaranteed to all young peopl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tudents from various social classes and regions can receive an excellent university education. He emphasized that prestigious universities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eff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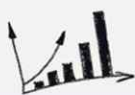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Students from various backgrounds with potential must be selected and allowed to realize their potential through university education. Through this, he said that we should increase social contribution and open the way for universities, society, and the economy to develop together.

He stated that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entrepreneurship and employment as a means for moving up the social ladder will make it commonplace for those without college degrees or a prestigious university background and ordinary part-time workers to succeed and become famous. He emphasized that companies can achieve this by eliminating the stereotypical recruitment method of selecting talented people based on their academic backgrounds.

In addition, he suggested that increasing the recruit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and local talent, centered on public corporations and the public sector, is a good way to resolve inequality of opportunity between classes and regions in employment and build a ladder for success in employment. If this is successful, he predict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eople in metropolitan areas could be resolved.

In lecture three, Professor Jung-min Lee spoke about innova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A labor market is where human capital is produced and distributed to the right place, and Korea's economic growth has been based on the growth of human capital. From this point of view, he diagnosed that Korea's education system has been successful.

The success of high-quality public education wa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behind Korea's rapid growth. However, he emphasized that the future task is to nurture exceptionally talented people for innovation, innovative people who can become world leaders.





He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a cautious approach regarding innovation in the labor market. He explained one of the representative issues surrounding this in our society, women's career breaks, and that we need a variety of policy approaches to combat this. For example, the necessary policy support may be completely different in the case of highly educated, high-income professional women and low-wage, low-skilled women.

Depending on the child's age, the path and impact on women's labor supply are entirely different for preschoolers, low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old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consumers with purchasing power, he mentioned that markets that provide services that can replace women's time at home, such as childcare centers or services tailored to each environment, should be used.

Regarding labor policy, he spoke in detail about research results that did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wage inequality regarding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is a representative policy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which was notable.

In the fourth lecture, Professor Chul-hee Lee, a renowned demographer, spoke on population issues for innovation. He gave an interesting talk about how the Korean economy, which is already facing a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will solve this problem and achieve long-term sustainable growth.

The professor mentioned that it is widely known that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is seriou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will decrease soon. However, more importantly, there are more significant factors that are not well known aside from the facts that can be understood only with these statistics. The uncertainty of the demographic change that will occur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ing quality of the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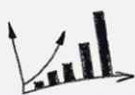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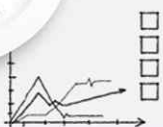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For example, compared to the current elderly population, the future elderly population, currently in their 30s and 40s, has a higher proportion of highly educated people and is more likely to be healthier. In the end, he emphasized tha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opulation problem should be prepared for the future on the premise of a more educated and healthier older generation, in other words, a "new senior." There is great concern that social costs will be incurred due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working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But, the professor stated that such concerns are exaggerated and that what will happen soon may not significantly reduce the labor force.

Of course, even so, the decline of the young labor force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cannot be avoided. To this end, it was seen that the labor market should be more flexible, and labor mobility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 reduced youth workforce can play the role of the past.

To this end, university education must first aim to support the functions of the labor market through change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outside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d the need for flexibility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such as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or the opening of new academic fields, to be more sensitive to market demand and nurture human resources,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rigid education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labor mobility within the labor market itself. He also pointed out the need to develop measures to respond to the reduced number of newly hired workers, such as retraining and deploying existing personnel. In addition, rather than the absolute decrease in the labor force, we must first pay attention to the imbalance of labor supply and demand. He also pointed out the need for an efficient supply of female and foreign la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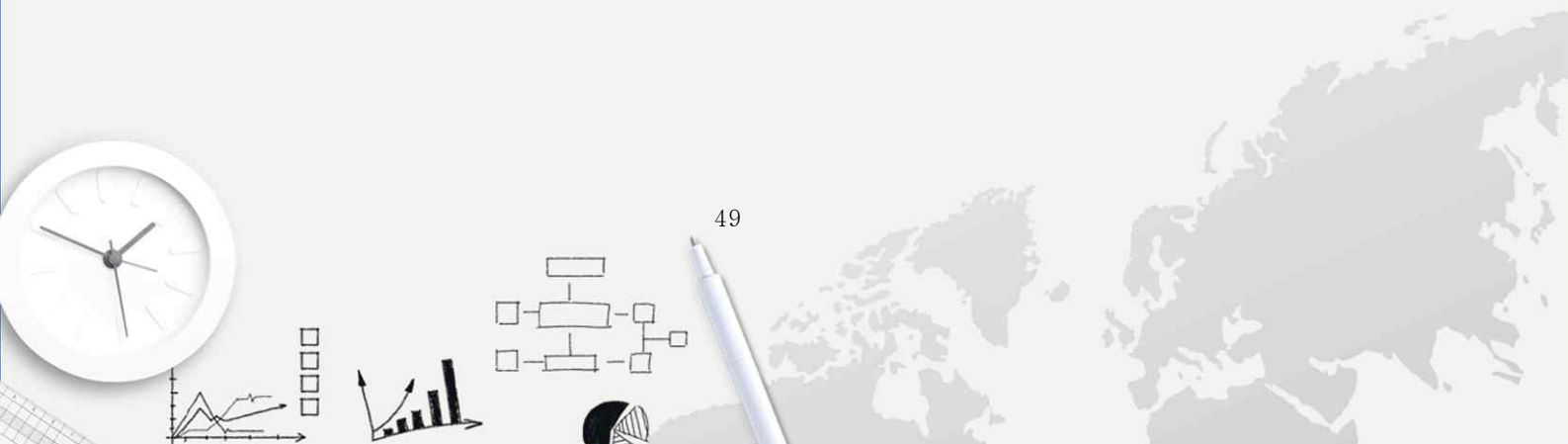


In the fifth lecture, Professor Jee-hyeong Park discussed trade issues related to innovation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We first addresse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export-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symbolized by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that many people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narrow domestic market and developing through outward-oriented economic policies, business activities, and cultural activities. And the professor predicted that such outward orientation will still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innovation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future.

The professor emphasized that the task here is to establish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that will enable long-term sustainable growth by reinforcing the strengths of the outward-oriented Korean economy and supplementing its weaknesses. Specifically, at the government level, efforts should be made to maintain and strengthen existing free trade agreements.

In addition, the professor emphasized that it is time for individual companies to recognize the risks of these protectionist policies and to carry out global economic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m.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with partner countr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existing free trade agreements while protecting domestic companie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sternly respond to excessive protectionist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was emphas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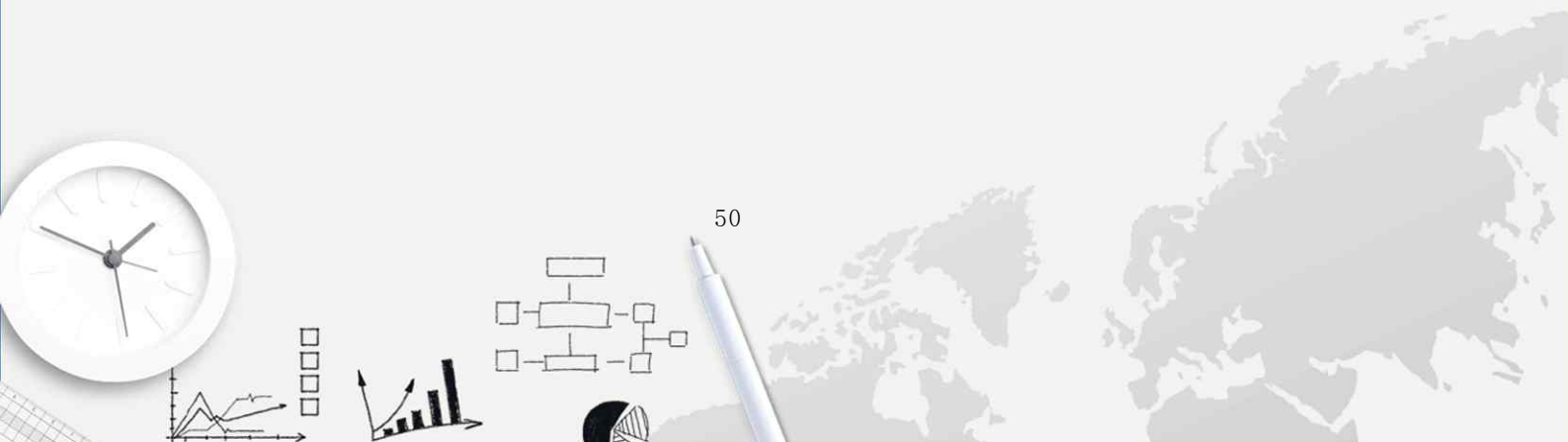


Concerning the growing trad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professor mentioned that the important thing is not “whether it is the United States or China.” Instead, the focus should be on raising ‘rule-based’ voices centered on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 trade. In other words, in terms of mid to long-term trade policy,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that we are 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restoring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ade order.

It’s not about siding with the United States or China because of national interests. It is selecting and implementing mid- to long-term trade policies for the universal value of transparent and fair global economic management. It was a very interesting point because it was said that only then can we oppose the arbitrary actions of either China or the US and ultimately protect the national interest.

So far, I have briefly summarized the last five lectures .Aside from the lecture with Professor Byung-yeon Kim, who spoke about the overall intention of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we heard in detail about how to initiate innovation in society, labor, population, and trade from the professors in their respective specializations.

Going into the main topic of this lectur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rest of the book, *The Beginnings of Innovations*, which was unfortunately not discussed with the professors who authored it. Next time, we will start with the economic policy written by Professor So-young Kim.





6-2

Innovative Growth and Macro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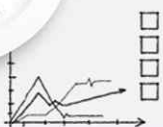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This time,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 macroeconomic policy written by Professor Kim So-young in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This was Chapter 1 of the book titled 'Innovative Growth and Macroeconomic Policy.' Proposals are being made for innovation in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y for long-term sustainable and stable economic growth. To do this, we start with an analysis of the economic growth prospects and the risks we face.

First, the short-term prospects for Korea's economic growth are not so bright. Once the base effects of COVID-19 disappear, the Korean economy will return to the 2% growth trend. Until 2022, the effects of continued post-COVID-19 economic stimulus may remain. Still, even so, from 2023, unless there are special measures, the effect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will disappear, and the economy could suffer.

As government spending continues to rise, the private sector could contract, and problems could arise from skyrocketing government debt. In the meantime, household debt has soared, and the problem of restructuring uncompetitive industries such as zombie companies in the post-COVID-19 era remains.

Recently,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stagflation, a phenomenon in which a recession coincides with a price surge, but it isn't likely. If the COVID-19 situation worsens, the economy will get worse, which in turn lowers inflationary pressures. Conversely, if the COVID-19 crisis subsides and the economy recovers, there may be inflationary pressures due to supply costs, such as rising commodity prices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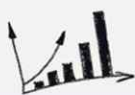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But even if this happens, this would be the inflationary pressure exerted by the demand factor as the global economy recovers. There i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typical stagflation situation caused by an increase in oil prices caused by the supply factor.

Ultimately, the most significant risk facing the Korean economy is the risk associated with responding to COVID-19. It is crucial how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right now. After that, the problem of normalizing the economy after COVID-19 remains. After COVID-19 subsides, risks related to normalization and restructuring, such as debt accumulated in each economic sector, are expected to be high.

We need to normalize the pace of increase in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which have soared in response to COVID-19. In addition,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self-employed and zombie companies that have not been filtered out despite their low competitiveness must be restructured.

In other words, an essential task at hand is how to restructure sectors that have faced difficulties since COVID-19 so that they can be restructured and converted to new industries after economic normalization. In addition to industrial adjustment, it was emphasized that workers in industries subject to adjustment must be able to move smoothly so that they can work in good or new industries.

Next, the mid-to-long-term prospects for the Korean economy are also not so bright. This is because low growth has continued and is expected.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stagnated at 0.9 percentage points, within one percentage point. No matter how much capital and labor are invested, the long-term growth rate will not increase in this situation. In a word, this can be referred to as a 'bottomless 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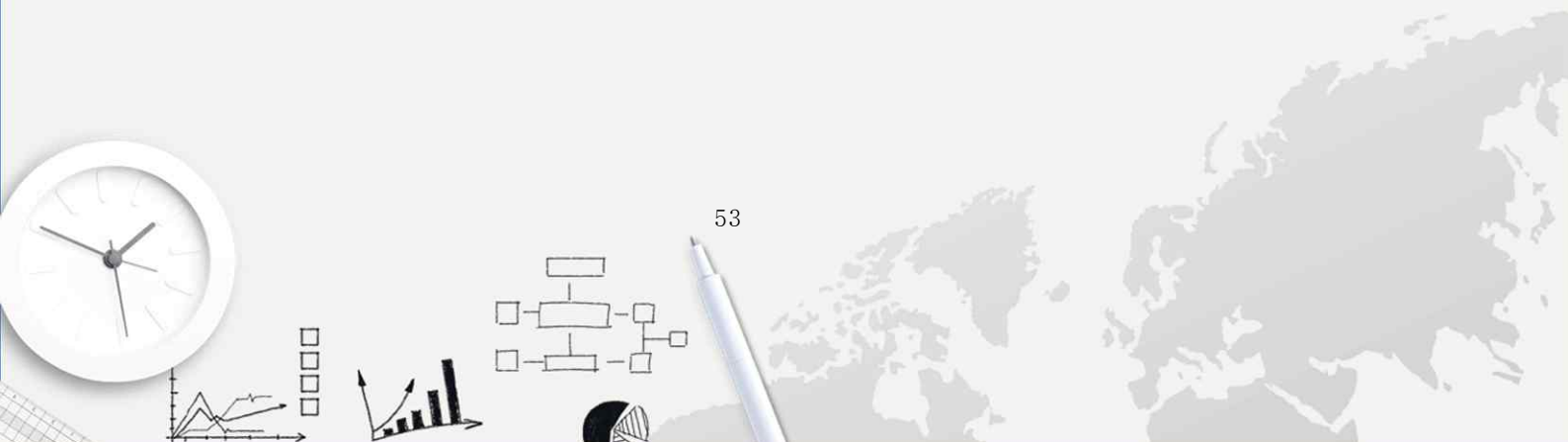


However, the low growth experienced by Korea is a phenomenon that inevitably appears in a country's growth process. For example, in the early stages of a country's full-scale economic development, capital is accumulat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and growth is achieved. At this stage, factories that did not exist before are created, and production takes place, so the effect of factory construction is high, and the growth rate is high.

However, as capital accumulation progresses, the growth rate gradually decreases. This is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The effect of constructing additional factories is small in a state with already many factories.

This is a typical phenomenon that has already appear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is cannot be overcome by accumulating more capital. Needed is a new growth paradigm based on innovation or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e Korean economy needs to speed up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prevent low growth.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low growth is technological innovation,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another thing highlighted i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odern economy mainly occur in private companies. This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lead.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government can identify innovative technologi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n economic environment that can advance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underscored. Deregulation and productivity expansion must be achieved, and the government must use the market economy extensively. It is impossible to break out of the low-growth structure by simple and government-led capital inf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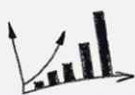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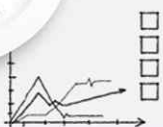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Then, in a situation where not only the short-term prospects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the mid-to-long-term prospects are not bright, the focus will be on monetary and fiscal policy to answer the question: "Which direction should the government's policy go?" First, concerning monetary policy, the chapter pointed out that a certain increase in interest rates should be tolerated when interest rates are expected to rise due to factors such as COVID-19 and the global economy.

We need to leave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base rate will go to 3%, and people also say that it would be good to prepare for future interest rate hikes. In the long run, an increase in the benchmark interest rate can reduce household debt, so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quite a few positive effects. Considering this book was written in 2021, the current standard interest rate situation in 2022 is largely consistent with the professor's forecast.

Regarding monetary policy, the issue of asset market stability is also important. Assuming that there is a discussion about whether Korea's asset market is experiencing a 'bubble' due to the recent surge in asset prices such as stocks and real estate, what is clear is that asset pric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 short period. A sharp rise in a short period is considered risky in that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t will fall again.

In addition, large downside risks will become a reality if credit risks, such as self-employed persons and corporate bankruptcies, etc., occur during monetary policy normalization in the future. This is based on 2021, but in the case of the stock market, there is a prevailing tendency to take stock prices going up for granted. The problem is that in the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re will be a possibility of adjustment, and eventually, we should make preparations with the possibility that asset prices may decline in the future. If we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recisely what was predi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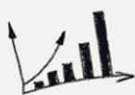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In addition, looking at the real estate market, there is little additional supply in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and on the demand side, the real estate that people want is few, and it is not easy to sell. Real estate prices still appear to be on the rise, but the possibility of adjustment over time cannot be ruled out either.

Regarding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it is believed that the goal of the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changed. The professor stated that government policies so far have not been successful in stabilizing house prices, and stabilizing house prices is only part of it. Even if house prices stabilize, people cannot buy or sell houses due to tax burdens and unfounded regulations. If a situation arises where people cannot even move freely, this is a failed policy.

In other words, the policy goal should be aligned to ensure that all citizens, including those who own a home and those who do not own a home, can live comfortably in a better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is respect, the argument emphasizes that although price stabilization can be a means to such an end, it cannot be an end in itself.

Next is fiscal polic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armonizing with monetary policy and securing fiscal soundness. The key difference between monetary and fiscal policy is that monetary policy is a policy aimed at the economy as a whole. In contrast, fiscal policy is a policy that can be implemented by sector.

Currently, the ripple effect of the COVID-19 crisis on the economy is asymmetric. Although COVID-19 is an inconvenience, certain sectors, such as those that involve in-person service, are suffering considerably compared to most other industries that can endure relatively better. Considering this, monetary policy should look at the economy as a whole and proceed with normalization in line with the economic recovery trend, in other words, rising interest rates. Also, it seems appropriate to draft fiscal policy for the parts that have not recovered b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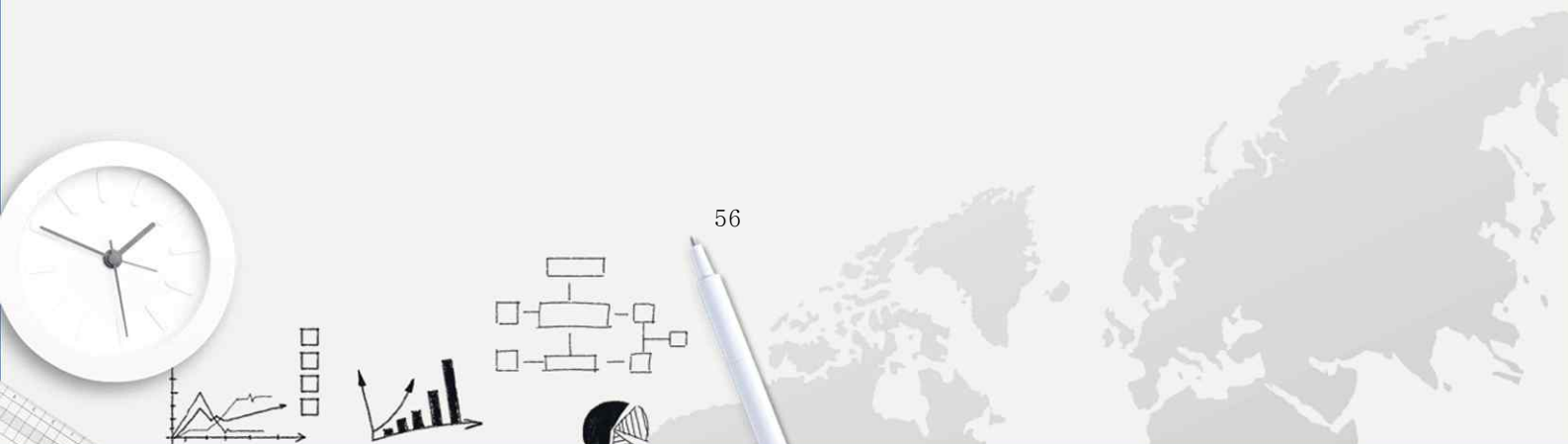


Conversely,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fiscal policy is overextended for the entire economy, requiring tight monetary policy. This can be seen as an inappropriate policy combination. For example, it is considered unreasonable to continuously use a disaster subsidy card for the entire population to respond to COVID-19.

Supporting the entire n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20 was a somewhat appropriate measure. This is because the situation caused by the COVID-19 hit was so difficult, and there was no accurate understanding of its effects. However, sinc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outbreak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we have now learned how and to whom it is adversely affected, further support for the entire population is ineffective.

It wouldn't be a problem if finances could be used indefinitely,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a rapid increase in national debt. In terms of stimulating the economy, the effect is not great. The multiplier effect is also about 0.3, so if a disaster subsidy of 1 million won is paid, only 300,000 won is used to revitalize the economy. In the end, selective support is effective in fiscal policy. It is to support those with concentrated economic blow due to COVID-19 intensively.

Even before COVID-19,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There are many ways to raise government finances, including the BOK's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and tax increases. However, the direct purchase of government bonds by the Bank of Korea points out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is being hindered right away, as the government finances the money spent by printing currency. This emphasizes that central banks must exercise independent monetary policy to manage inflation or keep the economy heal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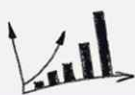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The chapter also pointed out that financial management can also be lax. We recall that most of the countries where governments printed money whenever they needed it and spent it recklessly suffered from “hyperinflation,” in other words, rapid, out-of-control inflation or a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is respect, direct purchases of government bonds by central banks can be risky.

In this regard, some scholar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sist on MMT, or Modern Monetary Theory. MMT is difficult to see as a good economic theory. MMT states that governments can continue to issue currency and release money in large numbers to stimulate the economy. But MMT is difficult to apply, given that signs of inflation have already begun to appear. In the end, everyone wants to spend the country's money, and if money is continued to be used, there be a visible effect right away, but we should keep in mind that in the end, significant side effects will follow.

Next, concerning the tax increase, the problem is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the Korean government debt is high, but some judge that the level is not very high. As long as we can cut unnecessary spending, they don't see a problem.

If welfare spending increases due to a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and people want more welfare, it will be possible to consider raising taxes long-term after publicizing this and reaching a consensus with the people. But at present, improving fiscal efficiency is more important than tax increases or direct purchases of government bonds to secure fiscal soundness.

Overall, we need to promote financial efficiency, but to do so, we must clarify our financial goals. Most of the policies that say, “We must do it because we can stimulate the economy, help the poor, and save the region,” when it comes to spending money, fail to achieve a single goal and are likely only to incur costs. The need to set precise goals and then use the most efficient policies to achieve them is stre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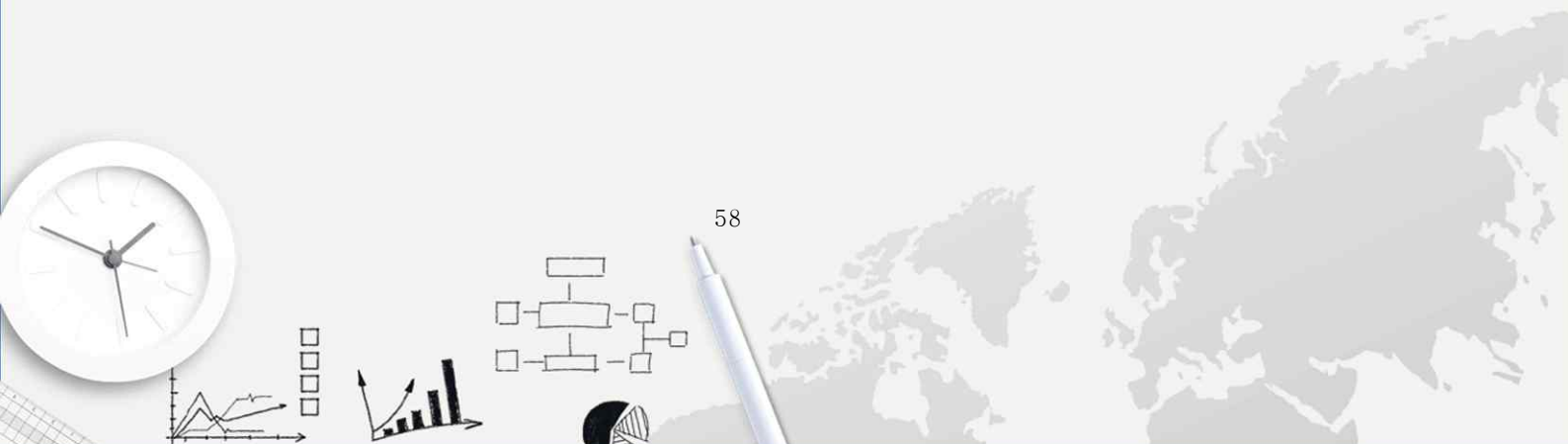




Finally, the following suggestions concerning innovation in government macroeconomic policy are provided. Until now,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y emphasized distribution, but it backfired, and growth was emphasized. The trend of going towards growth and then back to distribution after side effects has been repeated. Therefore, at this point, the government needs to formulate economic policies that emphasize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In the growth sector, it is necessary to reform regulations, establish a market mechanism based on fair competition and compensation, create a dynamic economic ecosystem, and achieve leading growth through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sector, it is emphasized that dissatisfaction caused by polarization should be reduced by concentrating on equalizing opportunities rather than simply supporting the less fortunate.

So far, I have briefly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y written by Professor So-young Kim in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Next time, we will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Professor Geun Lee's "Global supply chain changes and industrial innovation capabilities." This is Chapter 2 of the book.



**6-3****Global supply chain changes and industrial innovation cap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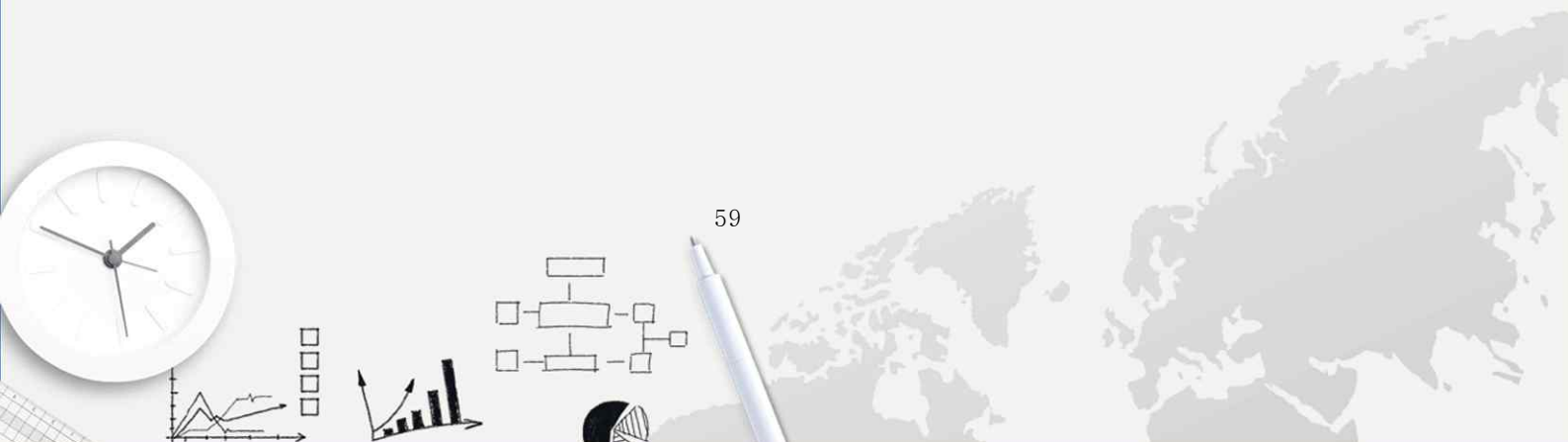
This time,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innovation in Korean industry written by Professor Geun Lee in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This corresponds to Chapter 2 of the book, and the exact title is 'Global supply chain changes and industrial innovation capabilities.' Suggestions are being made on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the Korean industry for long-term sustainable and stable economic growth.

The first thing to point out is the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future international situation will be G2, an era of long-term coexistence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at is expected through this is the block of the global value chain, the so-called 'GVC.'

Rather than the complete decoupling, that is, the total economic sepa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at the US promot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past, it is expected that a US-centered GVC will be built in high-tech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centered on the US and advanced countries that are not dependent on China.

In other words, a partial decoupling of global value chains and a bloc centered on alliances between minority countries and corporations will occur. These signs are appearing very clearly as of 2022, and it is also a part that confuse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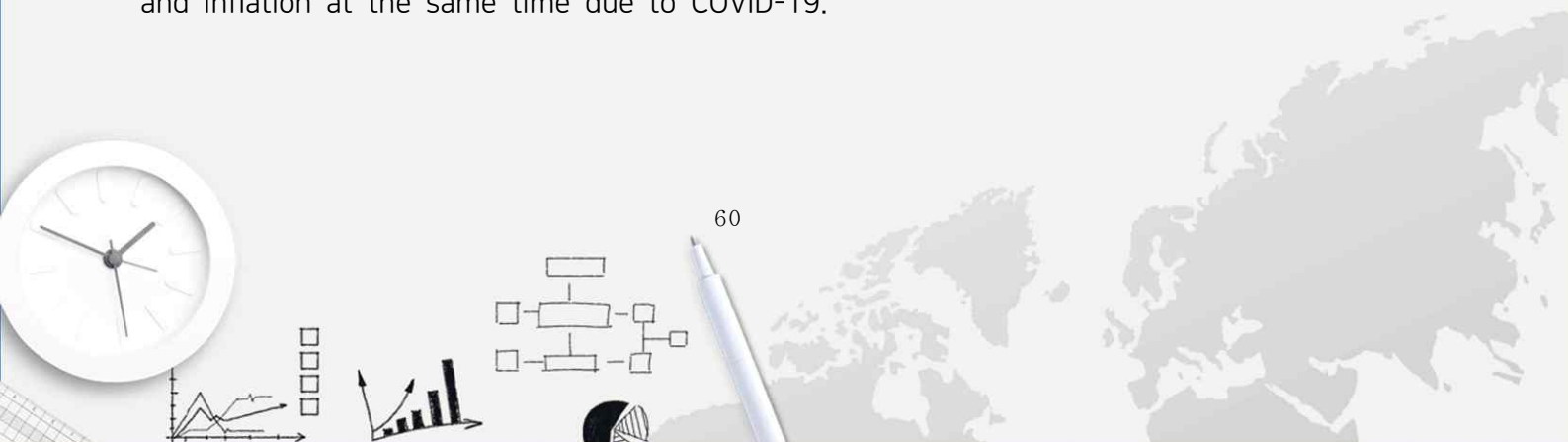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global value chain bloc will show differences in its influence by industry. China has already built a competitive edge as a global leader in electric vehicles, batteries, drones, wind power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space exploration. These sectors are likely to be less affected by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However, in the case of semiconductor equipment and software,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complete the pursuit in a short period because the western world has a firm monopoly on the industry, and strong checks on China are expected.

Of course, China will pursue its own technological path different from Western developed countries. Unlike previous economic growth, which has been rapid, it is likely to slow down, so it will probably take more than ten years to achieve thi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economic order for the purpose of containing China by the United States, while China hesitat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anti-China front, it is predict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S and China will agree on a new order of coexistence and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this case, it is a favorable scenario for the Korean industry in that it has gained about ten years to nurture high-tech industries while carrying out existing main manufacturing activities without being overtaken by China. But that's not all.

First, establishing a bloc GVC is inefficient compared to past free trade. As a resul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omestic production facilities will be overrun globally. In addition, if logistics costs rise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tagflation will occur due to economic contraction and inflation at the same time due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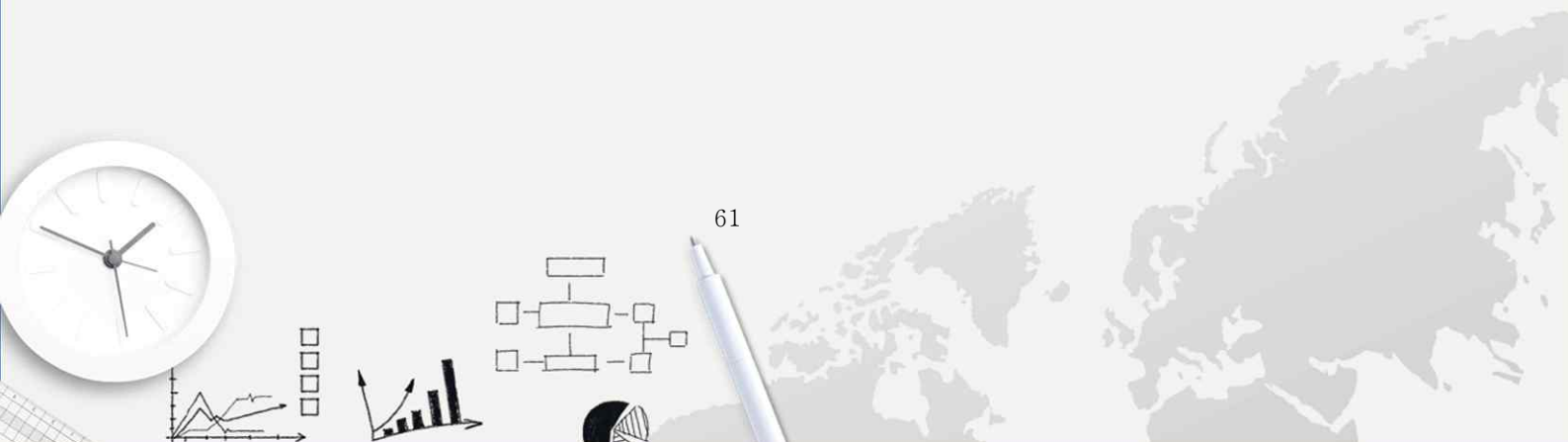
In this regard, the chapter also states that advanced countries are showing concern that even if China is excluded from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y will have to rely on Korea and Taiwa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y are already making plans to produce semiconductors directly.

In the end, Korea should be able to give the West, including the US, the trust that it is a reliable partner that can stably supply semiconductors. In fact, at the Korea-US summit held in May 2021, a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core and emerging technologies, a promise was made to expand the supply of semiconductors and eco-friendly electric vehicle batteries.

In the end, if Korea is trusted to be a reliable partner in the long term rather than exerting monopoly influence, the movement of advanced countries to establish domestic production facilities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may weaken. This is expected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the global value chain block.

Then, what is the response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y in this situation? Some of the solutions proposed by the professor are reshoring, capacity sharing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nversion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First, now is the best time for reshoring, that is, facilitating overseas expansion companies to return to Korea. First, as many countries are leaving China and imposing tariffs on Chinese products during the US-China conflict, the attractiveness of 'Made in China' has declined. Rising labor costs in China are also one of the reasons for the lack of attractiveness.





COVID-19 is also seen as an opportunity. This is because, in terms of supply chain diversification, companies are looking for places to build factories outside China. Digitalization accelerated by COVID-19 will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reshoring in Korea. This is because, among the factors that companies consider when selecting a site to build a factory, high labor costs account for 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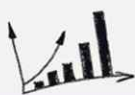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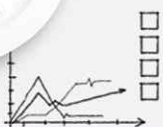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different types of reshoring triggered by these opportunities. Three types are cited here as examples.

The first type is the relocation of labor-intensive product production bases from abroad to Korea. This is the case of the 'wiring harness,' a bundle of wires that supplies electric current for automobiles, and the case of THN, a car parts manufacturer, and the Iksan Jewelry Cooperative.

Next, the second type is that simplifying the production proc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s digitalization, becomes an opportunity for reshoring. A good example is AJUSTEEL, which liquidated the Manila plant in the Philippines in 2020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a color steel sheet production plant on a 66,000m² site in Gimcheon Industrial Complex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third and last type is the case of a company like SolGent, a diagnostic kit company that made all production steps, which went from overseas processing/parts and domestic assembly, take place in Korea. In addition, clothing company G&G and outdoor brand Treksta are examples of reshoring through large-scale automation and transitioning to smart factories.

And to ensure that there are more cases of reshoring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level financial support and tax relief to help overcome Korea's high labor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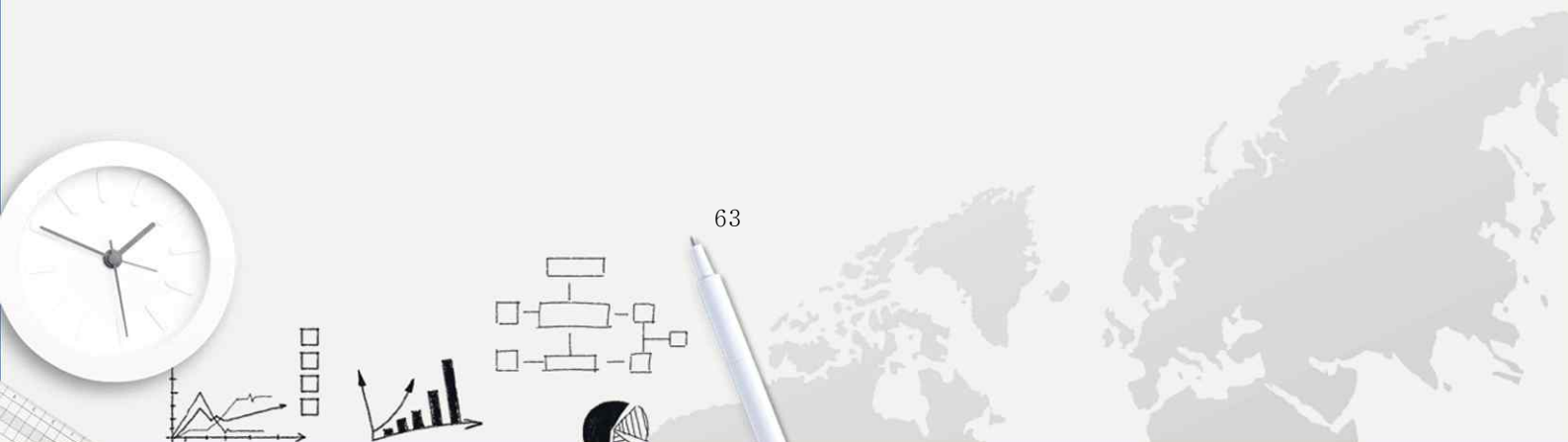
More robust and flexible government incentives have influenc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horing cases since 2019. To promote reshoring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ddition to financial support, the government and large corporations should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SMEs at the same time.

Next, capacity sharing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starts from the fact that Korea was already one of the countries with a large productivity gap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even before COVID-19. In this situation, what is needed to improv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is the sharing of capabilities rather than the profit sharing of large companies.

If large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work together to support and share systematic and direct capacity building for SMEs,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can be narrowed quickly. An example is Samsung Electronics' support for SolGent, a diagnostic kit company.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promote policies by tying together the reshoring mentioned above and capacity sharing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so that synergies occur.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already started this type of support and selected ten companies for the '2021 process and quality technology development task' in August 2021, but it is necessary to expand it further.

It is also emphasized that now when it is the best time for full-scale reshoring,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large corporations 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should step up and systematically support SMEs in terms of capacity sh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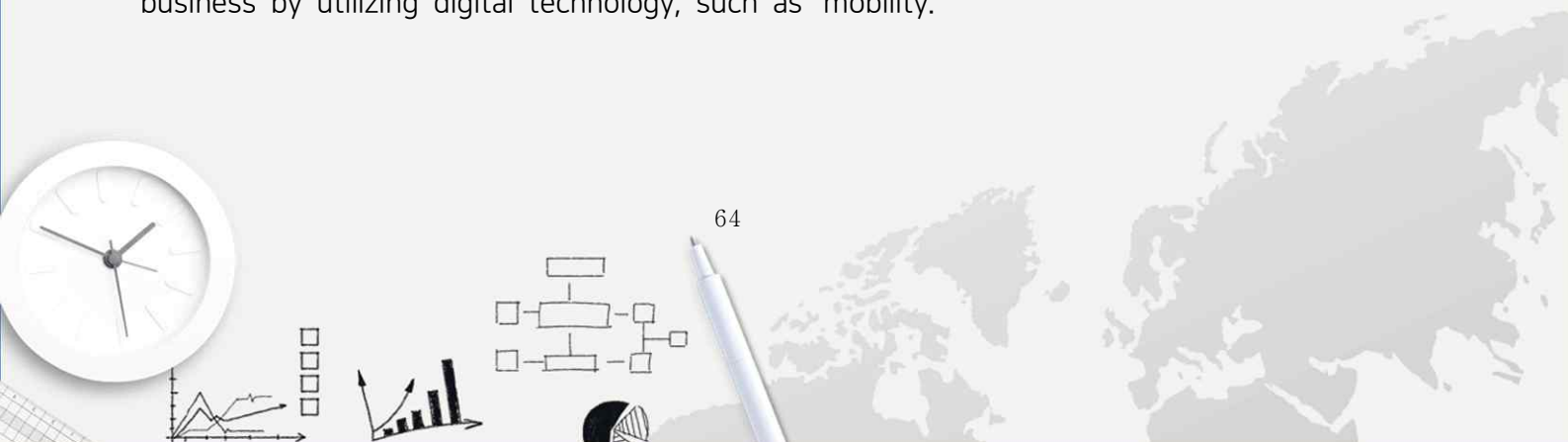
Lastly, it is underscored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is both an opportunity and a challenge for the Korean economy. Regarding the specific direction, in the case of Korea,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should be shifted from a short-cycle technology with a short cycle, such as the current IT, to a long-cycle technology, such as bio, in other words, an industry-centered one based on 'long-cycle technology.'

Since the short-cycle industry is relatively easy to follow by latecomers such as China, it is necessary to move to a long-term industry with high barriers to entry that is difficult to catch up to in order to build an industrial structure that can last for a long time. It seems obvious, but it is not easy.

Furthermore, if Korea wants to lead with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it is also emphasized that what is needed is an industry based on new convergence technolog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compared to Germany, the world's top level in the convergence of these technologies, Korea's level is very low. This has been approached very specifically. Based on this, it is predicted that creating new convergence technologies by combining Korea's existing strengths, IT technology, with technologies from other fields will become very important in securing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enable various horizontal alliances and connections, such as expanding and evolving into a service industry that goes beyond a specific field of manufacturing or product level or a manufacturing-service convergence business by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such as 'mobility.'





Among individual industries in Korea,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cited as an example of sec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convergence. In the case of shipbuilding, it is a traditional machinery industry in which Korea already has global competitiveness. Competitiveness in the shipbuilding sector has improved as it has recently been combined with IT technology.

Smart ships, which have grown into a super-gap industry,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A smart ship is a ship in which all facilities within the ship are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hipbuilding technology combines state-of-the-ar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utonomous navigation control systems, automatic vessel identification systems, and remote vessel control using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s.

In other words, the machine industry has become an electronics industry through the convergence of knowledge. Digital twin, a technology that creates a digital twin space identical to the physical world, smart ship solutions, and electric propulsion system design technology is also developing.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the core topic of the industry in the future will be convergence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at is, collaboration.

Korea's flagship industries and companies now need horizontal innovation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businesses' beyond vertical integration. In the past, most Korean companies pursued organic growth, relying on internal resources. In the future, inorganic growth through connection with the outside world will become important for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leading companies aiming for such an inexhaustible 'big blur' avoid the traditional linear growth model of 'entry into the target market → growth → expansion.' Instead, it should pursue a strategy of sowing seeds in various areas and finding new opportunities for recombination and reorganization between busine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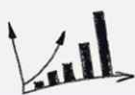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A representative example is Kakao. Unlike Korean conglomerates that have been referred to as having “octopus legs” in the past, Kakao is a group of companies, but one connected by data. It is a combination of entirely different business models.

Data is key to connecting companie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this case. Ultimately, to promote these companies' collaboration, a public organization may be needed to create an ecosystem for data collection, sharing, and trading, which are core technologies. When public infrastructure is connected to data, it can become a platform, creating businesses and job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a transportation card that connects public transportation and fin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harmaceutical and biofields, which are examples of long-term industries, Korea has already proven that it can become a strong player in the generic field of biosimilar generic drugs. This is also cited as an example of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based on technological revolution.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for SMEs to enter because it is a highly regulated field. To overcome this, the status of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hould be as strong as that of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ertification is recognized worldwide, Korean bio and medical device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will gain momen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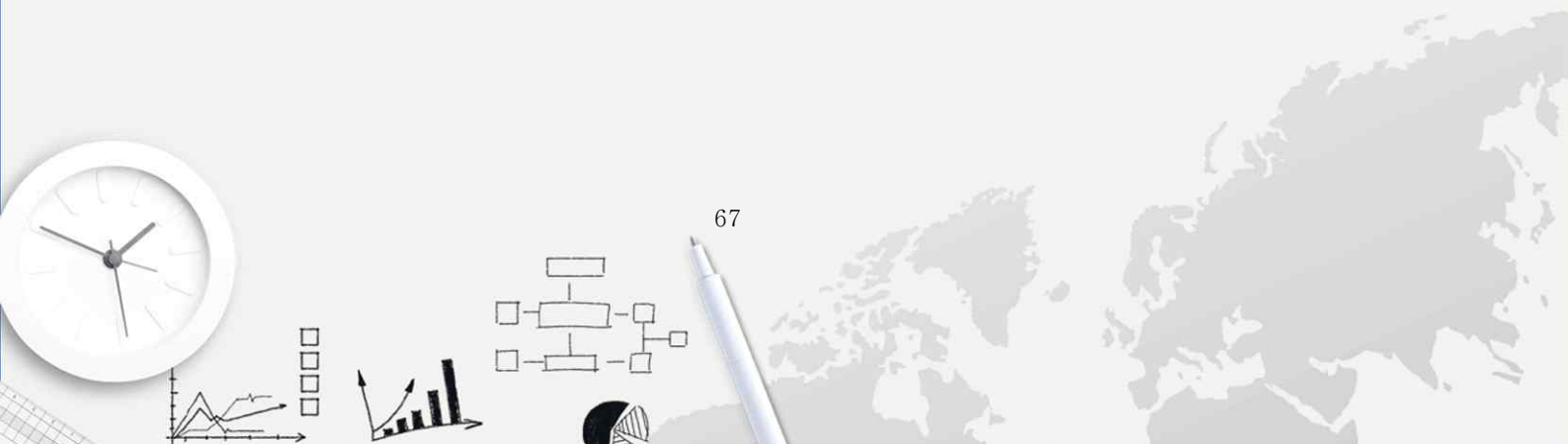
A similar example i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 included in IP5, one of the top 5 patent offices in the world, along with the US, Japan, China, and Europe. The position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upport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at is, support for large companies as well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excellent technology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equipment parts, and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using patent big data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Korea becoming an IT powerhouse.





In the end, what is emphasized once again is that the core topic of the Korean economy and industry in the future will b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hat is, collaboration and integration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e key content is that Korea's flagship industries and companies now need horizontal innovation that goes beyond vertical integration and crosses business boundaries.

I have briefly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what Professor Geun Lee has written in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Next time, we will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Professor Sang-seung Yi's 'Innovation by Corporate Competition.' This is Chapter 3 of the book.





6-4 Innovation by Corporate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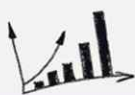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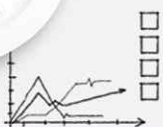
In this lecture,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innovation focused on companies written by Professor Sang-seung Yi in the book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It corresponds to Chapter 3 of the book, and the exact title is 'Innovation by Corporate Competition.' Proposals are being made on properly establishing the role of corporations, a key player in producing added value in a capitalist society, for stable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irst, we start with the history of Korea's economic growth. He writes that the historical growth process of the Korean economy "cannot be explained only by the government-led economic growth policy and the history of the companies that benefited from it; rather, it is a demonstration of entrepreneurial spirit in choosing overseas expansion, and the result of surviving fierce competition after that."

And this is more clearly revealed in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nature of Korean companies has completely changed in the direction of pursuing profitability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a company is an organization that pursues profitability, and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n companies have transformed into a model that constantly evolves and grows and strives to enter new fields.

When a company's growth hits a limit, they generally take two approaches. One is to diversify into related businesses based on current core competitiveness. Another is to move to a new industry on an entirely different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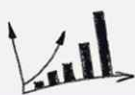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For example, the Doosan Group started out in the mainstream industry and later moved into a completely different industry called the heavy industry. The history of the Doosan Group exemplifies the process of discovering new growth engines to overcome a company's limitations while growing with existing businesses.

Then, two specific suggestions are made about the direction in which the innovation of future Korean companies should proceed. Revitalization of the venture ecosystem, differential voting rights system for this purpose,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deregul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First, it is stressed that Korean companies' innovation lies in vitalizing the venture ecosystem.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current Korean economy is the dual structure that arises from the large gap in productivity between export conglomerates such as Samsung and domestic service companies.

In the case of export manufacturing, the key to determi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is how much economies of scale can be achieved by investing in large-scale fixed cost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facility investment costs in large-scale production of the same product. Korean export conglomerates have achieved economies of scale and increased productivity through excellent manage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service industry to become export-oriented due to the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consumer tendencies in each market. As a result, it was difficult for service industries based on the domestic market to secure high productivity. The problem is that large export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should grow together, but a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companies drops significantly, regulations are increased to protect them. This has created a vicious cycle in which productivity declines as competition does not occ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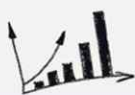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Hope in finding a solution to that problem lies in the venture craze emerging in the Korean economy and the formation of a venture ecosystem. Going through the mobile revolution, domestic startups focused on the domestic market are also fiercely competing, and companies that have grown here are highly praised for challenging the global market with competitiveness. The formation of a venture ecosystem means that venture companies, venture capital, and government policies are organically intertwined to form a sustainable structur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emergence of innovative services such as Toss in the financial market enables an optimistic outlook in that it shows that the ecosystem of these venture industries has been formed.

Finance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sectors in the domestic service industry and has been subject to all kinds of regulations represented by public certificates, and the gap in competitiveness with developed countries is also very large. Domestic companies developed the accredited certificate for domestic use based on Microsoft's technology called Active X in the days of Windows in the past. In the end, Korean financial companies were trapped in a system not used in the global market for security reasons.

However, Toss went beyond these regulations with the idea of account transfer. In 2014, the CEO of Altos Ventures, Han-Jun Kim (Han Kim), heard the presentation of an idea by Seung-Gun Lee, the founder of a startup called 'Viva Republica,' and immediately invested 1 billion won in starting Toss.

In addition, venture investors have played the role of 'accelerators,' raising funds and giving advice from various angles on how to grow a business. In September 2021, Viva Republica attracted an additional investment of KRW 460 billion and was recognized for its corporate value of KRW 8 trillion.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during this process, Seung-gun Lee, CEO of Toss, made fruitful efforts to solve regulations one by one through productive dialogue with financial regulators. CEO Seung-gun Lee introduced innovative services and management companies throughout the financial market and is expanding to Toss Securities and Toss Bank. He sees that it is also symbolic that he attracts excellent talent while giving 1.5 times the annual salary of the existing financial sector.

An institutional overhaul and the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voting rights are emphasized as what is necessary for these venture companies to establish or grow more actively and build a healthy and stable venture ecosystem. The rationale is as follows.

For a startup to grow from an entrepreneur's idea to a global company, funding from the financial market, including financing from venture capital, is required. To this end, when a company is listed on the stock market, there is no choice but to dilute the founder's stake in the start-up company. In this situation, if the founder's stake is lowered, they are bound to be exposed to hostile M&A at any time, which can harm the entire venture ecosystem by lowering the startup's chances of success.

In this regard, looking a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company law in the United States entrusts the decision on the share structure and voting rights to maximize the company's profits to the stakeholders. It is to recognize the voluntary agreement of stakeholders. And if these stakeholders trust that the founder is more suitable than anyone else to make profits for the company, the founder is delegated the authority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at the time of listing.

A typical example is Google, where the founders of Google exercise 10 votes per share. These three founders of Google can still make special resolutions under the Company Act and Commercial Act while retaining 67% of the voting rights. Based on this, it means that the founder can freely make decisions if they want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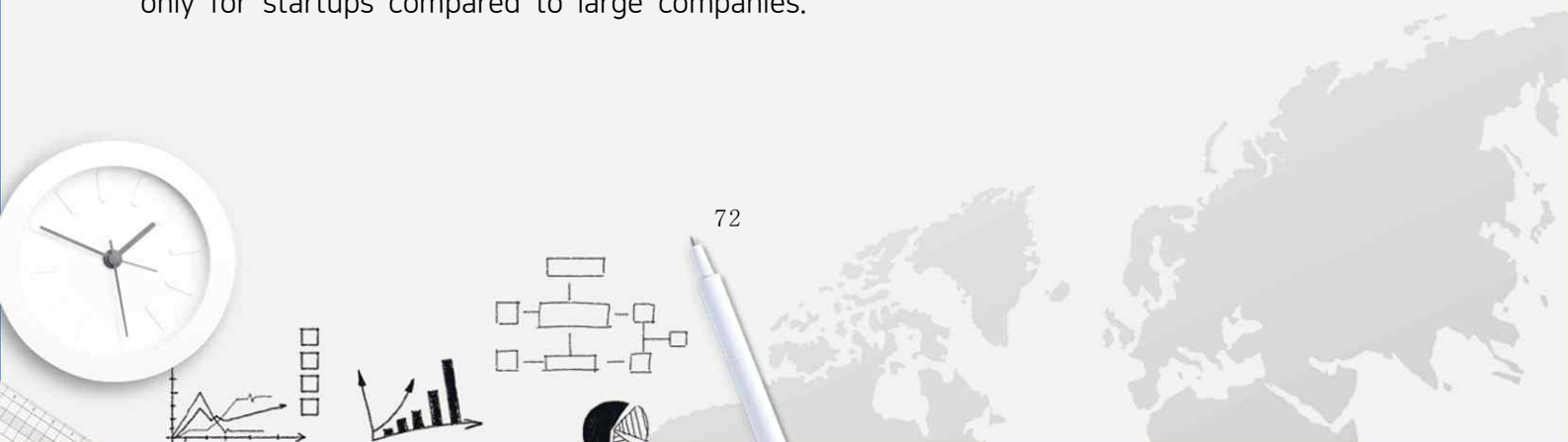
Google changed its name to Alphabet, took on challenges in all fields if it generated profits from 'A to Z,' and was able to make a free decision to withdraw quickly if it was not profitable because the shareholders have entrusted themselves with the right to hold absolute voting rights to Google's founder.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differential voting rights apply only to entrepreneurs. Even if a founder who has received differential voting rights transfers or inherits them to another person, the right disappears.

The reason is that hostile M&A is an important market mechanism that prevents corporate executives from pursuing private interests. Hostile M&A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ltering out and improving companies that have become insolvent due to management's pursuit of personal gain. Nevertheless, the fact that minority shareholders voluntarily grant founders defensive weapons against such hostile M&A means that they recognize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spirit and management ability.

Regarding the opinion that differential voting rights deviate from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under current corporate laws, it is pointed out that these basic principles are not being followed in large corporations such as chaebols in Korea that have already established a cross-shareholding structure. The ownership of the family of the head of a domestic chaebol is usually 10-20%. It dominates the entire group through the holding company and cross-shareholding pyramid control.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Korean chaebol-structured corporate law is that the shareholder equality of one share and one voting right does not apply to the family of the head. In this respect, it is emphasized that it is fair to recognize differential rights only for startup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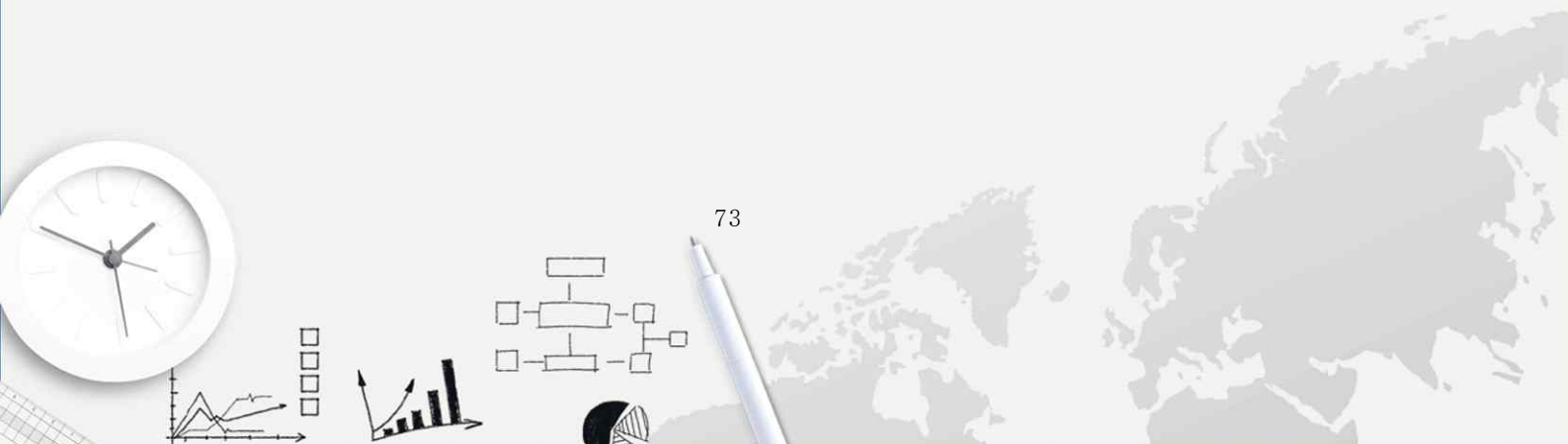
Next, as a proposal for future corporate innovation in Korea, the strengthening of rights for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deregul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are discussed. First of all, it is argued that strengthening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s in line with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chaebol family.

Reinforcing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means reducing the private benefits of taking control of management. As a result, the family no longer has to resort to irrational measures such as maintaining a complex governance structure to take control of the entire company despite a low stake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only one exit, the inheritance of management rights.

Depending on whether the chaebol owner's children have management skills, they can directly participate in management rights. Or they may choose not to participate directly but to hire a professional executive to serve as the board chairperson and manage the performance.

You can also switch roles as a venture capitalist, selling a company and using the money to invest in other companies. It is also possible to choose a completely different career and give back to society. In the end, strengthen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s seen as allowing the family to seek an exit with various alternatives.

It is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discovery procedure on what kind of devices are institutionally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is a system in which, in the event of a civil dispute, one party to the lawsuit requests materials related to the dispute from the other party through the cou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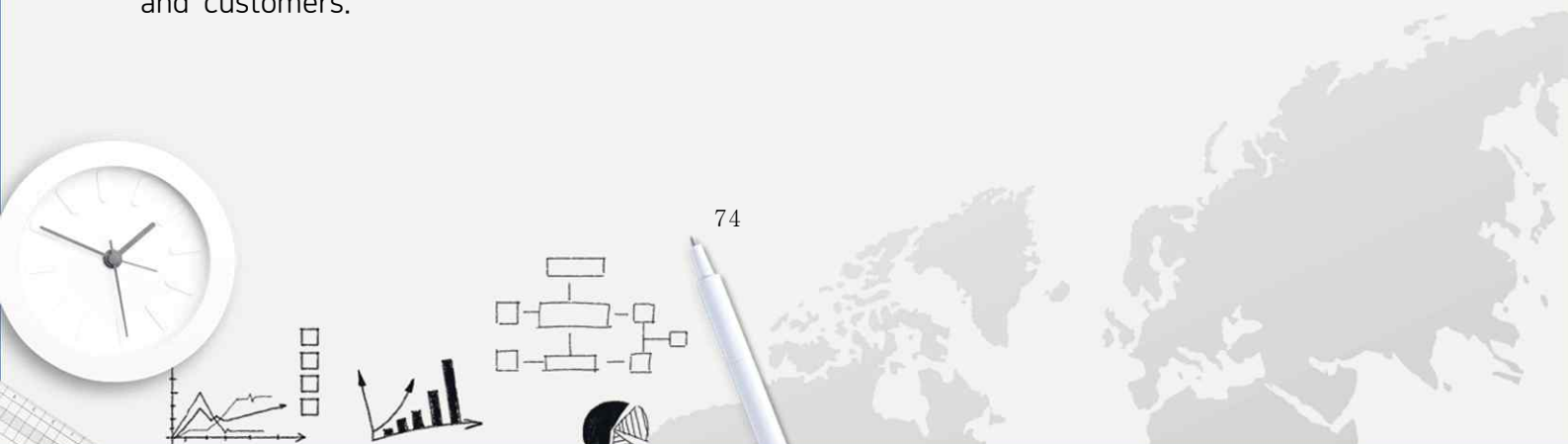
If a minority shareholder suffers damage due to an unfair act by the company's management or controlling shareholder, to prove damage, it is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possessed by management and major shareholders.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t is often resolved through civil litigation, and the discovery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Due to the lack of such a system in Korea, civil dispute resolution is not implemented correctly.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sometimes file lawsuits against other Korea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a recent lawsuit filed by LG Chem against SK Innovation.

If minority shareholders or consumers suffer property damage due to unfair actions of corporate executive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civil remedies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damages are compensated financially. That way, excessive criminal penalties for entrepreneurs can be reduced.

Reducing criminal penalties that restrict business activities and reforming the inheritance system are also propos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driven by competition, and economic innovation is only possible with competition. Therefore, the logic is that the first step of corporate policy is to guarantee companies' free pursuit of profits.

An important institutional reform in this regard is the drastic reduc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enalties for over-punishing entrepreneur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duce criminal penalties that hinder corporate management and strengthen civil procedures that more actively relieve damages to minority shareholders and custo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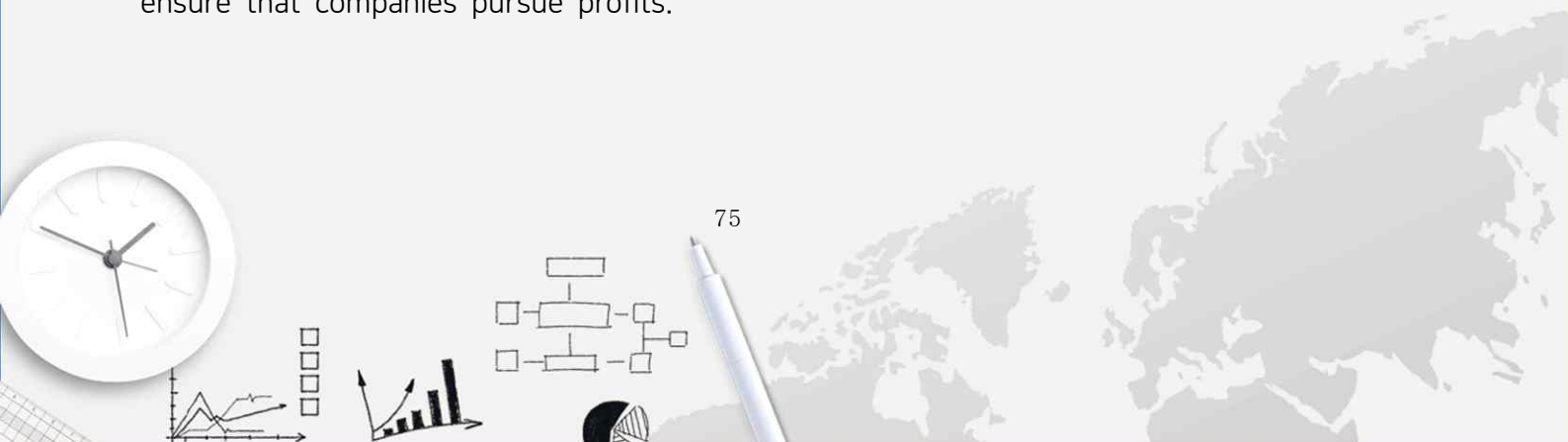
In Korea's corporate policy, the current range of penalties for breach of trust is too broad. In additi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2022, includes not only civil procedures but also criminal penalties. This has the side effect of excessively suppressing the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Ultimately, to avoid these side effec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riminal punishment for cases that require it. However, the chapter also highlights that damage relief through civil procedures for conflicts of interest and financial damage between the remain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management or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be accessible.

Also, once corporate management is normalized through the active strengthening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wealth of the owner family is secured, the current excessive level of inheritance tax needs to be revised. Under Korean tax law, inheritance tax rates of up to 50% and a 30% premium are imposed on the inheritance of management rights, reaching a maximum inheritance tax rate of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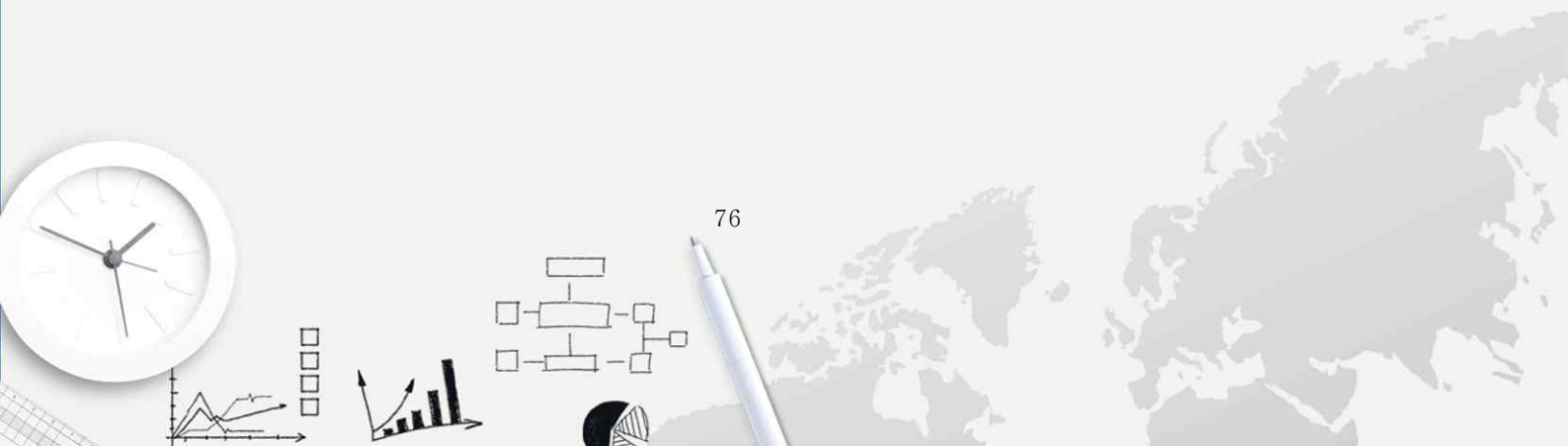
In particular, the 30% surcharge is deemed excessive. Even under the tax law, it is a problem that the tax rate differs too much just because the inherited property is a share large enough to control the company's management.

The professor emphasized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prevent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through unreasonable dominance of management rights by reducing excessive management rights premiums by strengthening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fterwa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heritance tax system to ensure that companies pursue profits.





So far, we have briefly discussed the main contents of innovation in Korean companies written by Professor Sang-seung Yi in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Next time, we will introduce the main contents of Professor Dong-hyun Ahn's 'Current Issues and Policies in the Financial Market.' This is Chapter 6 of the book.





6-5

Current Issues and Policies in the Financi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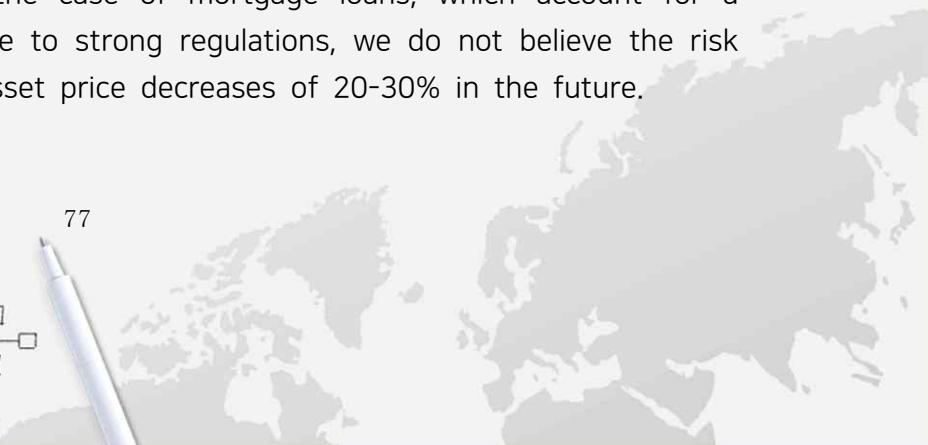
This time, we will briefly introduce innovation focused on finance which Professor Dong-hyun Ahn wrote about in *The Beginnings of Innovation*.

This is Chapter 6 of the book, titled *Current Issues and Policies in the Financial Market*. For long-term sustainable, stable economic growth, policy proposals for pending issues and innovation in Korea in finance, the driving force of capitalism, have been made.

First of all, problems in the current Korean financial market are diagnosed. Most notable is the sharp rise in household debt. This is a well-known fact, but it is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cause of the sharp increase in household debt is due to the recent low-interest rate phenomenon, but it is believe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s the skyrocketing house price due to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y.

Korea's household debt-to-GDP ratio showed moderate movements until 2016 but began to soar in 2017. This is precisely what coincides with the timing of real estate prices skyrocketing. A vicious cycle of rising real estate prices and increasing household debt, followed by gap investments, etc., led to real estate prices rising again, and increasing household debt was diagnosed. Ultimately, this surge in household debt has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entire macroeconomy.

Household debt increases in two major ways, one being mortgage loans and the other being subsistence loans. In the case of mortgage loans, which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household debt, due to strong regulations, we do not believe the risk of default is too great, even with asset price decreases of 20-30% in the future.





However, with shadow financing called jeonse, the implicit LTV ratio is very high due to the recent surge in jeonse, so if real estate prices fall, the risk of bankruptcy may occur, as in the case of 'can apartments.'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what the professor described is an accurate pred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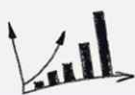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However, as a bigger problem, problems related to the risk of negative correlation coefficients in the asset market were highlighted. When people's wealth decreases, their risk aversion increases, and they tend to reduce the proportion of risky assets first.

In 2021, when this book came out, the bubble phenomenon in asset prices appeared simultaneously, not only in the real estate market but also in the stock and virtual currency markets, and the possibility of the bubble that expanded with the price of assets built up by debt bursting has increased throughout society.

If property prices fall in these circumstances, the stock price will also fall, and consumption could also take a hit as wealth declines as asset prices fall. In the end, the risk level of the entire macroeconomy has increased. This, too, is an accurat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2022.

In the end, there are warnings that the financial imbalance problem, in which asset prices rise and household debt soars simultaneously, has reached a serious level. Financial imbalance also means that the money released at low interest rates is not absorbed into the real economy and flows into the real estate, stock, and coin markets, causing bubbles.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respond preemptively before the asset price bubble bursts. And to solve the problem, we are diagnosing the Bank of Korea's base rate hike as one of the critical measures. As is well known, this is what is happening now i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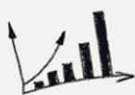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When interest rates rise, we expect that marginal and zombie firms will be hit, especially concerning businesses. However, since the COVID-19 crisis, the government has deferred principal and interest repayment of loans for many marginal companies. As a result, there is no process of distinguishing between good and marginal companies. Thus, if the base rate is raised in the future, it can be an opportunity to restructure these marginal companies.

In addition, the problem of expected employment reduction due to the dying out of marginal companies should be solved differently, such as in the form of new companies absorbing employment.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retraining for re-employment. In particular,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Generation X, who are expected to retire in the future, should pay attention to related reeducation so that they do not become digitally illiterate due to aversion to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fintech.

Based on this diagnosis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we are first proposing two policies to improve it. It i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short selling policy.

First of all, regar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rol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primarily divided into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 and the problem is that these two roles conflict with each other.

Strengthening macroprudential supervision will regulate financial institutions to reduce their operational risks. Financial institutions reduce risky lending, preventing money from flowing to the vulnerable. In the en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ith poor financial access, it can impose restrictions on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ause lo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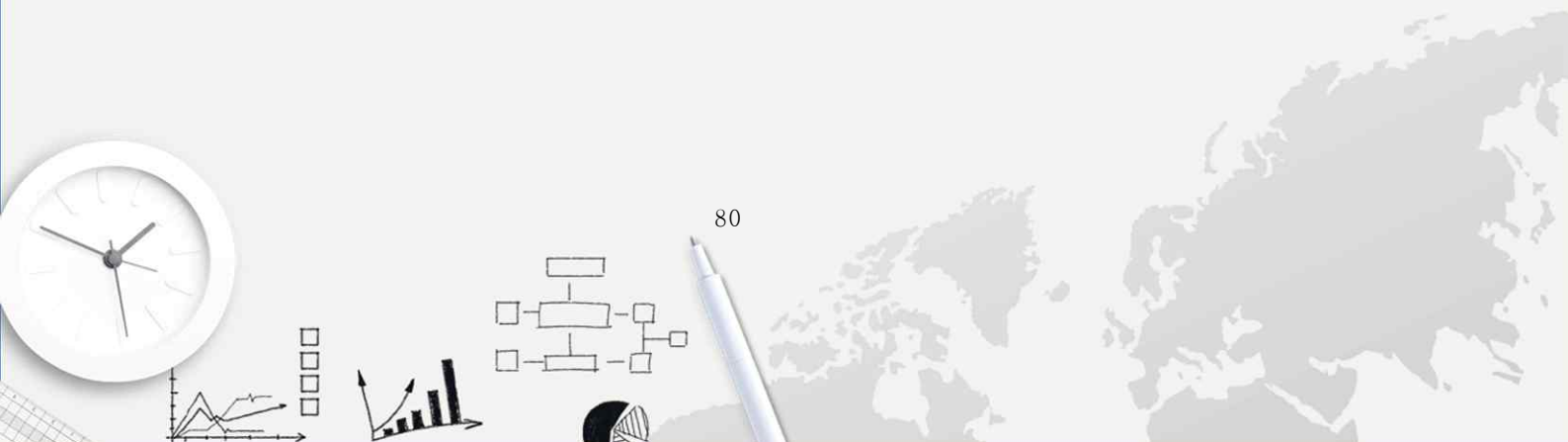


Alternatives such as creating a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or operating a double peak system have been proposed for this role conflict problem. The professor believes that the actual operation method is more important than the form of this organization. We also need to think about how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ll be handled. Ultimately, the separation of supervision and policy is important. In other words, what is essential is how neutrally it can be done while guaranteeing the independ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erm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must be predictable so that other side effects can be reduced and the behavior of the entity subject to supervision can be adjusted to meet the regulatory objectives. It also means that there is no need to make financial institutions pay excessive attention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Next is the short selling policy related to financial market related policy proposals. After COVID-19, there was much discussion around the resumption of short selling. Most scholars believe that short selling has a positive function, but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tock market.

Comparing Korea's KOSDAQ stock market with the US market, the number of stocks listed on the US stock market is decreasing. Stocks are reduced du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Silicon Valley companies in the US have little incentive to wait until they go public because their goal is to sell to a large company rather than go public. On the other hand, for Korean companies, maintaining an IPO is very important for fund recovery. As a result, many companies end up being listed, and companies with small sales are also li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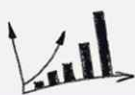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In this case, demand for stocks is limited, but as supply increases, the stock price's upside potential is damaged. Above all, the drop in trading volume makes price manipulation easier. In the case of the KOSPI 200,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but in the case of the KOSDAQ market, many companies with small trading scales are listed, so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market price even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atch foreign trade and market price manipulation through overseas trading, even with a supervisory authority.

Ultimately, in a situation where the supervisory system is incomplete, as in the present cas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o some extent on stocks with low trading volume. It is also conceivable to prevent one entity from holding a short selling position beyond a certain level.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which is close to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needs to be tweaked.

Lastly, virtual currency and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financial and big tech companies are also mentioned regarding futur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First of all,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whether it will be a means to replace the current currency is seen in a negative light. The central bank is willing to keep the huge profits generated through coinage. However, even if virtual currency does not replace current currenc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function to store some value like gold.

Goods that people trust have value. A typical example is oil. We're reminded that as the function of oil was discovered, its value has changed from a substance that pollutes the soil to a goose that lays golden eggs. When we start giving preference and trust, the value of that good goe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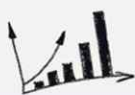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Regarding virtual currency,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 separate organization is needed to properly handle coin listings, such as the listing committee of the exchange and KOSDAQ.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real-time analysis tool such as the Exchange Market Surveillance Committee to check whether there are unfair trades.

It is good to take this as a method of granting independence by creating a joint organization centered on exchanges that have registered businesses according to the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ct. Detailed data on virtual currency exchanges should be reported to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which monitors money laundering.

Next, regarding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financial companies and big tech companies, traditional financial companies and big tech companies are currently competing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For example, ICT companies represented by Naver and Kakao are actively advancing into the financial market and competing with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They predict that the competition will become more fierce in the future.

In particular, Kakao's strength is its ICT technology, which is taking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from the digital mindset of existing banks. Many people already use KakaoTalk, and since finance is linked to it, it is difficult for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to follow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eased the level of regulation as a policy due to the nature of internet-only banks.

There is no place with as many banking regulations as Korea, but in a way, it can be seen as reverse discrimination in regulations. In the end, it's noted that existing banks must step up to survive in this competition. Of course, existing banks are also engaged in an all-out digital war, so the digitalization gap is expected to n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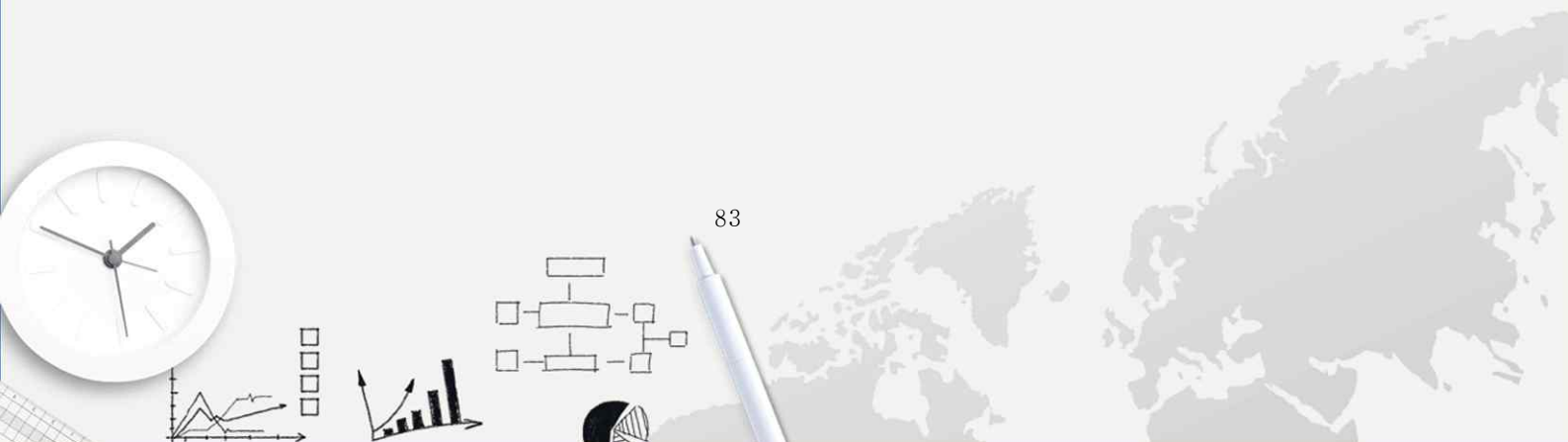


In addi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lieves that existing and internet-only banks will be placed on an equal footing and regulated horizontally. And unlike so far, this movement is expected to act as an obstacle that big tech companies, including Kakao Bank, must jump over to grow further.

However, no matter how strong the digital foundation is, it will be difficult for existing banks to easily cope with big tech companies that can easily expand their business based on a widely used platform. In addition, we have to go beyond the bold and innovative operation method based on big tech companies' flexible thinking and technology. In the end,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are expected to survive by transforming themselves.

So far, I have briefly introduced the rest of the book, written by professors who were not present with us. We hope you heard some honest answers from experts regarding the question of what innovations are needed in each part of the econom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nd maintain stable growth over the long term in the future.

Next time, we will change it up a bit and invite a reader to listen to their thoughts about the book. I look forward to hearing how the reader responded to the thoughts presented by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n innovation for the sustainable and st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rom their point of view.



**6-6****Interview with a r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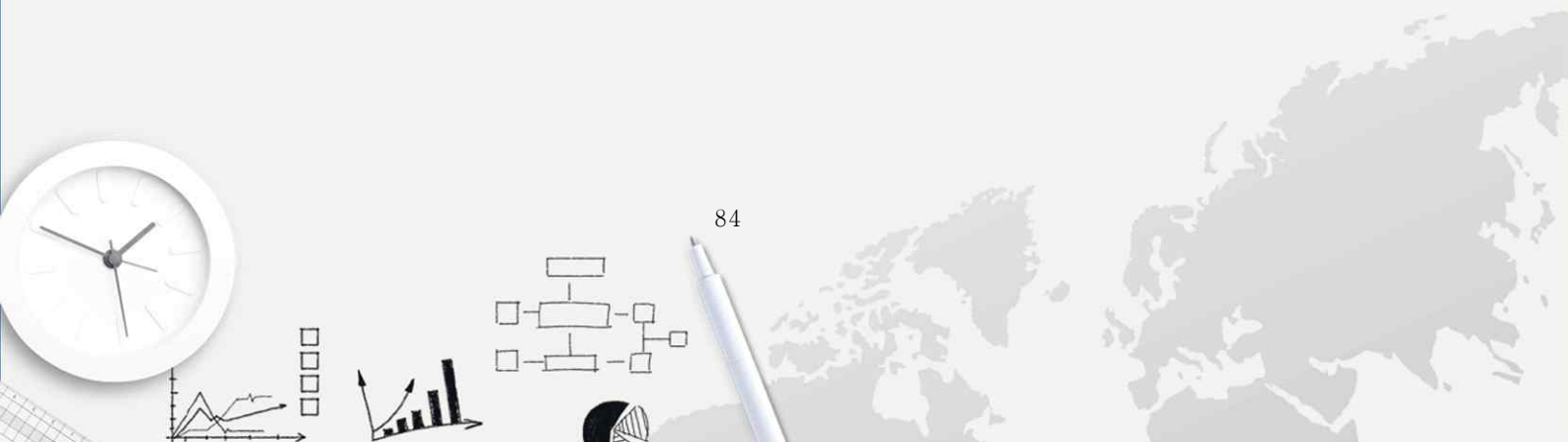
As mentioned, we will invite a reader to listen to their thoughts about the book. I'm curious to hear how the reader responded to the thoughts presented by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n innovation for the sustainable and st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rom their point of view. I will ask them a few questions to hear their opinions.

<Host>

Hello.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participate in this interview.

<Ki-hoon Park>

Yes, hello. My name is Ki-hoon Park. Recently, professors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a book suggesting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the Korean economy. A friend read it and liked it, so I borrowed the book from them and read it. It's an honor to be part of this interview.





<H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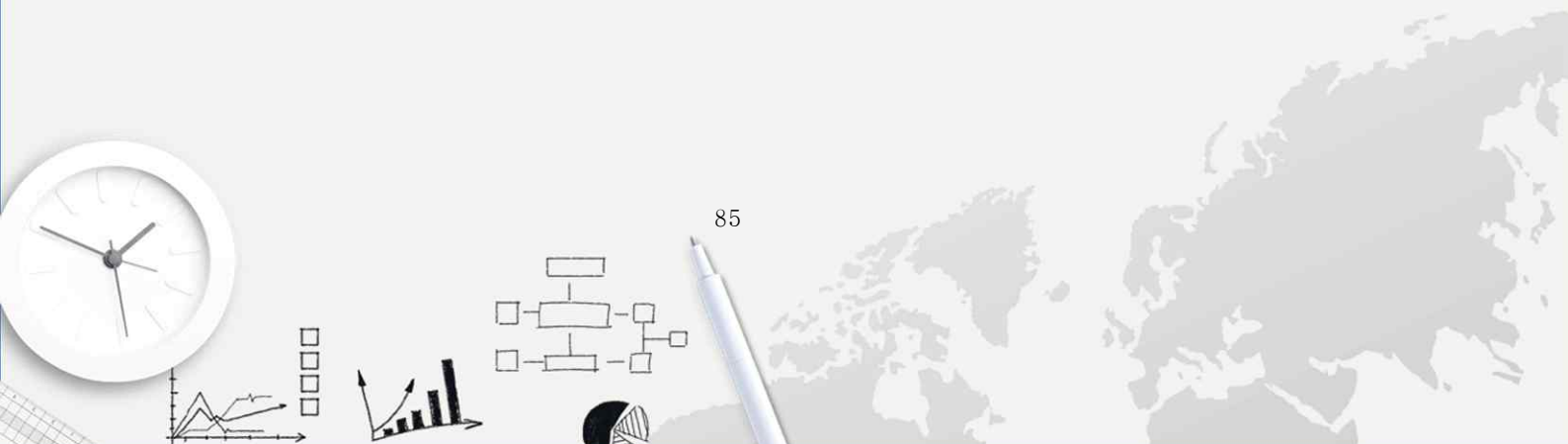
Oh, I see. What were your overall thoughts about the book? Was it as you expected? I'm curious to hear how a young person not directly in economics felt as a general reader.

<Ki-hoon Park>.

Right. First of all, this book was very interesting in that it covers most of the major topics that I have been curious about in my way regarding the recent Korean economy. And it was good that the professors presented very clear prospects and alternatives from their perspectives rather than just summarizing the current situation.

Above all, it was written in a relatively easy way for non-majors and ordinary people like me to read. Sometimes, when several professors publish a book together, they write for an audience more familiar with the subject matter without making it accessible to general readers.

However, this book did not contain many complicated terms, even for me as a non-major, and diagrams that were difficult to interpret were included in the detailed notes. It was easy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innovation that the authors aimed to talk about because the main points they wanted to get across were explained in simple words before the in-depth notes.





<Host>

I see. Understood. It sounds like it was a very satisfactory read, as expected. From what you read and each author's critical opinions, which parts did you particularly connect with? And please explain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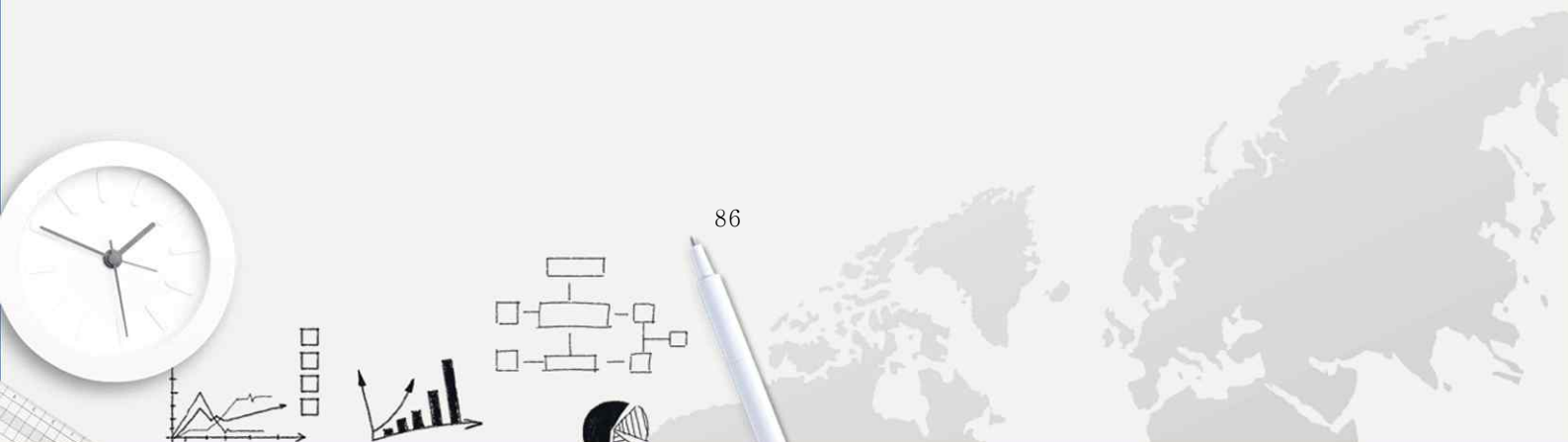
<Ki-hoon Park>

What left an impression on me the most was Professor Biung-ghi Ju's article titled "The virtuous cycle of fairness and innovation." 'Fairness' has been a hot topic for the past few years.

Many considered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aking the unfair Korean society fair. But, I was very sympathetic to the point that meritocracy is a hotbed of injustice and has problems that cause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Recently, 'fairness' has been an issue that has been highlighted in Korean society, and it is a word that the young generation to which I belong reacts very sensitively to. This is my personal thought, but many people have discussed 'fairness' so far, but sometimes I feel their discussion is not productive even though they're producing an argument. I thought Professor Biung-ghi Ju pointed this out very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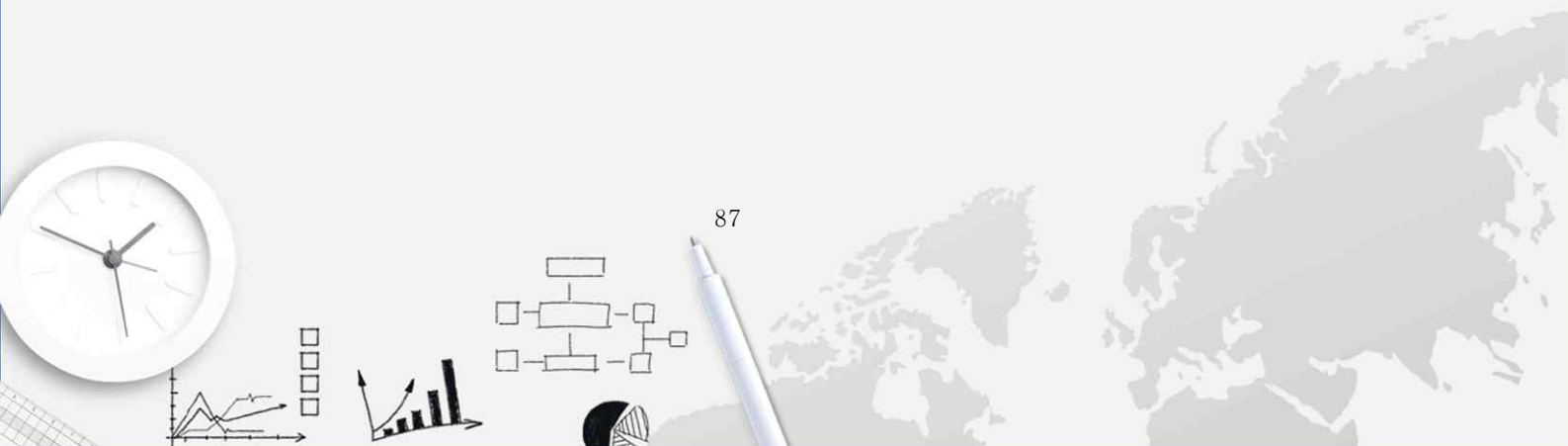
And those who've put forth meritocracy believe they are 'just' because they are 'fair.' However, looking at the professor's in-depth notes, it is clear that Korea is actually a country where inequality of opportunity exists according to the household's socioeconomic status. I understood this part well because it was shown to me that this inequality of opportunity is one of the factors preventing the Korean economy from innovating.





During my parents' time, people could climb the social ranks through edu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my generation to do this through education. Nevertheless, the people of the upper class say that what they enjoy is the result of winning in meritocracy, and that is 'fairness.'

This article clearly pointed out this problem, st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ir system by focusing on education and welfare and to create a society in which all members can contribute to economic innovation. I agree with this.





<Host>

I see. I understand that you resonated most with fair innovation, perhaps because you're from the younger generation. Were there other parts that left a notable impression on you besides fai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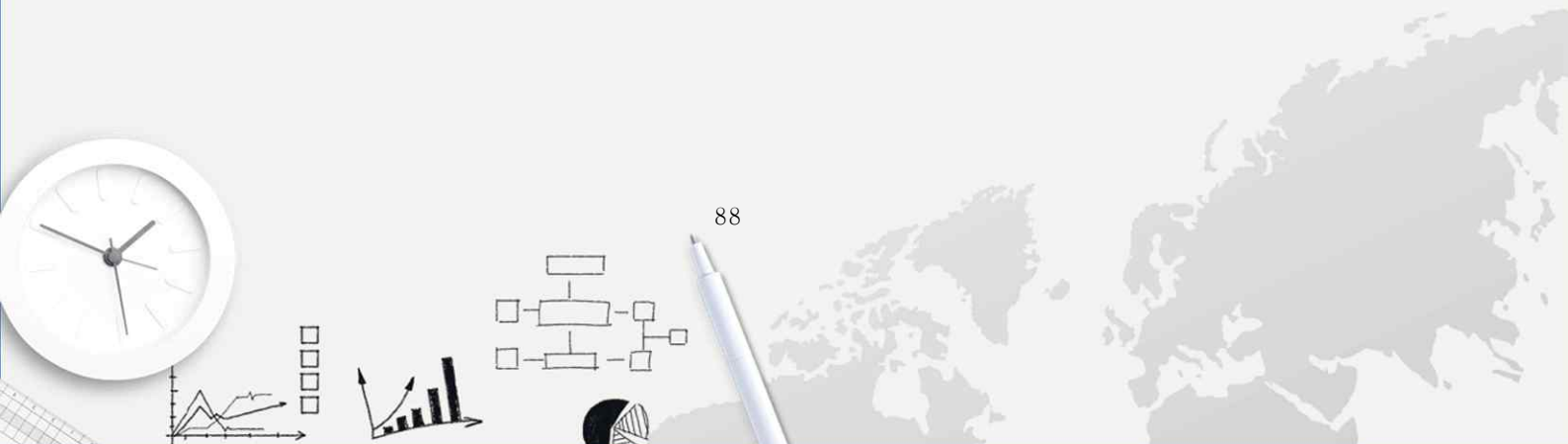
<Ki-hoon Park>

Professor Chul-hee Lee's discussion on solving the population problems. I enjoyed reading it because the description of the key to solving the demographic problems, such as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the consequent aging poverty and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has provided an unexpected solution.

It would be nice if we find a solution to the low birthrate problem, but I also agree that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easily solved. This is something we are witnessing in this situation, but the easiest solution for the government to find is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However, this policy has the problem of bearing a high social cost due to cultural differences. In addition, if the current distribution of foreign workers by industry is maintained, the article points out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mitigate the potential imbalance of labor supply and demand due to future demographic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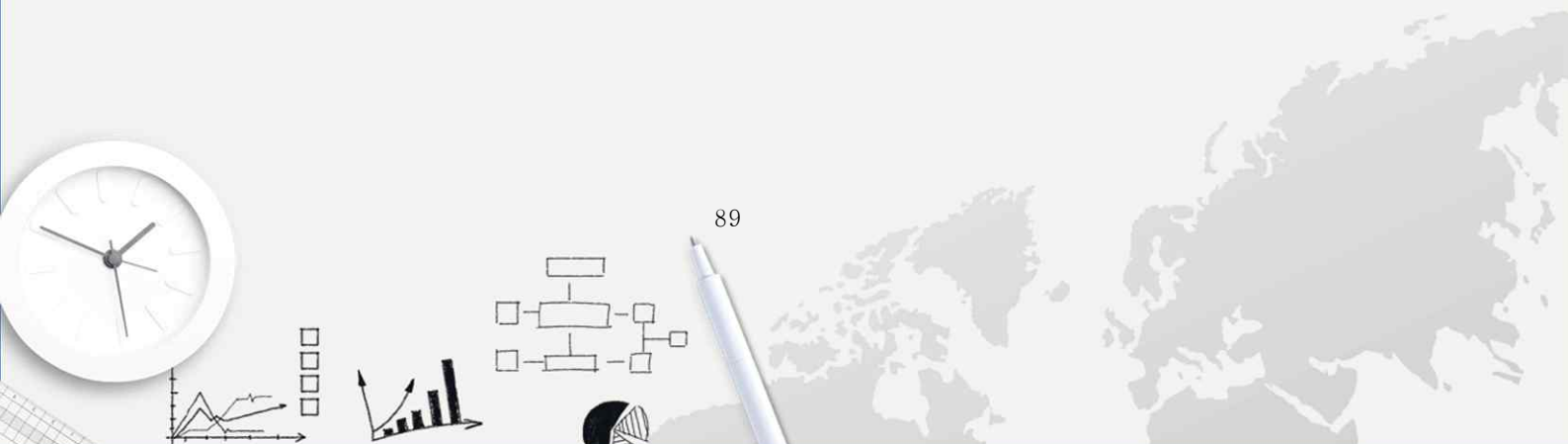
And as a solution to this,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in the workforce will overwhelm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He stated that i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nd the elderly is improved, it will greatly help alleviate the declining labor force due to demographic change. It was a very persuasive argument, so it was interesting.





I also thought it was important to find a way to better use the existing workforce as an alternative if the low birth rate problem could not be resolved immediately. I agree that we must think about and find a solution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whose careers have been interrupted and how highly educated middle-aged and older adults can be put to work while minimizing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n that sense, I wonder if the professor's proposal on the population problem will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 population to some extent regarding the Korean economy.





<Host>

Thank you for your answer. This is the last question. Assuming this book is to be published in a supplementary edition, is there any topic you would like to see additionally addressed for innovation in the Korean economy?

<Ki-hoon Park>

Personally, it would be nice to have an additional description of the impact of 'concentration of space' on the Korean economy. As you know, Korea is a society where everything is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is was a great strength in the rapi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economy. At the same time, it caused big problem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 low fertility rate due to too high cost of space, and disappearance of provincial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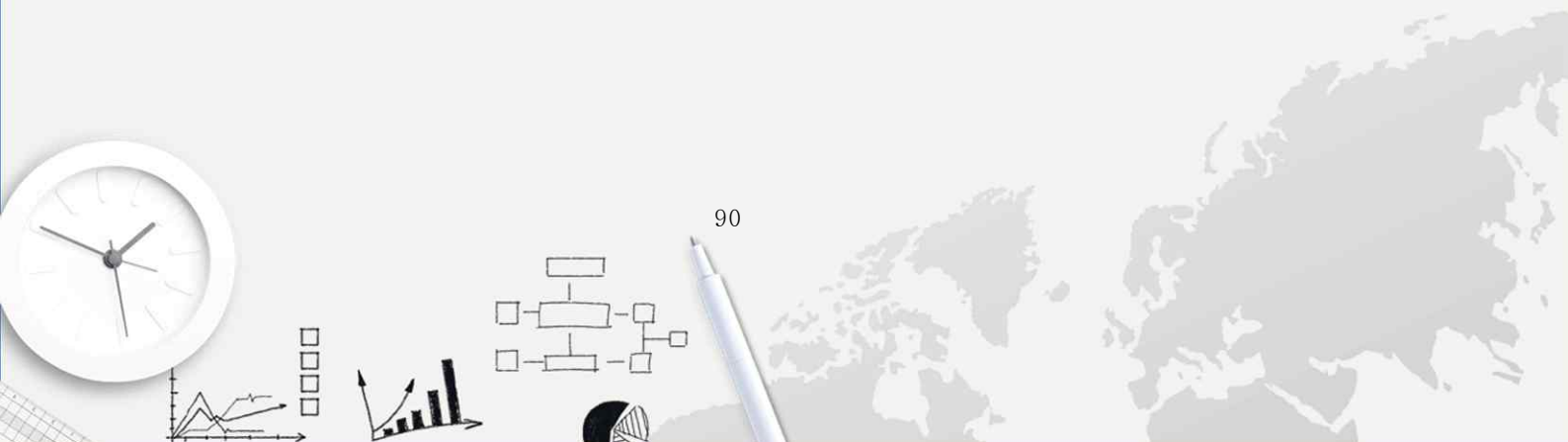
In the case of the low birth rate and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which are currently being raised as problems in Korean society, I thought that the cost issu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space' played a big role. Checking on the current status of this problem and suggesting ways to solve it will be an important topic for thinking about innovation in the Korean economy.

<Host>

It was brief, but thank you for your honest answers.

<Reader>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6周

革新的开始，余下的话题

6-1

革新的开始，目前已谈的话题及余下的话题

大家好，我是裴锡满。本系列讲座的主题是“韩国经济的革新与未来”，这是在韩国经济与韩国学术传播中心的企划下，与首尔大学韩国经济革新中心合作进行的讲座。

2021年秋，首尔大学经济系的八位教授从不同角度对目前的韩国经济进行了诊断，其目的是为了找出促进韩国经济持续增长的革新政策。为此，他们以连续受访的形式在每日经济新闻上发表了各自的见解，在韩国经济革新中心的主导下把这些见解进行了整理，于年末推出了名为《革新的开始：如何再次提升韩国经济的增长潜力》一书。

在本系列讲座的前5次讲座当中，我们邀请了参与上述工作的几位教授为我们介绍了他们各自的研究成果，除原有成果之外，教授们还介绍了他们最新的研究成果及见解。

本系列全部讲座由6讲组成，参与《革新的开始》这部书的部分教授没能亲自参与讲座，对此我们深表遗憾。那么，今天通过本系列最后一次的讲座，我们将整本书的主要内容进行一个简要介绍。

《革新的开始》一书是以宏观经济政策、产业、企业、金融为关键词，对创新进行的展望。在讲座的末尾，我们会邀请一位读者，以简短的采访形式听取读者对本书的想法、感想等。

本次讲座也是这一系列讲座的一个总结，在正式开始之前，我们先简单整理一下过去5讲中教授们所介绍的内容。

首先，在第一讲中，负责《革新的开始》一书整体企划的金炳椽教授以“革新”为关键词为韩国经济的现状进行了把脉，并提出本书的企划意图是要提示韩国经济未来的发展蓝图。





首先，以"革新"为关键词的问题意识是以目前韩国经济处于十字路口为前提的。虽然最近韩国被评价为进入了发达国家的行列，但是作为短期内快速成长的代价，韩国经济的后遗症正在浮出水面也是事实。一方面，韩国社会进入低生育、高龄化社会，与此同时，接连的政策失败、中美矛盾和新保护主义等外部变数也接踵而来，韩国经济面临着国内国外的巨大挑战。

此外，虽然是最近突发的变数，但长期持续的新冠肺炎和乌克兰战争也是导致韩国经济的未来不容乐观的因素。目前高涨的油价、通货膨胀、经济萧条等，不仅让人想起20世纪70年代使全世界遭受痛苦的石油危机，还让人联想到滞胀的前景，感到未来一片黑暗。

金教授说，最终韩国应该摆脱这一挑战，去思考为实现韩国经济稳定的、可持续的增长应该做些什么。得出这一判断是推进教授们此次共同研究的开端。

同时，金教授还强调说，这本书还努力为新政府为了实现经济稳定的、可持续的增长而必须推进的经济政策革新应该朝什么方向进行，应该解决什么课题提出了蓝图，这也是这本书的副标题。

接下来，在本系列讲座的第2讲中，朱丙起教授以"公正"为关键词谈到了革新。这是因为公正的社会是经济发展的重要原动力。这也是迄今为止许多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所经历的经济发展历程上的重要教训。

朱教授强调，在不平等程度低、阶层间壁垒不高的国家，经济开发更加成功，这是被历史证实的事实。一个拥有公正社会的国家能够更长久地保持经济增长。公正本身就是比创新更为重要的目标。而为了实现革新、经济发展以及经济增长的目标，公正的市场和公平的分配是必须的。

朱教授广泛地介绍了韩国经济中可以称之为掠夺性资本主义(predatory capitalism)的企业生态、收入差距、性别歧视、能力主义导致的社会不平等以及社会两极化等的实际情况。作为解决方案，他强调了加强教育和创业的阶层阶梯功能。





朱教授指出，加强教育的阶层阶梯功能，就是要建设一个让所有青少年都有平等教育机会的社会。最重要的是让来自不同社会阶层和不同地区的学生都能接受良好的大学教育，并强调名牌大学应该带头做出这样的努力。

要选拔有潜力的不同背景的学生，通过大学教育为他们提供实现潜力的机会。通过这种方式提高大学的社会贡献度，开启大学和社会、经济共同发展的道路。

加强创业、就业的阶层阶梯功能可以通过两个途径实现。一个是营造一个即使大学没有毕业或没有进入名牌大学的人，甚至平凡的兼职生都能取得成功、成为名人的社会，另一个是企业要摆脱传统的通过学历来选拔有能力的人才的刻板的聘用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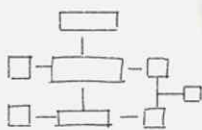
同时，朱教授建议以公共企业和公共部门为中心，增加高中毕业生人才的聘用和扩大地区人才的聘用，这也是消除阶层及地区间机会不平等、实现就业的阶梯功能的好方法。如果这一建议能够取得成功，预计首都圈集中现象也会得到解决。

在第3讲中，李政玟教授讲述了韩国劳动市场的革新。首先，劳动市场是对人力资本进行生产和适当分配的地方，一直以来，韩国的经济增长是以人力资本的增长为基础而达成的，由此可以说韩国的教育体系非常成功。

高质量大众教育的成功是引领韩国高速发展的根本动力。李教授强调，韩国今后的课题是为革新培养优秀人才，培养能够成为世界级领导者的革新人才。

李教授还强调了关于劳动市场的革新，需要慎重以对。作为代表性事例，介绍了目前韩国社会的代表性话题之一的女性经历中断。要解决这一问题，在政策应对上需要多种方式。比如说，高学历、高收入的专业女性和低工资、低熟练度女性所需要的政策支援可能完全不同。

子女的年龄，学龄前儿童和小学低年级、小学高年级以上，这些对女性劳动供给所产生的影响也是完全不同的。有购买力的消费者可以根据各自的情况，灵活利用保育机构或服务机构提供的服务来替代女性需要在家中度过的时间。





关于劳动政策，就目前政府实行的代表性政策——最低工资制度，对于未能对工资不平等产生积极影响的研究结果介绍得非常具体，这一点也令人印象深刻。

第4讲以革新需要解决的人口问题为主题，邀请了著名人口学家李澈羲教授进行了介绍。对于已经面临低生育率，步入老龄化社会的韩国来说，如何解决这一问题，实现经济的长期可持续发展，李教授进行了非常有意思的介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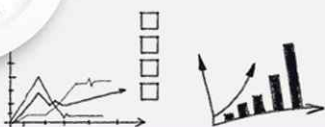
李教授说，首先，低生育率、老龄化问题严重已经是众所周知的事实，预计韩国总人口数在不久的将来便会减少。但是，比这更重要的事实是除了这些统计数据以外，还有一些鲜为人知的更重要的事情。那就是由低生育率和人口老龄化所引发的人口结构变化的不确定性以及人口的质量正在发生变化。

比如说，与现在的高龄人口相比，现在30~40多岁的未来高龄人口中高学历者所占比重增加，更健康的可能性也更高。所以他强调要以高学历的，更为健康的高龄层，也就是说，以“新老年层”为前提，为应对未来做准备。虽然很多人担心低生育、老龄化会导致劳动人口大幅减少，从而产生社会费用，但是这种忧虑其实过大了，实际上在不久的将来劳动人口可能不会大幅减少。

当然，即使如此，也不能避免低生育、老龄化导致的青年劳动人口的减少。这一问题的解决方案是为了使减少的青年劳动人口能够发挥出过去（青年劳动人口未减少时的）水平的作用，劳动力市场应变得更加灵活，提高劳动力的移动性。

为此，首先，在劳动市场之外，应该通过大学教育系统的变化使大学教育向支援劳动市场功能的方向发展。同时，大学教育体系需要灵活化，脱离现有的僵化的教育体系，更敏感地对市场需求做出反应，开设跨学科或新学科来培养人才。

劳动市场内部也需要加强自身的劳动移动性，制定对现有人力的再教育及再分配方案等，以此应对新就业劳动力的减少。同时，与劳动人口的绝对减少相比，首先要关注劳动供需不均衡的问题。李教授还指出，女性劳动和外国劳动力的有效供给也是必要的。





第5讲，我们邀请了朴祉炯教授为我们介绍了与促进韩国经济革新，实现经济增长为目的的贸易问题。

朴教授首先指出了以"出口指向型工业化"为特征的韩国外向型经济发展的成果和局限性。

朴教授说，韩国经济是通过外向型经济政策、企业活动以及文化活动等打破了狭小的国内市场的局限发展而来的。在韩国经济的创新及其未来中，这种外向型指向仍将占据重要部分。

他强调，（在贸易领域）现在面临的课题是要强化这种外向型韩国经济的优点，弥补其缺点，制定出能够长期持续增长的通商及产业政策。具体来说，首先在政府层面上应该努力维持并强化现有的自由贸易协定。

同时朴教授还强调，企业也应该认识到这种贸易保护主义政策的风险，在开展全球经济活动的时候，要考虑到这一点。政府应该具备应对外国过度贸易保护政策的体制，在保护本国企业的同时，对于现有自由贸易协定的履行及运营，需要加强与协定国的合作体制。

关于美国和中国之间的贸易摩擦越来越严重的情况，朴教授提到重要的不是"美国还是中国"，而是要以自由贸易等普遍价值为中心，发出"基于原则的 (Rule based) "的声音。也就是说，在中长期贸易政策方面，首先有必要明确表明为了恢复多边主义的国际贸易秩序，韩国愿意积极参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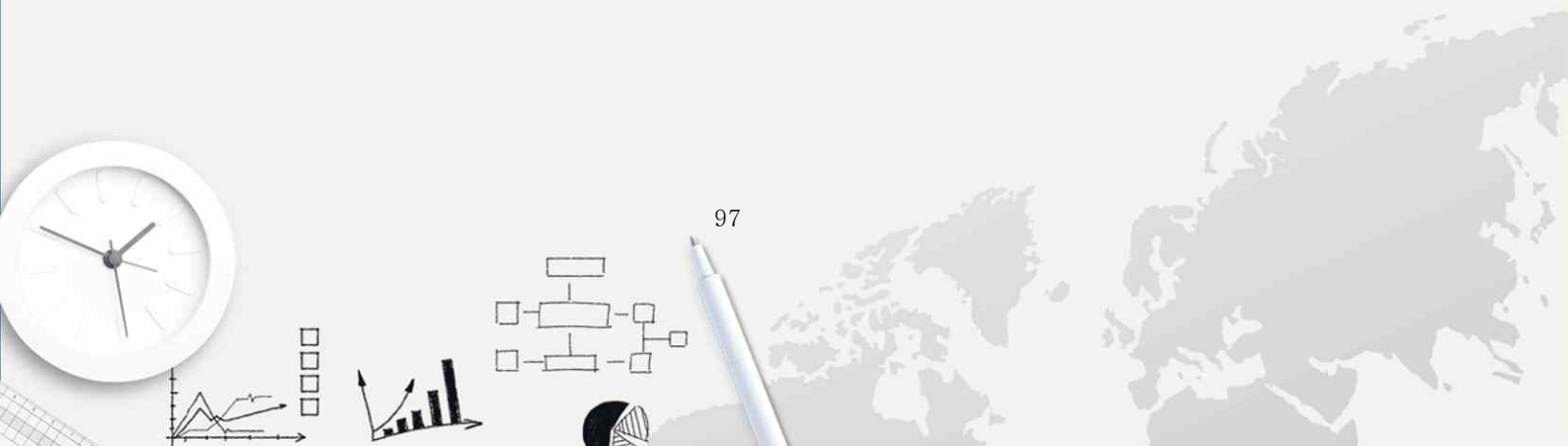
就是说，不要只是因为国家利益而选择站在美国或中国当中的任何一方，而是为了实现能使世界经济透明、公正运行的普遍价值，选择采取和执行中长期贸易政策的立场。只有这样才能反对中国和美国任何一方的恣意行动，最终可才能守护国家利益。

以上是对之前五次讲座的简单总结。除金炳椽教授介绍了《革新的开始》一书的企划初衷之外，其他几位教授分别从自己的专业角度介绍了社会、劳动、贸易领域应该以如何开始创新。





现在我们进入这次讲座的正题，虽然参与《革新的开始》这部书的部分教授没能亲自参与讲座，但是我们还是要听一下这本书其余部分的内容。 接下来，首先从金素英教授执笔的经济政策相关部分开始。





6-2

创新增长和宏观经济政策

这一节里，我们将简单介绍一下《革新的开始》一书中由金素英教授执笔的政府宏观经济政策的主要内容。

这部分内容是书中的第一章，题目为“创新增长和宏观经济政策”。其内容主要是为了实现长期可持续的稳定的经济增长，政府在宏观经济政策方面该如何革新。首先，我们从经济增长的前景和所面临的风险开始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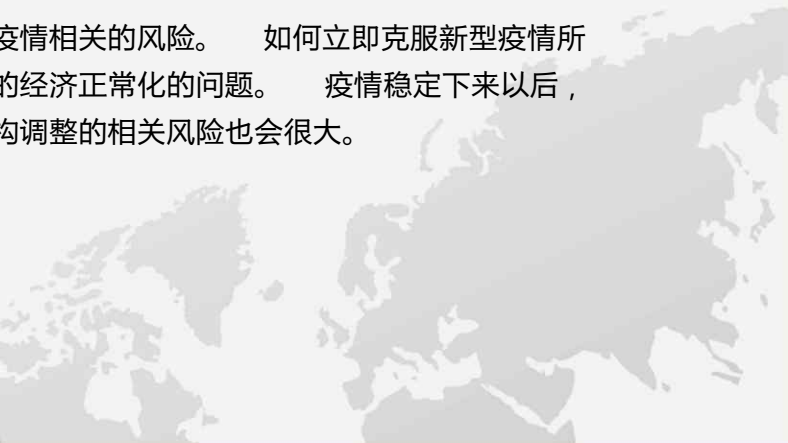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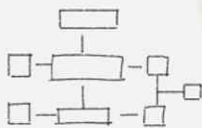
首先，韩国经济增长的短期前景并不乐观。书中提到，如果新型冠状病毒的基底效果消失的话，韩国经济将回归到2%左右的增长趋势。到2022年为止，新型冠状病毒以后持续的经济刺激政策可能还能发挥出一定效果，但即便如此，如果从2023年开始没有特别对策的话，财政及货币政策的效果就会消失，经济会变得困难。

由于政府支出的持续增加，民间部门可能会出现萎缩的情况，政府负债激增也可能会引发问题。家庭负债的激增，后疫情时代对竞争力下降的僵尸企业进行产业结构调整的问题也仍然存在。

虽然最近有人担心会出现经济停滞和物价暴涨叠加的现象--即滞胀现象，但实际上这种可能性并不大。如果新型冠状病毒事态恶化，经济会更加恶化，最终会导致物价上涨的压力降低。相反，如果新型冠状病毒事态稳定下来，经济恢复的话，供应费用，即原材料价格和国际油价上涨等则可能带来物价上涨的压力。

但即便如此，这也是随着世界经济的恢复，需求因素导致的物价上涨压力。与供应因素导致油价上涨的典型滞胀情况是不同的。

最终，韩国经济所面临的重大风险是与应对新型疫情相关的风险。如何立即克服新型疫情所带来的困难非常重要，然后就是如何实现疫情以后的经济正常化的问题。疫情稳定下来以后，之前各个经济部门累积的负债会恢复正常，进行结构调整的相关风险也会很大。





为了应对新型疫情而剧增的家庭负债和政府负债的增加速度要恢复正常。另外,对于那些虽然竞争力低下,但由于政府的支援增加而尚未对其进行结构调整的个体户和僵尸企业的结构调整也要开展起来。

也就是说,在经济正常化之后,如何对在新冠之后陷入困境的部门进行结构调整使之成为新产业,这是当前需要解决的重要课题。书中还强调,不仅是要进行产业调整,还要帮助那些调整对象产业的从业者能够顺利地转移到新的产业中去。

紧接着,书中认为韩国经济的中长期展望也不是那么乐观。因为预计经济的低速增长会一直持续下去。2008年金融危机以后,总要素生产率一直停滞在1%以内,为0.9%。在这种情况下,无论投入多少资本和劳动力,长期增长率都不会提高。用一句话概括就是'这等于是往无底洞里灌水'。

但书中也同时指出,韩国所经历的低增长是一个国家在成长过程中必然会出现的现象。比如说,在一个国家全面发展经济的初期,通过建设工厂等积累资本来实现经济增长。在这个阶段,随着工厂的从无到有,生产得以实现,因此建厂效果显著,经济增长率高。

但是此后随着资本积累的逐渐进行,增长速度逐渐变慢。即所谓的是边际生产递减。也就是说,在工厂已经很多的情况下,即使追加建设工厂,其效果也不大。

书中强调,这是大部分发达国家已经出现的典型现象,要想阻止这种情况的发生,仅靠资本的积累是困难的,最终需要通过新的革新或技术的发展从而衍生出新的增长方式。韩国经济也是一样的,要想阻止经济的低速增长,就必须加快技术发展速度。也就是说,应对低增长的根本性对策,就是实现技术革新和发展,提高生产效率。

书中还强调,在现代经济中,技术创新和技术发展主要发生在民营企业。通过政府主导很难实现。政府是否有能力分辨革新技术都是个问题。营造一个能够促进技术革新和发展的经济环境也很重要。要废除(不必要的)规章制度,扩大生产,政府要充分利用市场经济,也就是说,如果由政府主导展开物量攻势,就不可能摆脱经济低增长的局面。





在韩国经济的短期展望和中长期展望均不乐观的情况下，对于“政府的经济政策应该朝着什么方向发展”的问题，书中以货币政策和财政政策为中心进行了解答。首先在货币政策方面，因新冠疫情和因世界经济的原因，预计利率将会上调，这种情况下政府应该容忍一定的利率上升。

基准利率有可能达到3%，对于今后的利率上升，国民也要做好应对。从长远来看，只有基准利率上升，家庭负债才能减少，因此利率的上升也会有积极的影响。这本书是在2021年出版的，可以看到2022年基准利率的情况与金教授在书中的预测大体一致。

书中还重点谈到了货币政策中资本市场的稳定问题。以最近股票和房地产等资产价格暴涨所引发的对韩国资本市场是否存在“泡沫”的讨论为前提，书中指出资产价格在短期内急剧增加是不争的事实。短期内暴涨，就很可能再次下降，因此资本市场是存在风险的。

而且，今后在货币政策正常化过程中，如果发生个体户或企业破产等状况时，大的下行风险有可能成为现实。这是在2021年的时候所做的预测，在股市中，认为股票价格理所当然会上涨的氛围是非常高涨的，问题是以后可能会对股市进行调整，也就是说，国民也要考虑到今后资产价格会下降的可能性，做好应对准备。从目前的情况来看，这可以说是正确的预测。

同时，从房地产市场来看，现在的房地产市场几乎没有追加供应，从需求方面来看也是一样，人们想要的房地产很少，房子也很难售出。目前房地产价格还处于上升趋势，但也不能排除随着时间的推移对房地产市场进行调整的可能性。

对于政府的房地产政策，书中认为应该改变房地产政策的目标。一直以来政府的房地产政策未能成功稳定房价，再加上稳定房价也不是万能的。即使房价稳定了，如果由于房产税负担或无根据的规定导致国民既买不了房子也卖不了房子，甚至也不能随心所欲地搬家的情况出现的话，这最终也是失败的政策。

也就是说，无论有房子还是没有房子，全体国民都希望能在更好的居住环境中舒服地生活，政府应该为满足国民的这一美好愿望来制定政策。从这一角度来看，住宅价格稳定可能是实现这一政策目标的手段，但手段本身不能成为目的。





接下来说一说财政政策。财政政策上最重要的是要与货币政策保持协调以及确保财政上的健全性。 货币政策和财政政策的主要区别在于货币政策是以整个经济为对象的政策，而财政政策是可以分部门执行的政策。

目前新冠疫情对经济（各领域）的影响是参差不齐的，虽然疫情给所有人都带来很多不便，但大多数（业体）相对来说还是能坚持的。然而，面对面的服务业等特定部门因为疫情正在遭受巨大的困难。

考虑到这一点，在货币政策将其着眼点放在整个经济上，根据经济复苏的情况实行货币政策正常化的同时，即货币政策上实行利率上调的同时还应该针对不同部门的情况，对没有恢复的部门采取财政政策（上的帮助），这样做会比较合适。

反过来说，也有可能会出现由于财政政策以全体经济为对象过度扩张而导致需要实行紧缩货币政策的情况，可以说这是不恰当的政策组合。 比如说，为了应对疫情，持续以全体国民为对象使用灾难支援金卡就是不合理的。

当然，2020年对全体国民的首次支援，在一定程度上是适当的措施。当时由于新冠疫情的打击，经济状况非常困难，而且对（疫情防控可能产生的）效果也没有准确的把握。 但是现在，新冠带来的传染病事态已经过去了相当长的时间，我们已经知道了疫情会对什么人产生怎样的影响，这种情况下继续以全体国民为对象提供支援可以说是没有效率的。

如果国家财政是可以无限使用的，那当然不会造成什么问题。问题是财政不是可以无限使用的，对财政的过度使用会导致国家负债的急速增加。在搞活经济方面，（以全体国民为对象的支援政策）其效果也不大。 实际上，（韩国经济的）乘数效果也只有0.3左右，也就是说，投入100万韩元的灾难支援金，这笔钱在搞活经济中只能发挥出30万韩元的效果。 所以，最终在财政政策上，进行有区别的支援才是有效的。也就是说，应该对受新冠疫情打击最重的部门进行集中支援。





其实，在新冠疫情爆发之前，就已经有人担心政府的财政健全性了。政府筹集财源的方法有很多，可以售卖韩国银行的国债，也可以增税。但是，韩国银行的国债直接认购是指用印钞来筹措政府要使用的资金，韩国银行的独立性会因此受到阻碍。韩国银行作为中央银行，只有独立执行货币政策，才能管理通货膨胀，以及使经济保持健康状态。

财政运营也会因国债发行而变得松懈。每当政府需要的时候就发行债券或印钞，在财政运营上如此随意的国家大部分都会经历“超级通货膨胀”，即会遭遇失控的急速物价上涨或外汇危机。从这一点来看，中央银行的国债直接认购从根本上讲是存在危险的。

关于这个问题，有韩国学者和美国学者主张MMT（即现代货币理论），但其实，很难把MMT理论看作是正确的经济理论。MMT理论认为，为了刺激经济，可以持续发行货币并大规模投放资金。但是，从（韩国经济）已经开始出现通货膨胀征兆这一点来看，MMT理论很难适用于韩国。书中强调，大家都希望国家花钱，如果继续花钱，也许马上就会有明显的效果，但是最终这会带来很大的副作用，一定要注意这一点才行。

接下来关于增税问题，首先，尽管韩国政府的负债增速快是一个问题，但其实快得并不多。只要能减少不必要的支出，当前问题不大。

当然，低出生率和老龄化导致了福利支出的增加，如果国民希望得到更多的福利，在公开讨论并与国民达成协议之后可以考虑长期增税，但是从目前来看，比起为了确保财政健全性而增税或让央行直接认购国债，提高财政效率更为重要。

要从整体上谋求财政政策的效率化，为此首先要明确财政目标。在财政支出上，“应该既能刺激经济，又能救济穷人，又能拯救地区”才行，这样的政策很可能连一个目标都无法实现，只是发生了费用的支出而已。书中强调在确定正确目标后，必须使用最有效的政策来实现这一目标。





最后，关于政府宏观经济政策的创新，书中提出了如下建议。此前，政府的宏观经济政策一直强调分配，但后来出现了（与政策初衷）相反的效果，所以政策走向变成了促进增长；促进增长的政策在实施过程中产生了副作用，于是政策走向又重新趋于分配，如此循环反复。因此，在目前情况下，政府应该朝着强调增长和分配兼顾的方向制定经济政策。

在促进经济增长的部门实行制度改革，构建公平竞争和以补偿为前提的市场机制，打造充满活力的经济生态环境，通过创新实现经济的先导型成长。在分配部门，不仅要单纯地支援困难阶层，还要致力于创造平等的机会，减少因（收入）两极化带来的不满。

以上便是对《革新的开始》一书中由金素英教授执笔的政府宏观经济政策主要内容的简要介绍。在下一节，将介绍李根教授的“全球供应网变化和产业革新实力”的主要内容。这部分内容是书中的第2章。





6-3 全球供应网变化和产业革新实力

这一节，我们将对《革新的开始》一书中由李根教授执笔的韩国产业革新的主要内容进行简要介绍。

这部分内容是书中的第2章，题目为“全球供应网变化和产业革新实力”。其内容主要是为了实现长期可持续的稳定经济增长，对韩国产业界的革新方向提出的建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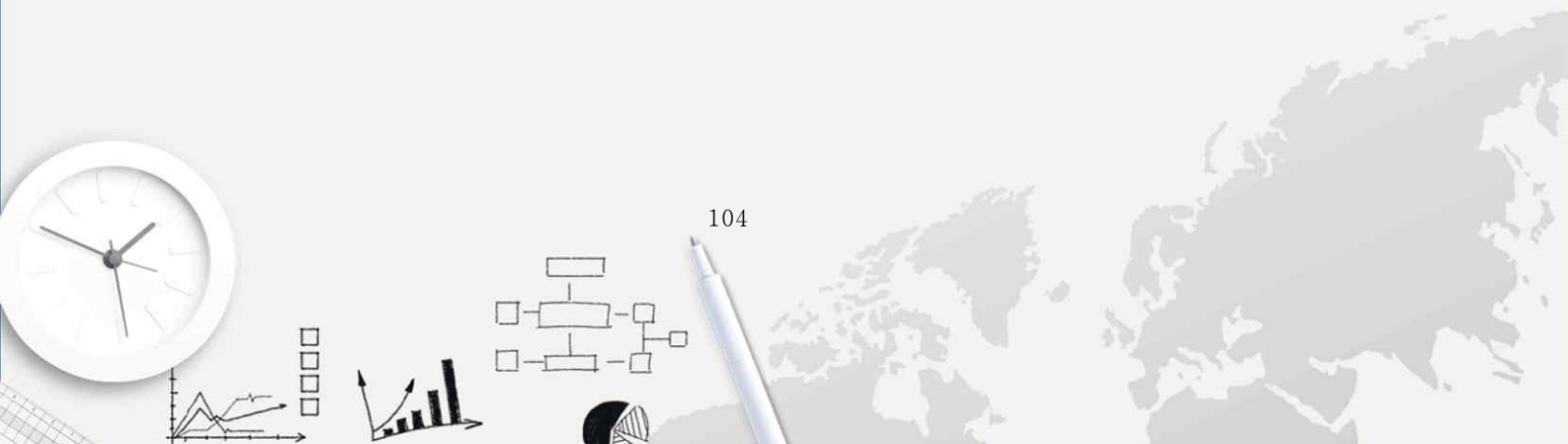
书中首先指出的是变化了的国际经济秩序。未来的国际形势将是G2，即美国和中国两大强国长期共存和竞争的时代。由此可以预想到的是全球价值链，即所谓的“GVC”的区域化。

与过去特朗普政府时期美国推进的全面脱钩，即美国和中国之间的完全的经济分离相比，今后，以美国和发达国家为中心，在半导体等尖端领域，将构筑起不依赖中国的以美国为中心的GVC。

也就是说，全球价值链将会部分脱钩，形成以少数国家和企业之间的同盟为中心的区域化价值链。其实这种征兆在今年（2022年）已经非常明显地显露了出来，这也是让韩国深感困惑的部分。

预计这种全球价值链的区域化在不同产业上的影响力也会有所差异。中国已经在电动汽车、电池、无人机、风力发电、人工智能(AI)、宇宙探索等方面具备了全球领先的竞争力，所以在这些领域受世界经济秩序变化的影响相对较小。

但是在半导体设备和软件方面，西欧国家对该产业的垄断性很强，预计会对中国产生强烈的牵制，预计中国在短期内很难完成追击。





当然，中国将通过不同于西方发达国家的自主技术进行追赶，但是与原来的经济高速增长不同，经济增速很可能会变缓，预计需要10年以上的时间才能实现这一目标。美国正以牵制中国为目的构建新的经济秩序，而中国因反华阵营的扩大而放低身段，预计今后很有可能同意这种中美两国在共存中竞争的新秩序。

这种情况下，从韩国产业界的立场来看，可以说是争取到了不会被中国超越的十年，在这十年里，可以在开展现有的主力制造业活动的同时，努力培育尖端产业。从这一点上来说，情况似乎是比较乐观的。但是情况却并不是只有这样。

首先，与过去的自由贸易相比，区域化的GVC的构建是低效率的体制，在全世界范围内，各国的生产设备都有可能过剩。在此基础上，再加上因新冠疫情导致的物流费用的上升，经济萎缩和物价上涨同时发生的滞胀现象便可能发生。

在半导体产业，即使把中国排除之外，也要依赖韩国和台湾，发达国家会对此表示担忧。美国 and 德国已经制定了直接生产半导体的计划。

最终，对于韩国来说，需要使美国相信自己是美国等西方国家"值得信赖的可以稳定供应半导体的伙伴"。实际上，在2021年5月举行的韩美首脑会谈上，两国就双方加强在核心、新兴技术领域的伙伴关系达成了一致，并约定扩大半导体、环保电动汽车电池等的供应。

最终，与行使垄断性的影响力相比，如果韩国能使美国等发达国家相信韩国是长期值得信赖的伙伴的话，就会削减发达国家在本国内构筑半导体产业生产设备等的动向，由此可以减少全球价值链区域化带给韩国的负面影响。

那么，在这种情况下，韩国经济、韩国产业的应对战略是什么呢？对此，李教授提出的几点解决方案是企业回流 (reshoring)、大企业 and 中小企业的力量共享，以及以提高全球竞争力为目的的国家创新体系的转换。





首先，企业回流（reshoring），即促进进军海外的企业回归国内，现在是最好的时机。首先，多个国家正在离开中国，并在中美矛盾过程中对中国产品征收关税，“Made in China”的吸引力下降了。中国国内劳动力成本上升也是吸引力下降的原因之一。

新冠疫情也是一种机会。考虑到供应链应该多样化，很多企业正在物色除中国以外建设工厂的地方。新冠疫情促进了数字化的加速发展，这也会成为促进韩国企业回流的机会。这会使企业在选择建厂地点所要考虑的诸多因素中，高额的劳动费用所占的比重将会减少。

实际上，可以举出几个由上述这些机会所引发的多种类型的企业回流事例。这里列举三种类型。

第一种类型是劳动密集型产品的生产基地从海外转移到国内的情况，具体例子有：提供汽车用电流的电线束“wiring harness”事例，汽车配件企业THN以及益山珠宝合作社的事例。

第二种类型的回流企业是，通过数字化等技术革新实现了生产工艺的简单化，从而为企业回流创作了契机。亚洲钢铁公司就是这种类型的典型事例。2020年对位于菲律宾马尼拉的工厂进行清算后，其在庆北金泉产业园区的占地6.6万平方米的彩色钢板生产工厂也得以竣工。

最后，第三种类型是类似于医疗设备生产企业Solgent公司的情况。Solgent公司之前的生产流程是把在海外加工的零部件在国内进行组装，现在，整个生产流程全部在国内进行。此外，服装企业G&G和户外品牌Trexeta等也因实现了大规模的自动化及智能工厂化而得以回流到韩国。

如果希望今后能有更多的企业回流韩国的话，那就需要政府层面的金融支援和税收减免政策来帮助企业克服韩国的高额的劳动费用。

实际上，2019年以后的企业回流数量能够增加，其中，政府的引导政策得到了进一步加强以及变得更为灵活也是有一定功劳的。如果想通过技术革新来促进企业回流的话，政府在进行金融支援的同时，也得对大企业和中小企业提供技术支援。





大企业与中小企业间的实力共享（建议）其出发点在于韩国是一个大企业 and 中小企业之间的生产效率差距非常大的国家，在新冠疫情出现之前就已经是这样。 在这种情况下，要想提高中小企业的技术革新能力，比起大企业的利益共享，更需要的是实力共享。

如果大企业能和政府合作，对中小企业提供系统的、直接的支援，帮助中小企业提升企业实力的话，那么大企业 and 中小企业之间的生产性差距在短时间内就能缩小。 三星电子对医疗设备企业Solgent的支援就是一个很好的事例。

另外，对于上述的企业回流和大企业与中小企业之间的实力共享问题，政府应该把这两种政策结合起来推进，从而使政策产生协同效应。（政府的）中小风险企业部已经开始了这种类型的支援，该部门2021年8月在"2021年工程、质量技术开发课题"中选定了要对其进行支援的10家企业，据说选择范围还将进一步扩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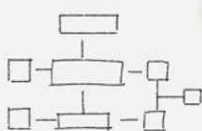
李教授强调，现在正是促进企业正式回流的最佳时机，不仅仅是政府，从企业实力共享的角度出发，大企业或公共研究所等应该共同出面系统地支援中小企业。

最后，为了提高企业的全球竞争力而进行的国家创新机制的转换，既是韩国经济的机会，也是挑战。

在韩国，国家创新机制转换的方向应该从以短周期技术为中心（如现在的IT企业），向以周期长的技术（像生物技术）为中心进行转换。也就是说，应该以"长周期技术"为基础的产业为中心来转换国家革新体系。

这是因为短周期产业是相对容易被中国等后起之秀追击的产业，只有向进入门槛高、难以被追赶的长周期产业过渡，才能构建长久的发达国家型产业结构。 虽然看起来这似乎是理所当然的（努力方向），但是李教授也同时指出这不是容易（实施）的课题。

而且，如果韩国今后想以拥有全球竞争力的产业来引领韩国的话，那么所需要的是基于新型融合技术的产业领域。





问题是，在这种技术的融合复合方面，与世界最高水平的德国相比，韩国的水平非常低。李教授在书中对这一问题进行了很具体的说明。 以此为基础，把韩国现有的优势技术——IT技术和其他领域的技术结合起来创造出新的融合性的复合技术，在今后的第四次工业革命时代，对于确保韩国产业的竞争力，这将非常重要。

比如像'Mobility (移动服务)'那样，利用数码技术，超越制造业特定领域或产品层面，向服务业或制造与服务相融合的商务领域扩张或进化，从而使得多种多样的（产业间的）横向合作与连接成为可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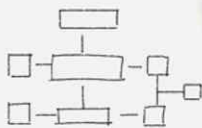
在韩国各产业中，通过（产业间的）融合、复合来确保产业竞争力的事例有造船业。造船业已经是韩国具有全球竞争力的传统机械产业，随着近来与IT技术的结合，造船业的竞争力得到了提高。

超差距产业的智能船舶就是有代表性的例子，智能船舶是指船舶内所有设备都是以信息通信技术(ICT)为基础的船舶。在造船技术方面，综合使用了自动航行控制系统、船舶自动识别装置、利用卫星通信网的船舶远程控制等最尖端的技术信息。

也就是说，通过知识的融合与复合，使机械产业电子产业化。 制造与物理世界相同的数字孪生空间的技术"数字孪生(Digital Twin)"，智能化解决方案、电气推进系统设计技术等，这些技术也在发展。 因此，预计今后产业界的核心话题将是这种数字技术为媒介的产业间的融合、复合，即合纵连横。

韩国的主力产业和企业现在需要超越纵向整合，以跨越"业"的界限的横向革新为方向。如果说过去大部分韩国企业都在试图依靠内部资源实现有机增长的话，今后，为了实现不同技术间的融合、复合，通过与外部的联系实现非有机增长将变得更为重要。

打算朝这种纵横型的"融合性(big blur)"方向发展的领先企业，应该摒弃这种"进入目标市场→增长→扩大"的传统线性增长模式，追求在多种领域播种、在不同产业间重组以及在重组中寻找新机会的战略。





代表性的例子有Kakao（韩国的国民聊天工具，类似中国的微信）。与过去被称为章鱼爪的韩国大企业集团不同，Kakao虽然是企业集团，但是是用数据连接的合纵连横型企业集团，是完全不同的商业模式结合在一起的一种形态。

在这个事例中，把企业以纵向的、横向的方式连接在一起的核心就是数据。为了促进这些企业的合纵连横，需要打造一个对核心技术--数据的收集、共享、交易的生态环境，这有可能需要一个公共机构来做这件事。实际上，如果公共基础设施通过数据得以连接的话，它本身可以成为平台，创造企业，创造就业岗位。把公共交通和金融连接在一起的交通卡就是代表性事例。

在长周期产业的制药、生物领域，韩国已经证明在仿制药领域韩国可以成为强者。这也是以技术革命为基础创造出新的商业机会的事例。

问题是，因为制药、生物领域是限制较多的领域，所以得到认证很重要，而中小企业很难进入。要想克服这一问题，韩国食品医药品安全处的地位必须强化到不亚于美国食品医药局FDA才行。如果韩国食药处的认证能在全世界范围内得到认可的话，韩国的生物、医疗器械企业进军海外市场将获得动力。

类似的情况还有韩国专利局，韩国专利局与美国、日本、中国、欧洲一起被列入世界五大专利局（IP5）。专利局的这种地位和统计局的支援，曾在使韩国成为IT强国方面起到了很大的作用。政府对企业的支援内容包括对大企业和那些在半导体装备零部件领域具备优秀技术能力的中小企业，以及对利用专利大数据所进行的研究和开发投资的支援等。

最终再次强调的是今后韩国经济和产业界的核心话题是以数字技术为媒介的"融合化•复合化"，即合纵连横。韩国的主力产业和企业现在需要超越纵向整合，跨越行业界限的横向革新，这可以说是最核心的内容。

以上对《革新的开始》一书中由李根教授执笔的韩国产业革新的主要内容进行了简要介绍。下一节，将对李相承教授的"企业竞争带来的革新"的主要内容。这部分内容是书中的第三章。





6-4 企业竞争带来的革新

这一节，将对《革新的开始》一书中由李相承教授执笔的以“企业”为关键词的革新的主要内容进行简要介绍。

这部分内容是书中第三章的内容，准确的题目为“企业竞争带来的革新”。这一章的主要内容是关于在资本主义社会中，为了实现长期稳定的经济增长，要如何设定好生产附加价值的核心主体—企业的作用的建议。

这一章首先从韩国经济增长的历史开始。书中说韩国经济增长的历史过程“仅凭政府主导的经济增长政策和由此受惠的企业历史是无法解释的，（韩国的经济增长）是选择进军海外的企业家所发挥出的精神（的产物），以及之后在激烈的竞争中生存下来的结果”。

并且这种面貌在外汇危机后的韩国经济增长过程中更加明显。以外汇危机为起点，韩国企业的体制完全向着追求收益性的方向转变。也就是说，企业的本质是追求收益性的组织，经历外汇危机后，韩国企业不断进化、成长，蜕变成了努力进入新领域的模式。

当企业成长遇到瓶颈时，企业一般会采取两种方式。一是以现在的核心竞争力为基础，通过周边相关事业谋求多元化。另一种是干脆转移到其他新的产业领域。

例如，斗山集团从初期从事酒类行业开始，之后转移到重工业这一完全不同的产业。斗山集团的发展历史为我们提供了一个示例，即如果企业在事业发展过程中遇到瓶颈，为了打破这个局面，可以去发现新的增长动力。

对于未来韩国企业的革新应该朝什么方向进行，书中提出了两个具体的建议。一个是搞活风险投资的生态环境，为此需要实行双重股权制度；另一个是强化小额股东权利和放宽对企业活动的限制。





书中首先强调韩国企业的革新便在于搞活风险投资的生态环境。目前韩国经济最大的问题之一就是三星等出口大企业与内需服务企业之间生产性差距较大的双重结构。

出口制造业以大规模生产相同产品的方式(进行经营),投入研发费用和设施投资费用等大规模固定费用,形成多大规模的经济是决定企业竞争力的关键。一直以来,韩国的出口型企业通过在制造业部门的卓越经营实现了规模经济,同时提高了生产效率。

但是,因不同市场的语言和文化、消费者倾向等原因,服务行业很难走向出口导向。因此,以内需市场为基础的服务行业很难确保高生产性。题是出口大企业和内需企业要共同成长才行,如果内需企业的生产效率大幅下降,为了保护这些企业就会增加限制性规定,竞争会因此受限,继而导致生产效率下降的恶性循环。

作为解决对策,我们看到的希望就是最近韩国经济中兴起的风险投资热潮和风险投资生态环境的形成。经过移动革命(mobile revolution),以内需为主的国内创业企业也展开了无限竞争。在竞争中成长起来的企业具备很强的竞争力,在挑战全球市场的过程中获得了很高的评价。形成风险投资的生态环境意味着风险企业、风险资本、政府政策等有机地交织在一起,成为一种可持续的结构。

作为最具代表性的例子,金融市场的toss这样的革新服务的登场让我们看到了风险投资产业的生态环境得以形成,这使得我们可以进行较为乐观的预测。

金融是国内服务业中最脆弱的部门之一,一直受到以公认认证书为代表的各种限制,也是与发达国家的竞争力差距非常大的部门。公认认证书是国内企业在过去Windows时代,以名为Active X的微软技术为基础开发出来的国内产品,韩国金融企业以安全为由,被困在世界市场上无法使用的系统内。(韩国金融企业一直使用公认认证书来保障金融安全)

但是Toss以转账式的办法越过了这种限制。2014年,Altos Ventures的金汉俊(Han Kim)代表听了名为"Viva Republica"的创业者李承健(音)代表所谈的想法后,马上就投资了10亿韩元,这就是Toss的开始。





另外，风险投资人没有只是局限于筹集资金上，而是一直发挥着对事业发展方案从多个角度提出建议的“加速器”的作用。 Viva Republica在2021年9月成功吸引了4,600亿韩元的追加投资，约8兆韩元的企业价值得到了认可。

特别是在这一过程中，Toss的李承健代表通过与金融政策制定当局的生产性对话，逐一解除了事业发展上的限制，这些努力取得了成果，这一点值得关注。 李承健代表在整个金融市场引进了创新服务和创新企业经营，正在向Toss证券、Toss银行等扩张，以现有金融圈年薪的1.5倍吸引优秀人才，这一点也具有一定的标志性意义。

为了使这样的风险投资企业能够更有活力地设立乃至成长，需要构建健康稳定的风险投资生态环境，而这需要制度上的完善，书中强调应该引入双重股权。其依据如下。

初创企业要想从创业者的创意开始成长为世界级企业，需要包括风险投资基金在内的来自金融市场的持续资金筹集。 为此，如果企业在股市上市，从创业企业的立场来看，必然会出现创业者的股份稀释。

在这种情况下，如果创业者的股份下降，那么随时都会暴露在敌对性M&A((并购)当中。这可能会降低创业成功的可能性，对整个风险投资生态环境起到危害作用。

针对这种情况，美国在《公司法》中规定，为了保障公司收益的最大化，所有股份结构和表决权都掌握在利害关系人手里。这是对利害关系人的自律性协议的一种认可。 如果这些利害关系人相信创业者是比任何人都适合的能使公司获得收益的人，就会在上市时授权由创业者来维护经营权。

代表性的例子就是谷歌，谷歌的创始人每持一股就可以行使10票的表决权。 这3名谷歌创始人目前仍可以维持67%的表决权，可以对《公司法》和《商法》中所规定的特别决议实施表决权。 以此为基础，只要创业者下定决心，就可以自由地做出决策。





实际上谷歌将公司名称改为“Alphabet”，“从A到Z”，只要是能产生收益的事业，谷歌都会去挑战，如果无利可图就快速撤离，之所以能以这种方式做出自由的决策，是因为股东们自行委任了谷歌的创业者拥有绝对表决权的权限。

只是，这种双重股权只适用于创业者，这一点非常重要。即使是获得双重股权的创业者，如果将权力转让或继承给他人，其权利也将消失。这是因为敌对性的M&A(并购)是阻止公司管理层追求个人利益的重要市场机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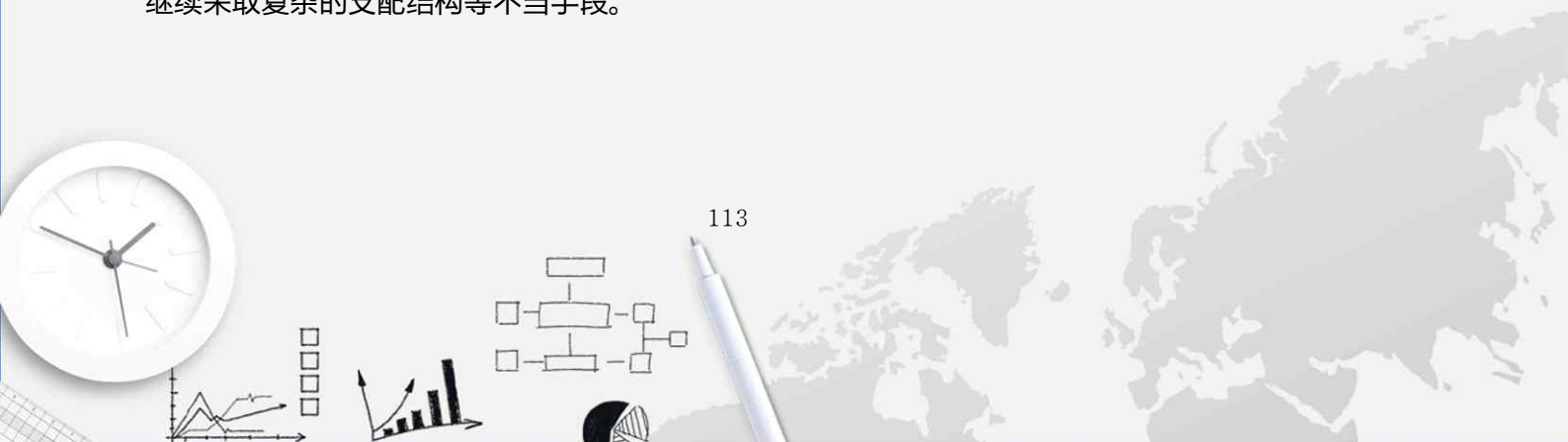
敌对性M&A具有过滤和改善因管理层追求私人利益而导致企业亏损的重要功能。尽管如此，小额股东们还是自发地赋予创业者应对这种敌对性M&A的防御武器，这意味着他们认可创业家的企业家精神和经营能力。

另外，对于等级表决权脱离现行公司法1周1票原理的意见，书中指出，已经构建了循环出资结构的韩国财阀等大企业，早就已经不再遵守这样的基本原则。国内财阀集团总裁一家的股份大概在10~20%左右，通过控股公司和金字塔式循环出资支配着整个集团。

即，1股1票式的表决权上的股东平等，并不适用于总裁一家，这就是韩国财阀结构下的公司法的本质。书中强调，从这一角度来说，在创业公司，承认仅限于创业者的权利差别，与大企业相比，这反倒是公平的。

接下来，作为对未来韩国企业革新的提案所提到的强化小额股东的权利，以及放宽企业活动限制，书中主张，首先，强化小额股东的权利，从财阀总裁一家的立场来看，也是符合其长期利益的。

强化小股东权利意味着之前掌握经营权所能带来的私人利益的减少，因此，总裁一家在只剩下继承经营权这样一个唯一出口的情况下，尽管持股率很低，但是可以不用再为了掌握整个公司而继续采取复杂的支配结构等不当手段。





根据财阀老板的子女是否具备经营能力，可以选择直接参与经营，也可以选择不直接参与经营，但作为议事会议长雇用职业经理人进行管理的方法。

此外，还可以出售企业，用这些钱去投资其他企业，即转换为风险投资家。也可以选择完全不同的职业，将其财富回报给社会。总之，小额股东权限的强化，得使总裁一家也可以采用各种对策去摸索出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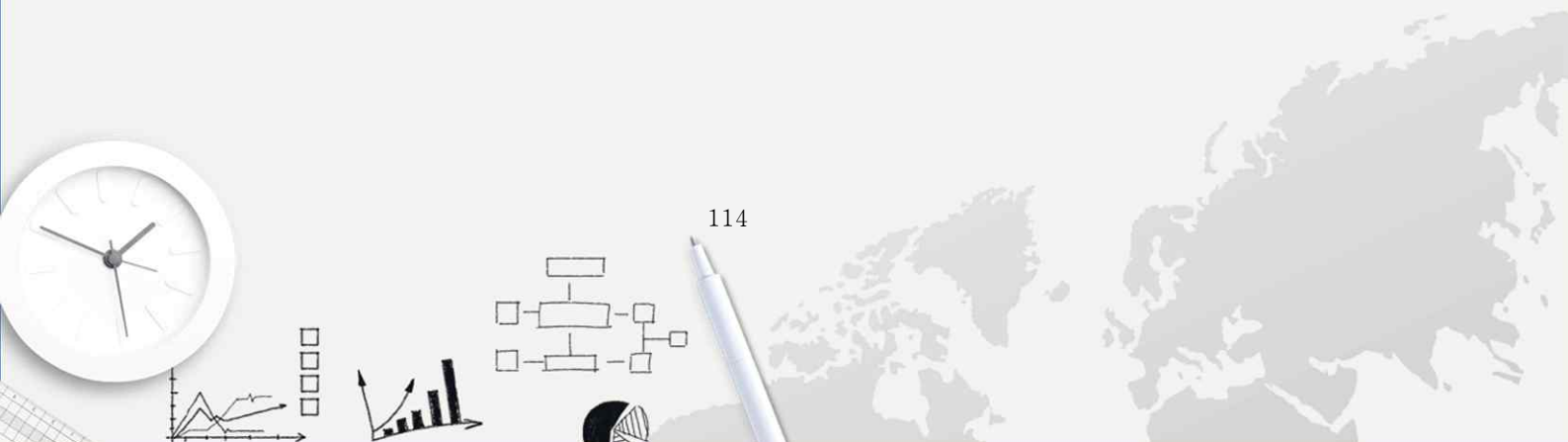
在强化小额股东的权限方面具体需要什么样的装置，书中称有必要引进证据开示(discovery，即举证制度)程序。这是发生民事纠纷时，诉讼一方当事人通过法院要求另一方提供与纠纷有关的材料的制度。

因公司管理层、控股股东的不当行为导致小额股东遭受损失时，为了证明损失，有必要确保管理层、大股东持有的证据资料。在美国发生企业间纠纷时，通过民事诉讼解决纠纷的情况较多，举证制度发挥着重要作用。

在韩国，由于这种制度不完善，民事纠纷解决得并不顺利。因此，有时会发生韩国企业以其他韩国企业为对象在美国提起诉讼的现象。最近LG化学以SK Innovation为对象提起诉讼就是代表性的事例。

书中强调，当小额股东或消费者因企业管理层、控股股东的不当行为而遭受财产损失时，要有相应的民事救济政策确保能够从金钱上对这些损失给予切实的补偿才行。只有这样才能减少对企业家的过度的刑事处罚。

书中还提议减少限制企业活动的刑事处罚和实行继承制度的改革。韩国经济的发展一直伴随着竞争，经济的革新也只有通过竞争才能实现。因此，企业政策的第一步就是要保障企业自由追求收益。





对此,重要的制度改革是应该大幅减少目前对企业家的过度处罚的刑事处罚相关条款。即减少会使企业经营萎缩的刑事处罚,相反,需要强化能更加积极地救济小额股东和顾客损失的民事程序。

在韩国的企业政策上,目前对渎职行为的处罚范围太广。另外,从2022年开始实施的重大灾害处罚法中,不仅包括民事程序,还包括刑事处罚,这会带来过度抑制企业活动自由的副作用。

为了避免这种副作用,在对必要对象维持刑事处罚的同时,对于其他的小额股东和管理层,或控股股东之间的利害关系冲突以及金钱损失等,应该通过民事程序使之得到受害救济。

通过积极强化小额股东权利,使企业经营正常化,确保老板一家的财富正当性后,有必要修改目前过高的继承税税率。在韩国的税法中,经营权继承税可以在最高税率50%的基础上再加征30%,达到最高65%的继承税率。

特别是加征的30%的附加费有点过分了。税法中,仅以继承的财产是可以左右公司经营权的股份为由,税率就相差这么大,这本身就是个问题。

从根本上解决这一问题的对策就是通过强化小额股东的权利来减少过度的经营权溢价,防止过度掌握经营权追求私利。之后有必要完善继承税制度,保障企业的收益追求。

以上是对《革新的开始》一书中由李相承教授执笔的韩国企业的革新的主要内容的简要介绍。下一节,将介绍安炯賢教授的"金融市场的悬案和政策"的主要内容。这部分内容是书中的第六章。





6-5

金融市场的悬案和政策

这一节，将对《革新的开始》一书中由安炯賢教授执笔的以“金融”为关键词的革新的主要内容进行简要介绍。

这部分内容是书中第六章的内容，准确的题目为“金融市场的悬案和政策”。其内容是为实现韩国经济长期可持续的稳定增长，在资本主义的动力--金融方面，为韩国的悬案（即需要解决的重要问题）和革新提出的政策建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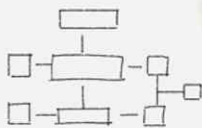
书中首先对目前韩国金融市场的问题进行了诊断。最引人注目的是家庭负债的激增。这虽然是众所周知的事实，但韩国家庭的负债在世界上也是最高的。家庭负债激增的部分原因是由于最近的低利率现象，但房地产政策失败导致房价暴涨是最大的因素。

实际上，韩国的家庭负债占GDP的比率到2016年为止仍然呈现出缓慢（增加）的趋势，从2017年开始暴涨。这正好与房地产价格暴涨的时间相吻合。房地产价格上涨和由此导致的家庭负债增加，再加上之后差额投资等原因使得房地产价格再次上涨，家庭负债再次增加，形成了恶性循环。最终，由于家庭负债激增，包括金融市场在内的整个宏观经济的不稳定性增大。

家庭负债主要以两种形式增加，一种是住宅担保贷款，另一种是生计型贷款。在家庭负债中占很大比重的住宅担保贷款，由于强有力的限制，即使今后房产价格下降20~30%，国民不履行这部分债务的危险也不大。

但是“全租”这种影子银行就不是这样了。由于最近全租房押金暴涨，默认的LTV比率很高，因此如果房地产价格下降，像‘易拉罐公寓’一样，可能会面临破产的危险。从目前的情况来看，教授的话可以说是正确的预测。

注：“全租”是韩国的一种租房方式(指的是向房东交付一定金额的押金，获得一定时间的房屋免费使用权，期满还房时全额退还押金的租房模式)





书中指出更大的问题是资本市场中与财富相关系数风险相关的问题。一般情况下，人们在财富减少的时候，随着风险规避力度的增大，会首先减少风险资产的比重。

虽然这本书出版的时间是2021年，但是资产价格的泡沫现象不仅出现在房地产市场，还同时出现在股票以及虚拟货币市场上。最终，整个社会因债务累积的资产价格泡沫破裂的可能性增大。

在这种情况下，如果房地产价格下跌，股价也有可能同时暴跌，由于资产价格下降导致财富减少，消费也会受到打击。最终，宏观经济整体的危险度增加了，从2022年目前的情况来看，这也可以说是正确的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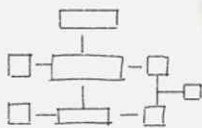
书中警告，最终，资产价格上涨和家庭负债剧增同时出现的金融不均衡问题可能会发展到非常严重的水平。金融不均衡导致低利率释放的资金无法被实体经济吸收，从而流入房地产、股票和硬币市场，引发泡沫。

因此，书中强调在资产价格泡沫破裂之前，有必要先发制人。为了解决这一问题，上调韩国银行的基准利率也是核心手段之一。正如大家所看到的，这是现在正在发生的情况。

如果上调利率，企业中的边际企业和僵尸企业将遭受打击。但是新冠疫情以后，政府已经对相当多的边际企业推迟了贷款本金和利息的偿还，其结果是优良企业和边际企业的区分过程被取消，如果今后上调标准利率，将成为这种边际企业调整其企业结构的机会。

书中认为，由于边际企业的淘汰，雇佣可能会减少，这一问题是可以通过其他方式——例如其他新企业吸收就业的形式来解决。为此，政府应该致力于（以失业人员为对象）开展再就业培训，特别是在金融方面，婴儿潮一代和预计今后将退休的X一代，他们对金融科技等数码技术有排斥感，为了使这些人不成为数字文盲，政府应关注对他们的相关培训。

以上述对韩国金融市场的诊断为基础，书中提出了改善这一状况的两种政策提案。一个是改编金融委员会和金融监督院的支配结构，另一个是与卖空政策有关的提案。





首先，关于金融委员会和金融监督院的结构改编，金融监督院的作用大致可以分为宏观健全性监督和消费者保护两种，问题是这两种职能之间的相互冲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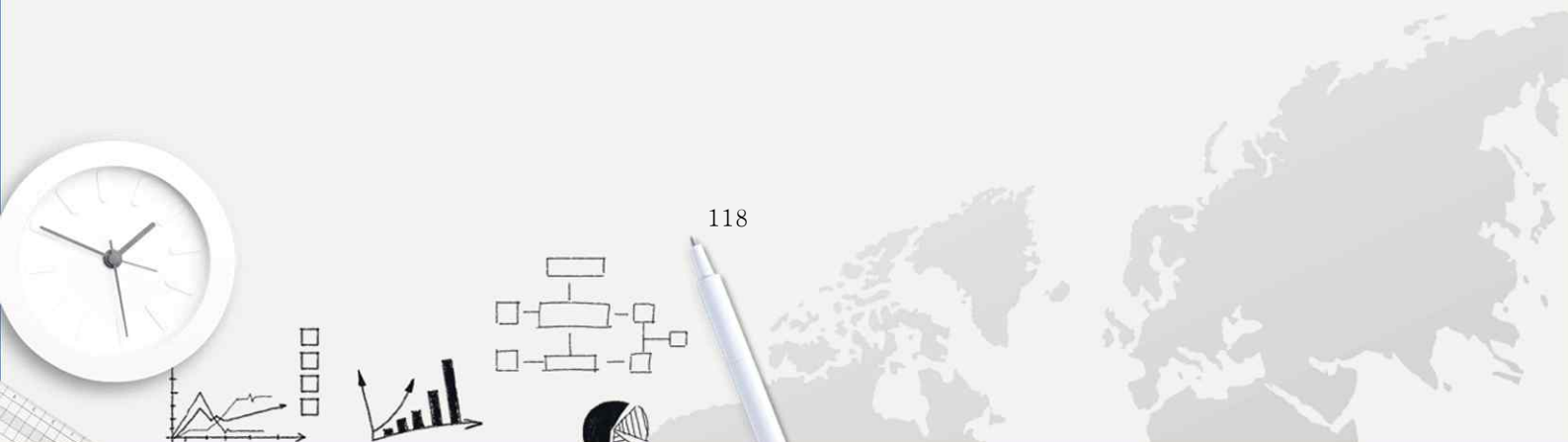
如果加强宏观健全性监督，就会要求金融机构降低运营上的风险负担，金融机构减少了风险贷款，最终资金无法流向弱势群体。最终，为了保护金融可及性下降的金融消费者，就会对金融机构的经营施加制约，这又会造成金融机构的损失。

针对这些职能冲突问题，书中提议设立金融消费者保护机构，或进行双峰型运营等对策，并且认为，与组织形态相比，机构的实际运营方式更为重要。同时，还应该考虑金融委员会和金融监督院各自应该如何进行结构构建的问题。归根结底，监督 and 政策的分离很重要。也就是说，在监督管理上重要的问题是，如何在保障金融机构的独立性的同时使之保持中立。

只有对金融机关的监督是能够预测的，才能减少其他副作用，以及调整监督对象的行为使其符合制度规定。这也意味着金融机构没有必要过度看金融监督院的眼色。

接下来是关于与金融市场相关政策提案有关联的卖空政策。新冠疫情发生以后，围绕停止卖空和重新开始进行了很多讨论。学者们大多认为尽管卖空有正向功能，但是就韩国而言，有必要考虑韩国股市的特性。

把韩国的KOSDAQ股市和美国市场进行比较的话会发现在美国股市上市的股票数量正在减少。因为收购合并等项目减少了。美国硅谷公司的目标不是上市，而是将其产品出售给大企业，因此等待上市的诱因少。相反，对韩国企业来说，维持上市对回收资金非常重要。结果便是很多企业都敲开了上市的大门，销售额小的企业也会上市。





这样一来，在对股票的需求有限的情况下，随着供应量的增加，股价上涨的空间被破坏。最重要的是，由于交易量下降，价格操纵变得容易。虽然KOSPI 200看起来没什么问题，但是由于有很多交易规模较小的企业在KOSDAQ市场上市，所以即使是用数量很少的钱也可能对行情进行操纵。另外，即使有监督机构，也很难发现那些通过外国人进行的卖空操纵或在海外进行的卖空操纵。

因此，在目前这种监督体系不完善的情况下，应该对交易量低的项目进行一定程度的限制。书中强调，可以考虑不让一个主体拥有一定数量以上的卖空位置，同时，与外国人相比，对本国人类似于反向歧视的规制体系也应该做出调整。

最后，关于今后金融市场的变化，还提到了虚拟货币，以及传统金融公司和大科技企业之间的竞争。

首先，对于虚拟货币是否会成为代替目前货币的手段，书中持否定态度。因为中央银行不会放弃通过货币铸造产生的巨大利益。但是，尽管虚拟货币不能代替现在的货币，但是预计它会像黄金一样具有储存一定价值的功能。

人们所信赖的财物是那些能产生价值的东西。最具代表性的就是石油。随着石油的功能被发现，其价值也从污染土壤的物质转变为产金蛋的鹅。如果我们开始喜欢和信赖某种东西偏，那么这种东西的价值就会上升。

书中强调，对进行虚拟货币交易的金融消费者的保护也是很重要的。需要像交易所和KOSDAQ上市委员会那样，设立专门机构处理虚拟货币的上市。另外，还需要设立像交易所里的市场监视委员会那样实时分析是否存在不公平交易的机构。

机构的设立应根据特定金融交易信息法，以进行申报的交易所为中心共同设立，并赋予机构一定的独立性。而且要向监视洗钱的金融情报分析院(FIU)报告虚拟货币交易所的详细资料。





接下来，关于传统金融公司和大科技企业之间的竞争，书中提到，目前韩国金融市场上的传统金融公司和大的科技企业正在展开竞争，比如，以Naver和Kakao为代表的ICT企业积极进军金融市场，与原有的金融公司展开了竞争。预计未来两者之间的竞争会更加激烈。

特别需要关注的是，Kakao的优点是ICT技术，这种技术与现有银行拥有的数码思维方式完全不同。很多国民已经在用Kakao Talk了，把Kakao Talk和金融连接起来，在可及性和便利性方面，都是现有金融公司很难跟上的。另外，政府也根据其网络专用银行的特点，从政策上放宽了限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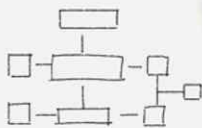
没有比韩国银行限制更多的地方，从某种角度来看，这也可以看作是对限制的反向歧视。为了在这种竞争中生存下来，现有银行必须奋发图强。当然，现有银行也在全力展开数字化战斗，预计数字化的差距将会缩小。

书中认为，金融委员会今后将会同等看待现有银行和网络专用银行，对他们进行同等限制。这种发展动向与以往不同，这将成为包括KAKAO BANK在内的大的科技企业进一步成长所需要跨越的障碍。

但是，无论现有银行如何加强自己的数字基础，以已经广泛使用的平台为基础，都很难轻易应对可以轻易扩张事业的大的科技企业。不仅如此，还要超越以大科技企业的灵活思考和技术为基础的大胆、创新的运营方式才行。最终，现有的金融公司预计只有脱胎换骨才能生存下来。

以上是对《革新的开始》一书中未能邀请到笔者亲自介绍的其余内容所进行的简要介绍。为了使韩国经济能够克服目前的危机，在未来维持长期的稳定的增长，在各个经济领域需要什么样的革新，关于这个问题，我们期待以上讲座达到了为学员们提供了能听到专家们的真实解答的目的。

下一节，我们稍微转换一下气氛，邀请一位这本书的普通读者，听一听读者本人对书籍的感受。从读者的角度出发，确认读者对于专家们为维持韩国经济可持续的稳定增长在各个方面所提出的想法有何感触。



**6-6****读者访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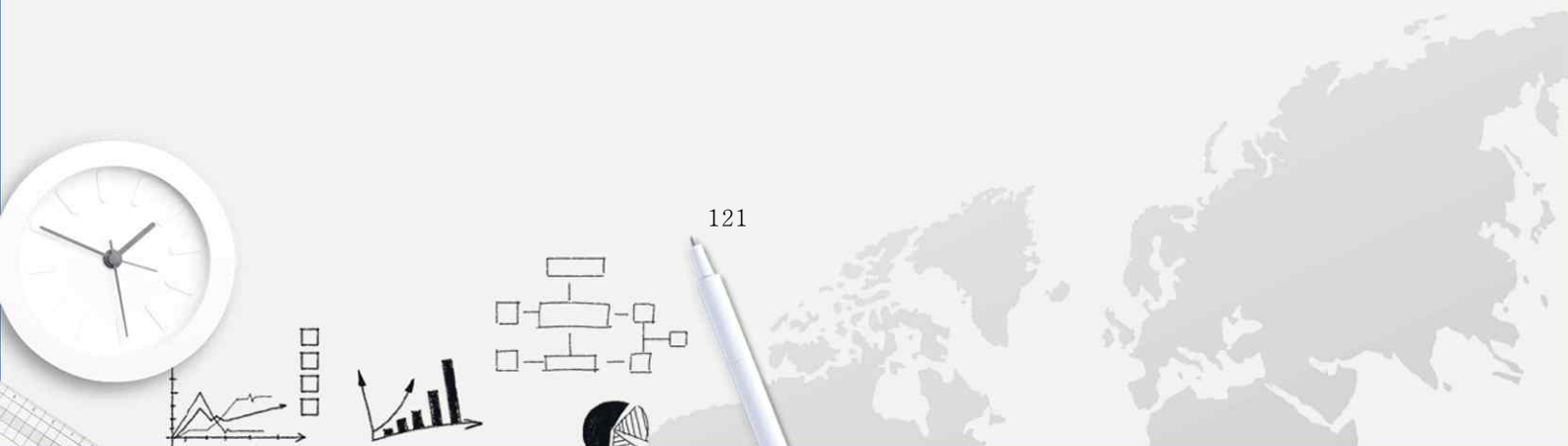
预告中介绍过，这一节我们邀请了一位读过《革新的开始》这本书的普通读者，听他们谈谈对于专家们为维持韩国经济可持续的稳定增长在各个方面所提出的革新建议有何感触。下面将通过提问的方式开始，来听一下读者坦诚的回答。

<主持>

你好！谢谢你能抽出宝贵时间，欣然接受我们的采访。

<朴基勋>

大家好，我叫朴基勋(音译)。最近首尔大学经济学部的教授们出版了关于韩国经济的革新方向的书，朋友读完后说书很好，然后把书借给我读了。很荣幸能接受采访。





<主持>

是这样啊。那么您读完这本书后的整体感想如何？和原来期待的一样吗？很想知道（像您这样）与经济学没有直接关联的年轻读者从普通读者的角度对这本书的感受是怎样的。

<朴基勋>

这本书讲述了近来韩国经济中人们想要了解的大部分主要主题，从这一点来说，这是一本非常有趣的书。而且这本书的内容不只是停留在对现状的整理，教授们从本人的视角提出了非常鲜明的展望和对策，这一点也很好。

最重要的是，我认为像我这样的非专业人士或普通人也能比较容易地阅读这本书。有时候由很多教授一起出书时，往往不是以一般大众为对象，而是以专业学生为对象，这种情况下往往不会对专业词语进行解释。

但是这本书不是这样，即使是作为非专业人士的我，在读这本书时也没觉得有多少难懂的用语，书中那些难以解释的图表也会在深化笔记中进一步讲解。在深化笔记之前，作者想要表达的主要论点已经用简单的话解释过了，因此很容易理解作者想要说的革新方向。





<主持>

明白了。就是说读完这本书之后，您觉得符合您的期待，是一次非常满意的阅读过程。在您所阅读的内容或者每位作者所提的问题当中，最能引起您的共鸣的内容是什么？为什么该部分内容能够引起您的共鸣？

<朴基勋>

印象最深的内容是朱丙起教授撰写的《公正和革新的良性循环》这篇文章。在过去的几年里，“公正”一直是时代的话题。相当一部分人认为能力主义是使不公平的韩国社会变得公正的对策，对此，朱教授指出，其实能力主义才是不公正的温床，能力主义本身存在引起结构性歧视和机会不平等的问题。对于朱教授指出的这一问题，我深有同感。

最近“公正”是韩国社会的一个热门话题，我们青年一代对这个词语也很敏感。尽管是我个人的想法，但是我觉得目前为止，尽管很多人都在讨论“公正”，有时甚至展开争论，但这些讨论或争论都没有建设性。我认为朱丙起教授非常尖锐地指出了这一点。

主张能力主义的那些人认为，因为自己很“公正”，所以他们是“正义”的。但是从教授的深化笔记上能够看到，实际上在韩国，根据出身家庭的社会经济地位的不同，机会是不平等的，这是一个机会不平等现象明显存在的国家。笔记中告诉我们这种机会的不平等是韩国经济无法革新的因素之一，在这部分内容中我对这个问题有了很好的理解。

我也觉得我的父母那个时代是有通过教育提升阶层的机会的，而在我这一代人中，通过教育提升阶层变得困难。尽管如此，上层社会的人们还是认为他们是因为从能力主义中胜出所以才能享受到自己的胜利果实，并把这称之为“公正”。

这篇文章准确地指出了这个问题，并认为应该致力于建设一个通过做好教育和福利来建立公正的制度，从而使所有社会成员都能为经济革新做出贡献的社会，对于文章中提出的这个观点，我完全赞同。





<主持>

明白了。可能因为是年轻人，所以最为认同的是以公正为关键词的革新。除了与公正相关的内容之外，如果您指出给您留下深刻印象的内容，会是那部分内容呢？

<朴基勋>

李澈羲教授提出的解决人口问题的空间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低生育、老龄化，以及由此衍生出来的老龄贫困和延长退休年龄等，对如何解决这些人口问题的叙述中提出了令人意想不到的解决方案，所以读起来觉得很有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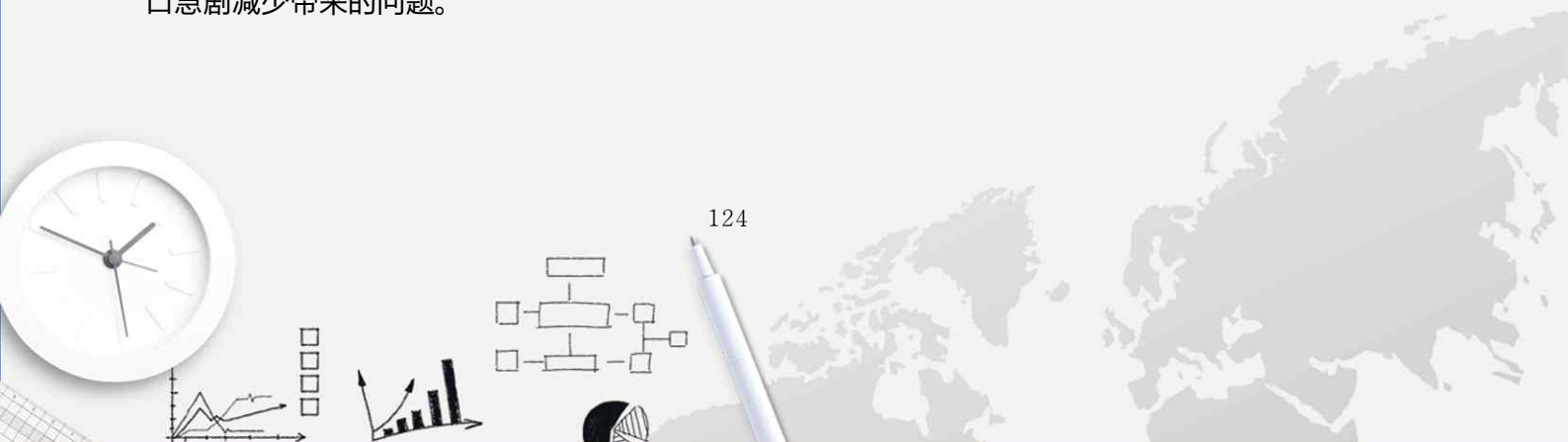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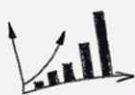
如果能找到解决低出生率问题的方案的话当然很好，但这并不是一个容易解决的问题，我很认同李教授的这一提法。在这种情况下我们能够看到，政府最容易找到的解决方案就是引进外国人力。

但是，由于文化差异，该政策存在需要承担巨大社会费用的问题，另外，如果外国劳动力在各个产业中的分配现状继续维持下去的话，今后随着人口变化可能出现的劳动供求不平衡问题便很难缓解。

作为解决对策，劳动人口高学历化的效果将压倒老龄化的效果，如果女性和老龄人口的劳动市场参与率能得到改善，将对缓解人口变化导致的劳动人力减少问题有很大的帮助，我觉得这是一个非常有说服力的主张，也觉得非常有趣。

我也认为如果不能马上解决低出生率问题的话，寻求更好的利用现有劳动人口的方案非常重要。如何提高职场经历中断的女性参与经济活动的比率，如何最大限度地减少高学历的壮年层和老年层之间的矛盾，应该思考和寻求此类问题的解决方案，对此我也非常认同。

从这个意义上讲，我认为李教授对解决人口问题的提案一定程度上能够解决韩国经济中劳动人口急剧减少带来的问题。





<主持>

感谢您的发言。接下来是最后一个问题，假如这本书将会出增补版的话，您希望在书中追加讨论的主题是什么？

我希望能够增加"空间的偏重性"对韩国经济产生的影响。众所周知，大韩民国是所有的一切都集中在首尔和首都圈的社会。

这对韩国社会经济的快速发展起到了很大的作用，同时也引发了过度竞争、因空间成本过高导致出生率下降以及地方消失等大问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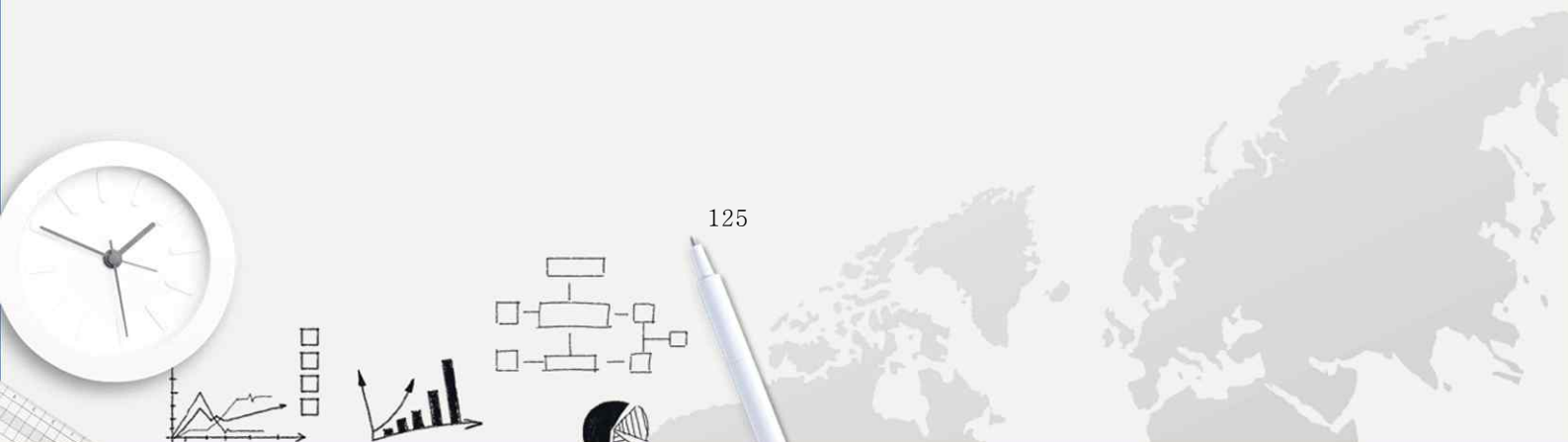
目前韩国社会所面临的低出生率、引进外国人力，很大程度上也是源于"空间的偏重性"带来的费用问题。厘清这个问题的现状并提出解决方案，是否也可以是思考韩国经济革新的重要主题。

<主持人>

虽然时间很短，但真心感谢您真诚的发言。

<读者>

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이 강의에서 제시한 재정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5분

-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반대
- ② 정부 채권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한국은행 국채 매입 적극 권장
- ③ 정책의 핵심은 통화정책과의 조화와 재정 건정성 확보
- ④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증세 추진

정답 ②

해설 한국은행 국채 매입은 통화를 찍어 재정을 조달한다는 의미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저해, 하이퍼인플레이션, 외환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근본적으로 위험한 재정 마련책으로 볼 수 있다.

02 다음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강의에서 언급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5분

- ① 성장과 분배를 모두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 ②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
- ③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시장 메커니즘 구축
- ④ 어려운 계층에 대한 조건없는 광범위한 지원 강화

정답 ④

해설 이 강의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서 기회 자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03 현시점 한국 경제, 산업의 대응 전략으로 이 강의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5분

- ① 리쇼어링(reshoring)
- ② 대기업·중소기업 역량 공유
- ③ 전통적인 선형적 성장모델 확대 강화
- ④ 국가혁신체계 전환

정답 ③

해설 이 강의에서는 '목표 시장 진입 → 성장 → 확대'의 전통적인 선형적 성장모델을 지양하고, 대신 다양한 영역에 씨앗을 파종하고 사업 간 재조합과 재구성에서 새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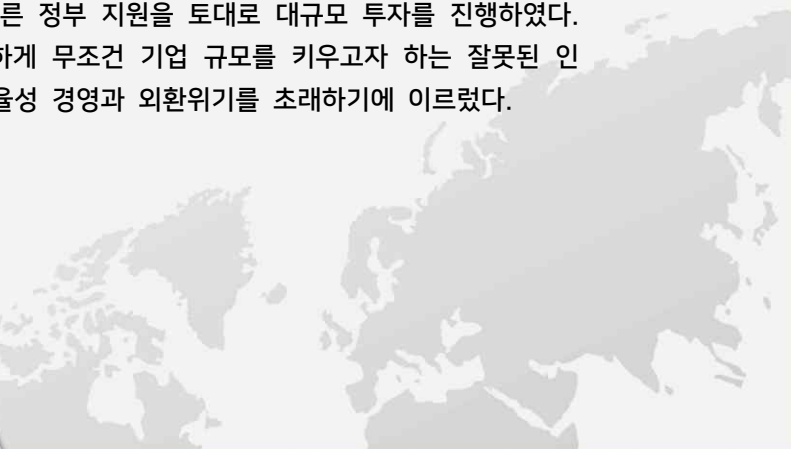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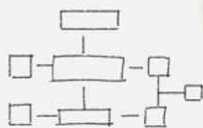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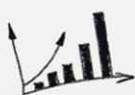
04 고도성장기에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요인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5분

- ①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 ② 해외 수출시장으로의 진출
- ③ 정부의 금융 지원
- ④ 대마불사론

정답 ④

해설 대마불사는 박정희 정권 시기 성장 모형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이다. 1970년대에 기업들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른 정부 지원을 토대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게 수익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기업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잘못된 인센티브가 형성되었다. 이는 결국 비효율성 경영과 외환위기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05

5분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에서 오는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 ① 벤처 열풍과 벤처 생태계의 형성
- ②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서비스업 시장 사이의 이질성
- ③ 내수 기업의 보호를 위한 규제
- ④ 수출 대기업이 달성한 규모의 경제

정답 ①

해설 모바일 혁명을 거치며 내수 위주의 벤처 기업들은 국내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서 성장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기업 간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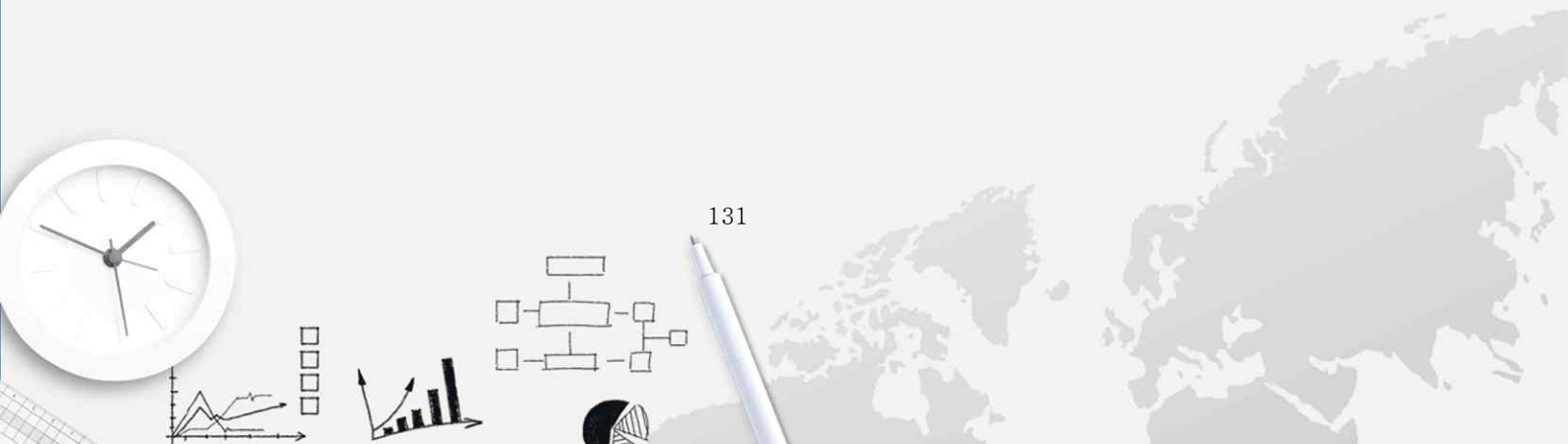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를 강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본인의 찬반 의견을 피력하시오. (120분)

참고

강의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찬성 논거로 신형 벤처 기업과 벤처 생태계를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측면을 제시하였고, 가능한 반대 논거로 M&A의 긍정적 기능과 회사법상의 1주 1표 원리를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각각 차등의결권을 창업자에게만 제한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재벌 대기업은 현실적으로 1주 1표 원리를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반론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차등의결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파악하고 수강생 본인의 입장을 수립해보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혁신 성장과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읽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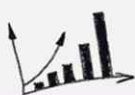
김소영, 2019, 「소득주도 성장 논란과 향후 방향」, 『경제논집』58-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과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읽어 보시오.

Lee, Keun, 2019, 『The Art of Economic Catch-up』, Cambridge Univ Press

- 기업경쟁에 의한 혁신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읽어 보시오.

남길남, 2019, 『차등의결권 논쟁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브라이언버로, 존 헬리어 저/이경식 역, 2020, 『문 앞의 야만인들』, 부키





동영상

- 강의에선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대마불사가 금융 부분의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영화를 시청하여 보시오.

「Too big to fail」(Curtis Hanson감독, 2011년 작)

- 강의에서는 벤처 생태계 형성과 금융 혁신의 예로 토스(toss)를 들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 이루어진 규제 탈피와 핀테크의 혁신과정과 관련하여 토스에서 제작한 아래의 영상을 시청해 보시오.

「토스다큐멘터리 | FINTECH - BEHIND THE SIMPLICITY」
<https://www.youtube.com/watch?v=AuMyGHuxvOM>

기타

- 강의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혁신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를 읽어 보시오.

「야누스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딜레마」(『법률신문』 2021.11.08)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Content/Info?serial=174051>

